

인권정보자료실  
R1.1.14


# 인권하루소식

합본 14호  
(2000년 1월 ~ 6월)

인권하루소식

합본 14호  
2000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4

  
인천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중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천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7일(금)

제 152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노동단체 참여한 산재위 신설

### 근로복지공단, 고 이상관 유족에 사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고 이상관 씨의 자살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는 이상관 씨 죽음에 대해 공개사과와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고 이상관 씨 공동대책위원회'가 거리농성을 시작한지 1백55일만에 이뤄진 성과다. <관련기사 본지 99년 12월 29일자 참조>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30일 "이상관 씨의 자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 씨의 유족들에게 공단노조가 모금한 3천만원 등 위로금 3천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이상관 씨 투쟁과 관련해 구속된 김학기(서울산재노동자협의회 감사), 장상환(전해투 위원장) 씨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담당재판부에 보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공익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각 단체 대표 1인이 참여하는 5인의 '산재보험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IMF이후 산재노동자의 요양을 제한하고 강제 퇴원시켜온 근로복지공단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이후 공단개혁과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틀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내용이 당초 공대위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이상관 씨의 자살에 대해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주장해왔으나 위로금에 그쳐, 공대위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개선위원회의 관련해서도 공대위가 주장했던 '중앙과 각 지방에 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공대위의 주영미 부장은 "중앙보다는 각 지역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며 그 처리과정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각 지방에 개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이상관(당시 27세, 대우 국민차사업부) 씨는 98년 작업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통원치료를 통보하자 이를 비판해 지난해 6월 자살했다.

#### 새로운 책

###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사람생각 펴냄/ 512쪽/ 1만5천원

빈곤이나 실업, 무주택 등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나 '팔자'로 돌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극한적인 생존권의 위기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로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책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다운 삶의 조건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내맡길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로서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절한 소득과 노동, 휴식, 문화생활 등이 들어간다. 더욱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고착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권을 우리 삶에 뿌리내려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모두 1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사회권'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1부 잊혀진 약속, 사회권을 찾아'에서는 사회권의 개념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의 도전에 대해 말한다. 이어 제2, 3부에서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노동권', '사회보장의 권리',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 조건이라는 시각에서 짚고 있다. 제4부는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통해 사회권의 현실을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마냥 미뤄져온 문화·과학기술·환경 분야에 대한 인권적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이 책을 위해 많은 이들이 필자로 참여했다. 필자들은 이 책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부른 것일 수 있도록 돕는 촉매제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머리맡에 남기고 있다.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사람생각 (02-3675-409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98년 11월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교도소측이 배 씨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상규명 작업이 벽에 부딪힌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지난해 4월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배 씨의 복역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전주교도소장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된 상태다. <편집자 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사건 : 99구 1089  
 피고 : 전주교도소장  
 원고 : 문만식  
 주문 : 정보비공개결정 중 일부(8개항)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중략)  
 다. 판단

(중략) (2) (나) 정보공개법 제 7조 제 1항 제 4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현대사회에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법 제3조가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법 제7조가 예외적인 공개제한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도주하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등 형을 집행하거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요구하는 위 정보들은 위 망인의 개인에 관한 신상자료이거나 위 망인의 사망에 관련하여 그 원인을 조사한 자료일 뿐이고 교도소의 경비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형의 집행,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위 정보들 중에서 법 제7조 제1항 제 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위 비공개대상 부분을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과 비공개대상부분을 분리하여,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정보들 전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1999. 12. 28  
 재판장 판사 김경일  
 판사 박대준 판사 차문호

**기아특수강 해고자 복직  
 재능교육도 정상근무**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기아특수강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재능교육 교사노조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군산 기아특수강측은 지난해 12월 30일 해고노동자들과 △정리해고자 8명에 대한 재고용 △재고용 시 정리해고 전 경력 인정 △복직전 임시 취업 앞 선 △농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일제 취하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98년 정리해고된 기아특수강 노동자 10명은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4백57일 동안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도 해고노동자 이재현, 조성욱 씨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아 투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판 노비문서로 불리는 위탁계약서 폐지 등을 내걸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재능교육교사노조(위원장 김수박)도 지난해 12월 30일 회사측과 합의를 이뤄내 3일부터 정상 근무 중.

노조와 회사는 △관리 예치금 폐지 △파업 중 해고된 노동자 9명 복직 △교통비 지급 등에 우선 합의했다.

김태인 노조 대외협력 팀장은 “앞으로 위탁계약서 세부내용 등을 단체협상을 통해 바꿔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개를 판결한 자료들**

1. 망 배재문의 재소기간 중 신분장부, 수용자 명부, 징벌부, 만기력부, 사망장 등 신상에 관한 모든 기록된 자료, 사건 후 소송 도중 작성한 사건기록일지, 사건현장 사진, 필름
2. 1998. 11. 19. 법정소란 후 재판장에 의하여 퇴정된 후 귀소하여 면담한 담당담당자의 이름, 직책, 면담내용 및 면담기록
3. 1998. 11. 19 과 같은 달 20.의 의료일지, 식단표
4. 1998. 11. 20 목맨 망 배재문을 최초로 발견한 시간, 직원, 상황
5. 거실개방에 참여한 직원들의 신상
6. 망 배재문이 목맨 위치의 바다에서 철창의 끈을 맨 곳까지의 높이
7. 망 배재문을 병원으로 옮긴 직원들의 이름과 시간, 사망시간
8. 망 배재문의 가족에게 사망을 통보한 직원, 통보내용, 시간, 횟수 끝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8일(토)

제 153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한창 일할 40세에 청년이라니**

**골프장 캐디 “우리는 일하고 싶다”**

최근 한 골프장이 여성 경기보조원들(캐디)의 조기 퇴직을 종용해 ‘성차별적 조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화국제개발 소속 프라자컨트리클럽(대표 김종성)은 올 1월 1일부터 경기보조원 7명에 대해 40세 청년 규정을 내세워 해고했다. 청년대상자들은 평균 10년 이상 캐디로 근무해왔지만, 회사측은 “서비스직이므로 나이가 중요하며 통상적인 관례”라는 이유로 해고를 강행했다.

그러나 청년 규정에 걸려 해고된 김 아무개(40) 씨는 “다른 골프장에서는 40세 청년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골프장만 40세 청년을 고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경기보조원들의 불만이 크지만 해고위협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 가입사실조차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프라자컨트리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는 모두 2백40여명이며, 이 가운데 조기에 퇴직하게 된 7명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이 지난해 12월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최상림)에 가입한 상태다.

**10년 근속자 여전히 일용직**

이와 관련,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회사측에 △정년규정 폐지 △업무배당 차별 금지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10년 이상 근무해온 직원들을 일용직 노동자로 취급하며 업무종료 명단을 게재했을 뿐 적법한 해고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해고자들에게 퇴직금조차 주지 않았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합리적 이유 없

이 다른 직종보다 청년이 낮은데다, 남성 노동자의 정년이 57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에게만 40세 정년을 강제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지난 4일 여성특별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타 골프장, 정년연장 추세**

한편 다른 골프장의 경우엔 이미 40세 이상의 근무가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88컨트리클럽은 40세 정년을 철회했으며, 대둔산컨트리클럽도 노조가 결성되면서 해고가 유보된 바 있다. 또한 노동부에서도 캐디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부산컨트리클럽이 여성노동자를 기혼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과 관련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바 있다. 유성컨트리클럽의 경우는 캐디들도 일반 직원 노조에 함께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노사는 47세로 정년을 상향조정하고 육체적 정신적 지장이 없는 한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산재보험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상을 맺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최순임(38) 씨는 “캐디들은 골프장의 노동강도가 등산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이들은 손님들로부터 인격모독까지 당하면서도 깨끗하게 참고 생활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국장은 “단 하루를 일해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사람대우 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아니냐”며 “비공식적으로 노조에 참여하는 캐디가 많아 노동조건 개선은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라자컨트리클럽의 해고자 김 씨 등 6명은 매일 사무실로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 가혹행위 있었다”**

**민혁당 김영환 씨 법정진술**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영환(36) 씨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측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법정진술했다. 김 씨는 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하영욱(민혁당 사건 관련 구속기소중) 씨의 6차 공판에서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이었으며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물리적 폭력이 가해졌다”며 “국정원의 초기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도 거른 채 군대식 기합을 받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하영욱(36) 씨의 변호인은 하 씨가 국정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6주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 씨는 앞선 재판에서 “국정원 수사 당시 약물이 담긴 드링크류를 마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약물에 의한 수사기관의 자백강요 의혹은 92년 사노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백태웅 씨와 96년 국보법상 회합통신죄로 구속된 진관스님에 의해 제기된 바 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가족들마저 출입이 거부된 상태에서 열려 비난을 샀다. 재판부는 법정소란을 이유로 방청을 제한했으며 이에 따라 가족과 방청객 30여명은 법정 진입을 위해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검찰 벽에 막힌 인권고발

## 부랑인시설 자강원에 면죄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행위를 시정 하려는 한 시민의 노력이 검찰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지난해 9월 전 자강원 대표이사 노재 중 씨 등을 특수감금 및 강제노역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이대식(39, 대전 시 동구) 씨는 7일 대전지방법검찰청으로부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 씨 등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내용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이 씨는 지난 92년부터 93년까지 약 1년간 자강원에 구금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씨의 고소내용과 관련해 "노 씨가 이 씨를 불법감금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소명자료가 부족해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려야했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 씨가 이 씨의 부친에게 임금을 정산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이 씨의 부친이 사망한 상태로 사실확인이 어렵고 당시 장부가 파기된 상태여서 이 씨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노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나아가 이 씨가 강제구금된 사실을 알고서도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해 구금을 정당화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경찰공무원 송인출 씨에 대한 범죄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송 씨에 대한 범죄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자강원에서 받은 인권침해로 평생 불구로 살게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강원에 대한 실상을 밝히기는커녕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다"며 분개했다. 따라서 이 씨는 고소결과에 대해 항고하는 등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대전에 위치한 자강원은 98년 양지마을에서의 인권유린 행위와 관련해 구속돼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노재중 씨가 운영하던 또 다른 부랑인수용시설이다.

### 민중대회 구속자 10명

앞으로도 늘어날 듯

지난해 12월 2차 민중대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농민과 학생 4명 외에도 현재까지 6명이 더 구속돼 민중대회 관련 구속자가 총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본지 99년 12월 14일자 참조).

검찰은 사진체증을 통해 '몽둥이 소지여부'를 가려 박종진(전라남도 고흥), 양은석(충남 아산), 박진오(강원도 정선) 씨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전국농민총연맹 연사국장 최인기 씨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이외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 씨 등 지도부와 농민 등 26명도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또한 2차 민중대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던 학생들의 경우도 현재 6명이 구속된 상

태다. 민가협은 최정규(대구효성가톨릭대), 김덕진(명지대), 주경범(서울대), 한선범(서울대), 곽상욱(순천향대), 강석현(외국어대) 씨 등이 구속중이라고 밝혔다.

민가협의 이상희(31) 간사는 "현재 불구속 입건된 학생 수는 확인되지 않고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학생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속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자진출두 수배자 3명 구속

15명 기소유예, 24명 미출두

지난해 말 농성을 정리하고 검찰에 자진출두한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단장 오창규) 가운데 오창규(93년 남총련 의장) 씨등 모두 3명이 구속됐다(관련기사 본지 99년 12월 21일자 참조).

현재까지 총 정치수배자 42명중 18명이 자진출두했으며, 이들중 오 씨 등 3명을 제외한 15명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구속된 오창규 씨와 유병문(96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씨는 광주지역 경찰서에 수감돼있고, 최태진(96년 남총련의장)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전국연합 인권부장 최영욱 씨는 "현재 최태진 씨의 기소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검찰은 아직 자진출두하지 않은 수배자중 진재영(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씨와 유영일(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 씨 등 3명을 더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 행사의 동정

- ◇ 민주열사 박종철 13주기 추모행사
  - 묘지 참배: 1월 9일(일) 낮 12시 마석묘지
  - 추모식: 1월 14일(금) 오후 3시 서울대 박종철열사 기념비
  - 주최: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02-576-8260)
-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겨울 강좌
  - 때: 1월 10일(월) 7시부터 · 곳: 서울 종로구 민예총 강당
  - 주최: 민예총 (02-739-6854)
- ◇ 제주 4·3특별법 제정 경과 보고대회
  - 때: 1월 15일(토) 오후 3시 · 곳: 서울 종로성당 2층 강당
  - 주최: 제주 4·3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밀린 구두료 청산을**  
체납액이 많은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문의: 이창조)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11일(화)

제 1531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 2천년 현재 양심수 111명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3.9%

지난해 12월 31일 사면으로 비전향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가 풀려남에 따라 장기복역(7년 이상) 양심수는 사라졌다. 그러나 장기수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1백여명이 넘는 양심수들은 감옥안에서 새천년을 맞이해야했다.

2000년 1월 1일 현재 감옥에 남아있는 양심수는 모두 1백11명으로 이 가운데 형을 확정받아 복역중인 사람은 29명. 나머지 82명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상태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밝힌 양심수 현황에 따르면 이들 중 73.9%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돼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양심수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신분별로는 대학생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야운동가와 노동자 출신의 양심수도 꾸준히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다수 구속자가 대학생

민가협은 또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는 모두 1천1백88명에 달했으며 99년 한해만도 4백74명의 양심수가 만들어졌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의 양심수를 적용법규별로 분류하면 국가보안법에 의

한 구속자의 수가 단연 우위를 차지해 전체 양심수의 56%이상이나 됐으며 업무방해(23.9%)와 집시법(20.9%) 위반 등에 의한 구속자 수도 많았다. 또한 신분별로는 대학생 양심수(54.2%)가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구속자의 수가 많은데 비해 양심수의 수가 적은 것은 경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고집함에 따라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라며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현정부 하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양심수는 계속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해설>

####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 문제의 가장 큰 변화는 장기수의 석방이다. 이는 인권단체의 오랜 요구였다. 그러나 장기수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단기 복역 양심수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2년간 양산된 구속자 수는 모두 1천1백88명으로 이렇게 많은 구속자 현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복역자 수가 적은 것은 대부분의 구속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그중 대다수(56%, 6백72명)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인데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 현황(적용법규별 분류)					
국가보안법	집시법	업무방해	특공, 공방	남북교류	도로교통법
672명	249명	284명	61명	2명	1명
56.56%	20.95%	23.9%	5.13%	0.17%	0.084%

이는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보다는 경미한 표현이나 조직 활동마저 억압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민가협 조사결과 현정권 하에서 발생한 시국관련 구속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패·비리사범에겐 관대한 정권이 유독 대학생들에게만 억압적인 까닭은 결국 학생운동 세력을 말살하겠다는 정권의 의사가 반증된 것이다.

민가협 발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구속자 수가 이전 정권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이후 일반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지만 정권이 노동자의 지도부를 구속시키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낳았다(2년간 3백55명). 따라서 노동자들의 과업권과 업무방해에 대한 재해석이 내려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구속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주요공판안내

- ▶ 1월 13일(목)
  - 김경환(전 <말> 기자), 국가보안법, 오전10시, 서울지법 319호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 ▶ 1월 14일(금)
  - 하영욱,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 장성환(전해투위원장), 불법집회, 오전 10시, 남부지원 2호실
  - 지난해 11월 20일 '산재노동자 고이상관 사인규명 집회'를 불법집회로 이끌었다는 혐의로 구속

인 권 시 평

### 새로운 세기의 되새김질하기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새천년'이란 말에 이제는 귀가 아프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새천년 타령이 새해 연휴에는 정점에 달했다. 신문과 방송은 물론, 심지어 연말 세일광고마저 새천년맛이 특집이었다. 새 시대에는 새로워지겠다는 선언과 새로워질 것이라는 기대에 시비를 걸 생각은 전혀 없었다. 한편에서 자꾸 걸리는 것은 '지금'도 엄연히 진행중인 문제가 2천년대로 진입하면 해결될 것같이 법썩떠는 모습들이다. 새천년의 '희망선언'에 맞추어 덩달아 들떠지지 않는 것이 미안스러울 정도이다. 그 법썩거림이 공허해 보아니 난들 어쩔 수 없다.

누군가는 지난 세기를 전쟁, 냉전 그리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끔찍했던 세월'이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얼마전 한 신문의 1999년 현재 세계의 3분의 1인 65개국이 분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 기사를 보면, 그 끔찍한 일은 과거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인 것이다.

냉혹한 적자생존과 정글의 법칙으로 비판되는 지난 세기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또한 새로운 세기의 진행형임이 분명하다. 세계 2억 5천여명의 어린이들이 성과 노동의 착취상태로 내몰려 있는 상황도 새천년에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할 있는 문제이다. 지난해말 국제투명성기구(CPI)가 발표한 부패지수를 보면 정치인, 공무원들의 부패정도는 해마다 악화되어 우리나라가 85개 조사국중 43위로 떨어진 현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숙제이다.

우리가 떠맡아야 할 벅찬 숙제를 눈앞에 두고 더욱 필요한 것은 '인간의 권리'를 되새김질 하는 것일게다. 지난 세기에서 인간이 이룬 가장 큰 진보는 바로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조건에 대한 발견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권을 화두로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갈등과 편견, 차별의 현장에서 맞서 싸우고, 연대해왔다. 지난 20세기는 어느 세기보다도 가장 많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를 위해 가장 분주하게 움직였던 시대였다. 그래서 이룬 것도 많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뤄야 할 것이 산적하다.

인간으로 살 권리는 새시대에도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평화의 문화'해이다.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도 채택되었다. 선언의 첫 항목은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의 삶과 존엄성을 존중한다'이다. 선언의 내용은 이전의 것들과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 사실상 달라져야 할 것은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 권리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숙제이고 화두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주간인권흐름

(99년 12월 29일-2000년 1월 11일)

#### 1. 아직도 양심수 1백명

남과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던 신광수(69), 손성모(70)씨 출소/양심수 111명 아직 감옥에 (99/12/31)

#### 2. 농성은 끝났지만...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가족, 국회 앞 천막농성 해산 (99/12/30)

#### 3. 배일 벗는 학살의 진실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던 정치범 등 수형자 1천8백여명이 총살된 사건의 비밀문서와 사진 공개 (00/1/6) /미 공군, 한국전쟁때 충북 단양의 동굴에 숨어있던 피난민 3백여명을 폭격과 기총소사로 살해했고 용인에서도 피난민 20-30명씩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99/12/29)

#### 4. 본색 드러낸 미 주둔군

주한미군, 파주 기지내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철수한 후 한국군에게는 녹장 통보, 파주시 다음날에야 주민대피시켜 (00/01/05)

#### 5. 표보다 못한 남녀평등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정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회의, 가산점제 존속기로 (00/01/06)

#### 6. 일용직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부, 일용직 채용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임금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시행에 들어가 (00/01/03)

#### 7. 일하기엔 너무 늙은 40세?

프라자컨트리클럽, 10년 이상 일해온 40세 여성 캐디들에 대해 '서비스직이므로 나이가 중요하다'며 해고 (00/01/01)

#### 8. 죽어서 이룬 산재 감시의 꿈

'산재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산재보험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설하기로 (99/12/30)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12일(수)

제 153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벗어나기 힘든 성차별 굴레

### 임신평직 압력...비정규직 전환 강요

"18년 근속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받았어요... 여직원들만 계약직으로 강제 전환시키고 있어요... 임신 후에도 퇴사를 안하니깐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발령을 냈어요."

지난 한해 동안에도 상당수의 여성노동자들이 체불임금과 부당해고 등으로 고통을 겪어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대표 이철순, 한여노협)는 서울, 울산 등 8개 지역 '평화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 결

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평화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은 총 1천3백여 건이며, 상담을 의뢰한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직업은 골프장 캐디,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이었다. 이들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98년 약 28%에서 99년 32%로 증가했으며, 상담자의 65% 이상이 기혼자였다.

조사결과,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문제는 임금체불(504건, 53%)과 고용불안(236건, 25%)이었으며, 특히 성차별적 부당해고 문제가 여전히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여노협은 성차별적인 부당해고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해고, 일방적인 해고통보 등이 많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임신·출산과 관련한 퇴직압력과 비정규직으로의 강제전환 압력이 다른 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여노협의 왕인순 사무국장은 "법정 출산휴가는 유급 2개월이지만, 실제 5주로 시행하거나 외근근무로 전환시키는 경우 또는 무급휴직 등으로 변칙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더구나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는 출산휴가 없이 사직을 강요하거나 아예 출산휴가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 근절의지 안보여

한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9%)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총 85건의 상담 중 육체적 성희롱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 성희롱이 31건, 시각적 성희롱이 5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상사(50건), 사장(24건), 동료(6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69건이나 돼 직장내 성희롱 방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인순 사무국장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노동관련 행정직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이후 사회권실태 보고서  
『인간답게 살 권리』  
· 가격: 1만5천원  
· 구입문의: 이주영 (02-741-5363)  
사람생각 (02-3675-4096)

## "미군은 주둔할 자격없다"

### 파주사태 관련, 미국 규탄시위 열려

지난 4일 '파주 미군부대 폭파설'과 관련해 미군이 보여준 태도로 인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 국민행동'은 11일 오후 2시 서울 미대사관 인근 재보험빌딩 앞에서 파주사태에 대한 미군의 태도를 비난하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흥근수 목사와 최중수 신부, 고 조중필(미군에 의해 살해된 흥익대생)씨의 어머니, 익산양민화살대책위원회, 학생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집회에서 흥근수 목사는 "미군부대 주변 1킬로미터를 폭발으로 만들 수 있는 폭탄이 설치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미군은 군인과 군속, 장비를 대피시킨 뒤 7시간이 지난 후에야 한국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심지어 대피시

교통혼잡을 우려해 한국경찰에게 교통정리까지 요구했다"며 "미군이 대한민국의 주둔할 이유는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이어 "파주사태는 미군의 실수가 아니라 한국인은 몇 십만명, 몇 백만명이 죽어도 좋다는 일관된 미군의 정책을 보여준다"며 "이런 한미공조체제는 단연코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양민화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이창근 씨는 "50년 7월 11일 미군폭격기 2대가 이리역 상공을 순회한 후 수십발의 폭격을 가해 양민과 기관사 등 1백30여명이 살해됐다"며 "파주사태는 미군에 의한 제2의 양민화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미대사관에 양민화살과 파주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재판장 김능한 부장판사)은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에게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박경순, 김창현, 방석수 씨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중 8명(정대연, 임동식, 이철현, 김성란, 김용규, 천병태, 이정희, 이희)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다. 이은미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판결요지(편집자주).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대법원 판결을 이 법원(고등법원)이 깰 수 없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들이 '영남위원회'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는지, 그것이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인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찬양, 고무, 동조했는지 하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들이 '영남위원회'라는 단체의 간부로 활동했거나 가입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검찰이 김영환, 하영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을 했고, 김영환이 검찰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박경순 휘하의 울산지역위원회 또는 영남위원회의 조직원이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 그 진술과 사건의 여러 증거를 간접적으로 비교해보면 김영환의 얘기대로 피고인들 중 몇 명이 조직원이 아닐까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영환의 검찰진술은 하영욱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또는 '하영욱에 의하면' 등이고 하영욱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부분에 관해서 모두 부인을 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원진술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의 주요한 증거로 제시한 박경순의 디스켓은 그것이 박경순의 것이라는 것 또는 그가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김영환의 압수 디스켓과 하영욱의 압수된 디스켓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여러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중 일부가 '영남위원회'와 어떤 형태로든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영남위원회' 구성, 가입에 관해서는 공소사실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

영남위 사건 주요 구속자 구형 및 선고 형량						
	박경순	김창현	방석수	정대연	임동식	이철현
검찰구형	무기	8년	7년	12년	12년	7년
1심 선고	15년	7년	5년	8년	9년	4년
2심 선고	7년	2년	3년	4년	4년	2년
대법원 선고	확정	확정	확정	파기	파기	파기
파기환송심				1년6월	1년	무죄

###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영남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되었다가 완전무죄로 석방된 천병태(38) 씨와 영남위 사건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천 씨는 95년 울산시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하는가?

▲ 네 번의 재판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도감청에 대한 판결도 진보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애당초부터 그러한 물건들은 증거능력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1, 2심에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였다. 디스켓을 누가 제작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번 판결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릴 수 있는 당연한 판결이다.

실형이 확정된 방석수 씨는 민주노동당 가입시 이력서를 썼는데, 그것이 박경순 씨의 집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적단체 가입죄가 적용돼 3년 실형을 받았고, 정대연 씨는 「자주의 길」이라는 책 하나 때문에 징역 1년6개월(이적표현물 제작 혐의)의 실형을 받았다.

△ 영남위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 우리가 이 땅의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만나 얘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죄일 수 없으며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우리가 구속된 때는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파업이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로 구속자 대부분을 비롯해 노동운동단체, 구청장 등이 파업에 앞장선 상태였다. 당시 파업은 정리해고가 가능하나 가능할 수 없냐를 승부짓는 기로였다. 왜 하필 그때였는지는 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 반제청년동맹, 민족민주혁명당의 관련 여부는?

▲ 처음엔 우리를 조선노동당(반국가단체)이라고 하더니 다음은 반제청년동맹(반국가단체), 그 다음엔 영남위(반국가단체)로 지칭했다. 그리고 2심 때는 동창회(이적단체)로 바꾸더니 이제는 민혁당 산하조직으로 몰아가는 것만 보아도 이 사건의 조작성이 드러난다.

△ 수사과정은 어떠했는가?

▲ 당시 수사관들은 동료가 시인했다는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자백을 권유했고, 가족들을 들먹거리며 진술을 유도했다. 당시 들었던 폭설과 폭언은 이루다 말할 수도 없다. 또 국가보안법의 경우 수사기한이 50일로 돼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했는데 부모들이 다 구속된 경우 아이들이 고아신세가 된 상태도 많았다. 예를 들면 박경순 씨의 아들은 우울증으로 인해 시력이 많이 나빠진 상태다.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는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13일(목)

제 153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오만한 미국, 학살범죄 오리발 진상규명 거부...유족 등 반발 거세

"억울한 사람을 죽여놓고서 지난 50년간 모른 채 한 것만으로도 오장육부가 뒤집힐 일인데 이제는 조사마저 못 하겠다니요, 세상천지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노근리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위해 방한 중인 루이스 칼데라 미국 육군부 장관이 노근리 외 지역에 대해 진상조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힘에 따라 희생자 유족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50년 7월 이리역 미군 폭격 사건으로 부친을 잃은 '이리역 희생자 유족회' 회장 김대규(원광대) 교수는 "고의든 고의가 아닌 양민학살이 진행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며 "똑같은 양민학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노근리 외에 다른 지역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개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하는 것은 물론 유족들에 대한 공식사과와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무차별 총격에 의해 주민 74명이 학살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곡안리 학살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이만순 위원장도 미국의 조사 중단 발표에 분노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이 조사를 중단한다면 미국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과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인권침해 전면대응 준비

11일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어이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민학살대책위원회, SOFA개정 국민행동, 전국연합 등 9개 사회단체는 12일 오후 회의를 갖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현재 미국측 입장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분개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 뿐 아니라 고엽제 문제, 파주 폭발물 사태 등과 관련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빠른 시일내에 미국에 의한 한국인 인권침해에 대한 전국적인 연대기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익산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양민학살사건 진상해결 익산시민대책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주한미대사관이 노근리 사건을 처리한 후 나머지 양민학

살 사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조사하겠다고 대책위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말았다"며 "미국은 당장 파렴치한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마산지역 양민학살 대책위도 "미국이 양민학살 조사에 나설 때까지 미 클린턴 대통령과 미 국방부 장관 앞으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 "한국정부 발벗고 나서라"

시민사회단체는 또 한국정부에도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상도 일대에서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구 울산자치 시민모임'의 배종진 사무국장은 "미국이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면 당연히 한국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한국 국민의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자료> 양민학살대책위가 밝힌 미군의 양민학살 실태 전국 37개 지역서 최소 3천여명 학살

1월 현재 국방부에 접수된 양민학살지역은 모두 37곳,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민학살대책위원회는 최소 3천여명(99년 12월 말 현재)의 무고한 양민들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학살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민학살대책위원회가 밝힌 미군의 양민학살 실태다.

△경기도 풍덕천리 30명 사망 △경기도 평택 1백명 사망 △충북 단양 영춘리 3백명 사망 △충북 단양 노동리 5백명 사망 △충남 서천 30명 사망 △대전 사기막골 마을 50명 사망 △경북 구미 형곡동 1백명 사망 △경북 김천 연봉리 수십명 사망 △경북 철곡 외관교 3백명 사망 △경북 고령 독성교 수십명 사망 △경북 문경 석봉리 86명 사망 △경북 예천 산성리 50명 사망, 90명 부상 △경북 예천 감천면 26명 사망, 20명 부상 △경북 의성 17명 사망 △경남 마산 곡안마을 74명 사망 △경남 마산 진북 3명 사망 △경남 사천 60명 사망 △경남 의령 30명 사망, 30명 부상 △경남 함안 1백명 사망 △경남 창녕 80명 사망 △경남 하동 양정골 12명 사망 △포항 북구 북송리 40명 사망 △포항 북구 송라면 16명 사망 △울릉도 150명 사망 △전북 익산 이리역사 1백명 사망 △전남 광주 두산마을 수십명 사망

### “이주노동자에게도 문화적 권리를” 안산지역, ‘국경없는 마을’ 준비

국내에 체류중인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5년 계획으로 ‘국경없는 마을’을 준비하고 있다. ‘국경 없는 노동, 인권, 평화, 공동체’의 이상을 내걸고 있는 ‘국경없는 마을’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노동자도 생활인으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반월공단이 위치한 안산지역은 90년대 중반이후 한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채워 왔으며, 현재 3천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역주변에 자국의 전통음식점을 개업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음식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모임장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박천용 목사는 “주말이면 갈 곳이 없어 역주변을 배회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노동권의 보장 못지 않게 생활인으로서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인정받고 어울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목사는 “안산역 주변의 외국인전통음식점을 중심으로 조성될 국경 없는 거리는 5일장 형태로 문화공연과 물물교환 등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경없는 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단

초”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안산지역의 ‘국경 없는 거리’는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첫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임금체불에 병마까지 고용주 잠적으로 속수무책

고용주가 잠적해버려 몇년간 밀린 수백만원의 임금을 받을 길이 없어진 이주노동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부산의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 따르면 조선족 박아무개 씨는 97년 12월 입국해 투견사육장에서 일했으나 99년 2월 고용주가 잠적해버려 4백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옆천데 닷친 격으로 박 씨에게는 병마까지 찾아왔다. 잠적해버린 고용주를 찾아다니던 박 씨는 지병인 간경화가 악화돼 현재 부산대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담당의사는 박 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입원기간이 한달도 안됐지만 병원비가 7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병원비를 지불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함께 온 박 씨의 부인도 남편 간병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몽고에서 온 바타 씨의 경우 조들(가명)이라는 사람에게 고용돼 조립식 아파트전장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

고용주는 월 8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지난 2년간 월 10-30만원의 불규칙한 월급만을 지불하다 올 1월부터는 아예 연락마저 두절하며 잠적해 버렸다. 현재 바타 씨는 총 4백만원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잠적해버린 사장을 찾아다니고 있다. 또 다른 조선족 박 아무개 씨도 고용주가 잠적해버려 총 9백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의 강은경(30) 사무국장은 “노동부나 경찰에도 주한 고용주를 신고해도 기초수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주를 찾아내도 벌금만을 물게될 뿐이어서 사실상 이주노동자들 밀린 임금을 받을 길은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 원직복직 요구 단식농성 원자력병원 부당하고 시정안해

원자력병원(서울 노원구 공릉동) 노동조합 지부장 최철 씨가 해고자 원직복직, 병원장 퇴진,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12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원자력병원 노동조합 이효남 사무국장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에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20명을 원직복직시키라고 정한 바 있으나 석달이 지나도록 병원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또 “병원측이 290%로 돼있는 성과급을 현재 130%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파행적 행위와 관련해 노동조합과의 협의마저 거부하고 있는 백남선 병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지난해 5월 경영혁신이란 이름아래 7백80여명의 노동자 중 1백22명의 노동자를 해고시키려했는데 이에 원자력병원 노동조합은 ‘일방적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5월 12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병원측은 구조조정을 철회하기에 이르렀으나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등 26명을 무단결근 등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켰다. 이에 따라 해고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병원 인근에서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14일(금)

제 153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영남위사건 15명중 7명 무죄

###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현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98년 7월 구속, 기소되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관련자 대부분이 경미한 사법처리나 무죄로 석방된 채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2일자 참고>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는 13일 오후 2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재판을 열고 이은미, 홍정련, 김경희, 김병호 씨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들 4명이 영남위원회에 가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이들 전원을 무죄 판결한다”고 밝혔다.

1년 반 동안의 수감생활 끝에 비로소 풀려난 울산여성회 대표 이은미(36) 씨는 “이로써 영남위원회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 밝혀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씨는 “아무런 죄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며 “그러한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국가보안법이 정말 일반 사람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 똑똑히 배우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씨는 석방된 동료들과 함께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위 구속자 최종 선고 결과

△이적단체 구성죄 - 박경순(실형 7년), 김창현(·2년), 방석수(·3년)

△이적표현물 제작 - 정대연(실형 1년 6월)  
△이적표현물 소지 - 임동진(실형 1년), 이희, 김성란, 이정희(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 - 이은미, 홍정련, 김경희, 김병호, 천병태, 이철현, 김용규

### 민혁명당 김경환 10년 구형

####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소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명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김경환(37, 전 말지 기자)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지난 10년 동안 반체정동맹, 민혁명당, 조선노동당 등에 가입해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남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해왔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명백한 범죄 행위임으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씨는 민혁당의 실체를 인정했으나 민혁명당이 97년, 초기의 노선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믿고 따른 주체사상 등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념의 문제로 법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사상이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들 속에서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 인권간행물판매 ◎

「인간답게 살 권리」 IMF이후 사회권실태 보고서 - 값 1만5천원

「인권교육길잡이」 - 값 9천원

「한국감옥의 현실」 - 값 1만5천원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 값 8천원

자료모음집 「법과 인권」 - 값 1만원

유엔인권제도 자료집 「유엔과 인권」 - 값 5천원

- 구입 문의 : 02-741-5363 -



# '무노조' 삼성에 파업으로 맞선 보광

## 노조 파업 45일... 시축 노조 전문파괴자 고용

무노조 신화를 자랑해온 삼성그룹이 계열사 노조파괴 공작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삼성계열사 보광(사장 홍석규)의 노조원들은 지난해 11월 30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4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14일 서울로 상경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상경한 조합원 20여명은 현재 보광 본사가 있는 삼성동 글라스타워 로비에서 농성중이며, 일부는 보광의 최대

주주인 홍석현 씨가 사장인 증암일보사 앞에서 매일 집회를 갖고 있다.

보광노조(위원장 조광의)는 지난해 8월 전체 노동자 1백20여명 중 1백7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정식 출범했으나 회사측의 극심한 탄압으로 조합원의 반 이상이 출범 한 달도 안돼 탈퇴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당시 회사측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탈퇴를 종용한 것은 물론 삼성그룹의 노조전문 파괴자인 전기상 씨와 김용태 씨를 고용해 구사대를 만들게 한 후 조합원들과의 폭력사태를 유도했

다. 또 4명에 불과하던 경비 수를 35명으로 늘리고 공장 정문을 철문으로 바꾸기도 했다.

조광의 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기는커녕 손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사내에 유인물 한 장을 뿌리려해도 사측이 광고 도장을 받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의 김교준 조직부장 역시 "구사대가 조합원들이 자고 있는 천막을 짓밟아버려 조합원들이 기절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에 분개한 노동자들이 구사대를 뒤쫓아 가며 사무실 유리를 깨자 이를 문제삼아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장은 "홍 사장이 파업현장에 내려와 '나는 이 공장이 없어서도 먹고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위협하는 등 사태해결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보광은 텔레비전 브라운관 안의 '글라스로드'라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전세계 글라스로드의 46%를 생산하고 있어, 최근의 경제위기에도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유로 복지수당과 상여금 등을 대폭 삭감하고 향후 3년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해 노동자의 심한 반발을 사왔다.

#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청와대 민원실과 컴퓨터 통신에 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려 구속된 강미영(31,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고법 합의1부는 13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씨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강 씨의 석방운동을 벌여온 '인터넷 정론지 - 대자보'의 이창근 편집국장은 "강 씨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강 씨의 구속과 유죄 선고는 우리사회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각인시켜 주었다"고 평하고 "제 2, 제 3의 강미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있는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씨는 지난 1심 선고공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해설> 강 씨는 지난해 2월 청와대와 법무부 민원실 등 컴퓨터 통신에 '주객을 전도시킨 한심한 검사, 이를 본 가족의 112 신고'라는 글을 게재해 자신의 어머니가 인천지검의 검사들에게 편파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통신 기사판에 올라온 강 씨의 글은 네티즌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각 통신사에는 이 글과 관련된 토론방이 속속 생겨났다. 특히 넷츠고에 개설된 토론방에는 한달간 1만6천여명이상이 접속해 개설취지문을 읽었으며 강 씨의 주장과 관련해 올라온 글만 4천여 건에 이르는 등 네티즌의 접속이 폭주했다. 이 기록은 우리나라 통신사상 단일 주제로 개설된 토론방 으로서는 참가인원 및 접속 횟수에 있어 최대 기록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검찰은 지난해 3월 18일 강 씨를 참고인 조사라는 이유로 소환해 긴급구속시켰다. 임신 3개월의 강 씨가 구속되자 네티즌들은 '패썬죄의 적용'이라며 검찰 행위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나아가 검찰의 행위가 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후 네티즌들은 '강미영 씨 무죄석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년여간 활동해왔다. 한편 강 씨는 구속 중 아기를 자연유산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 <거짓말>, 표현의 자유 침해로 등급외전용관 설치 시급

영화 <거짓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인들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화인회의는 12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거짓말>을 사법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난 세기 자행된 '정치 검열'의 악몽을 '문화 검열'로 되풀이 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영화평론가 심영섭 씨 역시 "검찰의 수사 착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또 다시 영화에 대한 검열을 부활시키고 있다"며 "<거짓말> 같이 등급이 문제되는 영화의 경우에는 등급외전용관을 설치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화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15일(토)

제 153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 피의자 "죄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최근 한 신문사가 경찰이 진행중인 조지폭력배 소탕 1백일 작전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지적한데 이어 현재 안양 청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돼 있는 청소년 20여명도 비슷한 주장하고 있어 경찰의 조지폭력배 단속과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이모(송파구 방이동, 16) 군은 "후배들과 군고구마 장사를 같이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는 함께한 후배들의 돈을 내가 갈취했다는 진술서를 꾸며놓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군과 함께 구속된 정모(15) 군의 아버지도 "제작년에 발생했던 폭력과 관련해 아들을 구속했다"며 "이미 학내에서 처벌을 받고 학교까지 옮겼다"며 억울해했다. 정 씨는 "학교에서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지만, 경찰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아들을 무리하게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중앙경찰서 강력 1반에서 수사를 받은 구리중학교 학생 6명의 부모들도 수사과정에서 형사 등의 가혹행위를 주장했다.

장모 군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김모 군을 곤봉으로 때렸고 머리를 맞은 학생들은 다반사였으며, 함께 동행했던 학생과 장마저 학생들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 "2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반까지 잠도 재우지않은채 아이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사에 참여했던 중앙경찰서 강력1반 담당자는 "폭력행위는 없었지만, 한정된 수사시간에 쫓기다보니 밤샘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 밤샘조사 시인

한편 차모 군은 98년도에 친구와 취객을 때려 돈을 빼앗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를 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경찰에 구속됐다. 당일 면회를 갔다왔던 차군의 아버지는 "벌정하게 나갔던 아이가 경찰에게 맞아서 얼굴과 다리가 통통 부었고 지금도 목을 돌리지 못한다"며 "법을 어겨 잡아갔다면 법에 의해 처리해야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이 애를 그렇게 때려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경찰이 포상과 승진에 집착한 나머지 실적을 만들어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지폭력 단속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 사회단체, 국정원 고발

## 민혁당, 불법수사·명예훼손 혐의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하영옥(39) 씨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에 의해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을 고발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등 2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소위 민혁당 조직 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저지대책위'는 14일 "하영옥 씨가 수사당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약물복용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영환 씨 역시 진술과정에서 구타와 기합 등 불법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은 물론 현 국정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혁당 사건이 아직 재판계류중인 미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하영옥 씨와 김영환 씨 등에 대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책자를 만들어 보급했다"며 위 사실과 관련해 국정원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접수시켰다.

# 행사와 동정

- ◇ 제주 4·3특별법 제정 경과 보고대회
  - 때: 1월 15일(토) 오후 3시 · 곳: 서울 종로성당 2층 강당
  - 주최: 제주 4·3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02-757-4843)
- ◇ 낙선운동과 표현의 자유
  - 때: 1월 18일(화) 오후 2시 · 곳: 프레스센터 11층
  - 주최: 2000년 총선시민연대 (02-732-7077)
- ◇ 제2기 학부모 지도자 파견
  - 때: 1월 19일(수) 오전 11시 · 곳: 부천교육연대
  - 참가대상: 학교운영위원회에 올바로 참가하고 싶은 학부모들
  - 주최: 부천교육연대 (032-654-0405)

<논평>

#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은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구속자 15명 중 단 3명만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엔 민선 구청장이 포함돼있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인 98년 7월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정치성이 짙은 조작사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철저한 증거 확보에 의한 과학수사의 개가라고 자찬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조직명만 해도 조선노동당 하부조직, 반제청년동맹, 동창회 등으로 네 번이나 바뀌었고, 심지어 검찰은 반국가단체 혐의를 이적단체로 혐의로 공소변경하기도 했다. 수년에 걸친 불법 도청과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한 사생활 침해, 변조된 디스켓, 북한동포돕기운동마저 이적활동으로 둔갑시킨 것 등은 계속 무리한 법적용과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

최종 확정판결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된 이 사건에서 공안사건에서도 심증과 자백만이 아닌 명확한 증거가 요구된다는 점, 또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관행에 책임을 박았다는 점 등은 높이 평가될 만한 부분이다. 이는 공안사건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법원조차도 증거주의 원칙을 채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권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 15명 중 3명에 대해서 이유없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인정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주범들 쟁이서 강령도, 규약도, 조직원도 없는 이적단체를 만들었다는 점을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결국 이 사건은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낳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리하게 조작사건이라도 만들어내는 근거인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인권적 요구의 정당성을 극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다. 그 자체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는 국가보안법을 두고는 제2, 제3의 영남위원회 사건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 피노체트 석방, 문제 있다

### 국제 엠네스티 비판성명

국제엠네스티는 12일 피노체트의 석방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피노체트에 대한 의학적 견해와 진단서들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그의 석방 여부가 밀실에서 정치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비난했다.

국제엠네스티는 "범죄자라도 누구든지 독립적인 의료검진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으나 그가 재판중이라면 이러한 검진이 관련자들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석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영국의 무분별한 행위로 정의가 평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제 엠네스티는 피노체트의 석방은 의료검사의 공개적 재실시

와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법부가 그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릴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총련 이적혐의 못 벗어

### 1심 무죄판결 2심에서 뒤엎혀

6기 한총련의 이적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졌다. 대전고법 형사 합의부(재판장 조대현)는 14일 열린 한총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직과 강령, 그 활동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한총련은 이적단체임이 분명하다"며 "피고인 전원이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으므로 한총련

이라는 이적단체 가입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이들은 모두 과학기술대 학생으로 이들은 검찰에 의해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학내에서 또 다른 이적단체인 '자주대오'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판결됨에 따라 이들에겐 1심에서 인정된 '자주대오' 구성 가입죄 이외에 형이 추가됐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문경환(96년 총학생회 학자주장, 97년 대전총련 간부) 씨는 실형 3년을,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양정은(96년 총학생회 선전국장, 97년 대전총련 간부) 씨는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임현준(98년 총학생회 조직국장) 씨 등 3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 상용노조, 종로구와 극적 타결

### 자치단체 노동자, 권리보장 미흡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위원장 이동엽)이 14일 종로구와의 협상에서 △정년 59세로 통일 △산재보험 가입 △노조전임자 인정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등에 대한 타결을 봤다.

상용직노동자들은 구청 등 전국의 자치단체에 고용돼 도로관리나 하수관리, 공원녹지관리, 사무보조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초과 근무를 일상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로 간주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일요일이나, 생리휴가, 노동절에도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정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서 구조구청은 하강(57) 씨 등 3명을 강제로 퇴직조치했으며, 노원구청도 이춘자(56) 씨 등 6명에 대해 퇴직통보를 한 바 있다.

이렇게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조건에서 일해왔던 상용직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재 서울지역상용직노조에는 8백여명의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18일(화)

제 153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과주 폭발물 소동 그 이후>

# “미군은 우방이 아니었다”

“전쟁이 따로 없다. 그날 일을 생각만하면 가슴이 떨리고 분노가 치민다”, “미군이 없으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군이 떠나야 한다”,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으니...”

16일, 새천년을 미군기지폭발설로 맞은 과주시 영태 5리 주민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이다. 주한미군기지에 폭발물이 매설됐다는 첩보로 인해 난데없는 대피소동을 겪었던 주민들은 지금도 분을 사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주민들의 대피는 시에서 준비했어야 할 대피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예상 폭발시간인 새벽 2시를 훨씬 넘긴 새벽 3시까지 계속됐다. 또한 미군이 위험지역이라고 밝힌 기지 밖 500m 인근에 위치한 크라운베이크리 공장은 노동자들이 불을 밝힌 채 작업중이었다는 증언도 있다.

주민들은 “미군이 자신들만 먼저 빠져나가고 우리를 내버려둔 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군과

과주시도 첩보입수 이후 주민대피책을 세우지 않은 채 주민들을 방치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 “미군에 대한 문제제기 겁나”

사건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 내에서는 기지이전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미군주둔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걱정과 정부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나서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는 체념 어린 생각 때문이었다.

한편 지난 14일 에드워드기지 제 2사단장은 월롱면 주민 31명을 기지내 만찬에 초대해 사태경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군은 “한미공조체제가 잘 이뤄졌다. 불필요한 인원이 철수했을 뿐 수색을 위한 잔류군이 있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유탄탱크 이전과 정신적 피해 보상은 이

후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영태리 주민들은 “주민이 없는 한미공조체제가 무슨 소용이냐”며 심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영태5리 이장 이아무개 씨는 “지금 우리가 과주시에 가서 데모를 해야하는지 미군 앞에 가서 데모를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이번 일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때문에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다면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사건이 한바탕 소동으로 무마되고 있지만, 영태리 주민들에게는 미군이 우방으로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준 계기가 되고 있다

## 보스니아 내전 전범실형

### 국제엠네스티, “정의 향한 진전”

지난 14일 국제사법재판소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이슬람교도 1백여명을 집단 학살한 크로아티아계 전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국제엠네스티는 당일 성명을 내고 “학살과 관련해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피해왔는데 이러한 때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참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정의를 향한 진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크로아티아계 민병대 대장급들로 아미에이 마을에 거주하던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인종청소’를 명령했다. 이 가운데는 여성과 아동들도 대거 포함돼있어 재판관을 실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장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성이 가장 사악하게 드러난 사건 중의 하나”라고 평한 바 있다.

## 주요공판안내

- ▶ 1월 18일(화)
  - 나창순, 박기수, 강형구, 서원철, 이성우, 황해로 - 국가보안법,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속행
  - : 99년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에 참가한 후 방북
- ▶ 1월 20일(목)
  - 전지윤 - 국가보안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320호, 석방
  - : 국제사회주의자 사건으로 99년 4월에 구속
- ▶ 1월 21일(금)
  - 하여욱 -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결심
  -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 김학기 - 집시법, 오후 2시 서울남부지원 1호실
  - : 99년 11월 ‘산재노동자 고이상관 사인규명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

### “알아서 그만두라는 메시지”

전북대 병원 간호사 부당 전환 배치

전북대병원이 새로운 간호사를 노조와 협의없이 계약적으로 뽑고 15년 가까이 근무한 주임 간호사들을 일방적으로 전환배치해 3교대를 강요함으로써 간호사들과 노동조합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대병원은 거의 10년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외래환자 담당 주임간호사들을 근무조건이 열악한 병동으로 옮기고 대신 계약직 신규간호사로 그 자리를 대치하는 내용의 근무부서 이동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29일 비상간호사모임을 갖고 “병원측의 이러한 처사는 월급이 많고 중고참 간호사를 근무조건이 열악한 병동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두게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으로 판단한다”고 말하고 이를 막기 위해 서명운동과 집회 등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비상간호사모임 (대표 한혜경 주임간호사)과 노동조합(위원장 이봉남)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 1명이 보살피는 환자수의 차이에 따라 환자진료비중 ‘간호관리료 차등지급방침’으로 간호인력 충원이 불가피해전 전북대병원측이 ‘계약직을 뽑을 때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야한다’는 단체협약도 무시해 가면서 30여명의 간호사를 모두 계약직으로 뽑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신규채용 인력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10년 넘게 일한 중견 간호사들을 더 열악한 근무지로 배치하는 등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전환배치를 강행했다”고 말하고 “이는 월급이 많은 고참 정규직 간호사들을 서서히 몰아내고 그 빈자리를 계약직으로 채워넣기 위한 알뜰한 구조조정의 시작이며 병원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간호사 직에만 그치지 않고 전직종으로 확산될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판정한 간호사 1명당 환자수에 따른 등급제에 의하면 전북대병원은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등급인 6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 방침에 의하면 간호사 1명이 보살피는 환자수가 적을 수록 등급이 높고 이 등급의 차이에 따라 병원마다 청구할 수 있는 간호관리료가 달라지게 된다. 이에따라 전북대병원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신규 간호사채용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한편 비상간호사모임과 노동조합은 17일 현재 병원측과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 부당한 전환배치 취소 등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제공 : 전북 <평화와 인권>

####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하루소식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오늘(1월 18일)자 하루소식 발송이 늦어진 것에 대해  
독자 여러분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매주 화요일자에 게재됐던 ‘인권시평’이 필자  
사정으로 인해 한주 쉽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2000년 1월 18일)

- 1. 정치, 이제 우리가 만든다**  
412개 시민사회단체, 정치인에 대한 낙천과 낙선운동은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며 총선연대 발족시켜 (12일), 총선연대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가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
- 2. 초라 (?) 해진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종결되면서 구속자 15명중 7명이 무죄로 석방돼 (1/13)... 법원이 ‘이들이 ‘영남위원회’에 가입했다는 뚜렷한 증거없다’고 판결 하자 관련자들은 “조작된 사건인 만큼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 3. 뻔뻔한 ‘세계의 경찰’, 자국과오 모른 척**  
미국의 노근리 양민학살 대책단이 “노근리 외 지역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겠다”며 진상규명을 거부 (1/11) 하고 나서자 유족들 반발 거세/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주민 1백여명이 사망한 충남 단양 고개굴 사건의 유족들, 정부와 미국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돌입 (1/10)
- 4. 고문 공소시효, 누가 이기나 해보자**  
검찰이 이근안 고문 사건 피해자 함주명 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민변 변호사들 항고 (1/11)
- 5. 합의 없는 임금삭감 무효**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 “사측이 임금삭감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임금삭감 결정은 무효”라며 “회사(동부생명)는 깎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해 (1/13)
- 6. 조선일보에 당할 수만은 없다**  
서울지하철노조, 지난해 파업 당시 “농성중인 조합원들이 감금상태에 놓여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조선일보가 게재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제기 (1/13)
- 7. 학살의 만행, 러시아에도**  
1930년대 후반 스탈린 정권에 의해 고려인 1천여명이 학살된 것으로 확인돼 (1/16)
- 8. 국정원 제버릇 남주나**  
사회단체, 국정원이 민혁당 사건 관련자들에게 약물을 복용시키고 구타와 기합을 일삼는 등 수사과정에서 불법수사가 자행됐다고 국정원장 등을 고발 (1/14)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19일(수)

제 153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군포시, 역주변 노점 싸움이

### 철거용역 상주... 노점상 생계위협

지난 15일 노점상 최근복(44) 씨가 계속되는 노점단속으로 생계를 잃고 괴로워하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 노점상과 철거민 등 도시빈민들의 저항이 거세다.

18일 오후 2시 전국노점상연합과 전국철거민연합은 최 씨가 노점을 하던 군포시 산본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최근 군포시가 벌이고 있는 대규모 노점단속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는 울산, 진주 등에서 최 씨의 소식을 듣고 상경한 노점상 등을 비롯해 6백

여 명이 참가했다. 군포시는 지난해 7월 산본역 앞을 노점제대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후 무차별 단속을 실시, 그해 12월 8일까지 전경과 철거용역 등 1천5백여명을 동원해 대규모 노점상 철거를 강행한 바 있다. 또한 현재까지 산본역 주변에 무정용역 소속 철거원 20여 명을 24시간 상주시키면서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산본역 주변에서 노점을 하던 노점상들은 모두 생계를 잃은 채 겨울을 나고 있는 실정이다.

산본역 앞에서 노점을 하다 쫓겨났다는 김순란 씨는 “싸움이 철거이후 역 주변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철거용역들은 물건을 발로차고 60이 넘는 노인들의 머리채를 끌고 다녔다”며 “무리한 노점단속이 강행되는 한 제2, 제3의 최근복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6년부터 산본역 앞에서 노점을 해오던 최 씨도 지난해 7월 단속이후 불면증과 화병으로 시달리면서 과음을 해왔다. 최 씨는 지난 5일 산본역 앞 중심상가 지역에서 노점을 다시 시작하려다 단속반과의 심한 몸싸움이 발생해 부상을 당했으며 이후 불면증과 과음으로 시달리다 15일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 대규모 노점 단속에 빼앗긴 희망

이에 대해 전국민연합의 양연수 의장은 “노점상 최 씨가 비명에 갔다”며 “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어야할 희망을 군포시에서 깎아버림으로써 최 씨를 벼랑으로 몰고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전국철거민연합의 양해동 씨도 “경기가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는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역과 군포역에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노숙자가 가득하다”며 “정말 먹고살 것이 없어 노점을 나오는 사람들은 막으면서 벼랑점이 도로를 막고 장사를 하는 것은 왜 단속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산본역 주변을 행진한 뒤 김윤주 군포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시청 앞에 집결했으나 5백여명의 전경들이 군포시청을 에워싸고 이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전경들은 이 과정에서 노점상들을 향해 방망이와 방패를 휘둘렀는데 이에 집회 참가자 2명은 이마가 깨지는 부상을 입기도했다.

## 비정규직 피뺏아먹는 적십자사

### 5년 근속이유로 해고, 법정 수당 지급 안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은 올해 1월 1일자로 5년 이상 간호사와 헌혈권장원으로 일해온 계약직 노동자 15명을 해고했다. 동부혈액원은 ‘근속년수 5년차 이상자로서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라는 해고기준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최일숙 변호사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며 “근속년수가 5년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측이 주장한 근무성적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공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들 해고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주휴, 월차, 연차 등 법정 휴가가 없고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수경 노무사 역시 “주 15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 월차, 연차 등의 법정휴가는 물론 이에 대한 수당지급은 당연한 일”이라며 “적십자사의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조와 해고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대한적십자사는 “동부혈액원을 실시한 후 부당해고임이 밝혀질 경우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정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동부혈액원 해고노동자 노필남 씨 등 14명은 매일 아침 노원구 동부혈액원으로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인 낙천, 낙선운동 등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는 선거법 87조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정보학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개 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총선연대 대변인인 장원(녹색연대 사무처장) 씨를 비롯해 교수와 법조인, 언론인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선거법 87조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를 발췌한 것이다.

### ■ 박형상 변호사

선거는 민주적 정치여론을 정확히 수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정치사회 현상을 정확히 아는 자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사표현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선거 시 개인 및 단체의 의사표현을 봉쇄해서는 안된다. 이는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현재와 같이 의견표현의 일반적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보도매체가 언론기업의 독과점 현상 또는 국가권력의 간섭에 의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적 기능으로서 사회단체의 역할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 ■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우리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며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란 기본적으로 매스 미디어의 자유가 아닌 국민의 자유를 뜻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

롭게 표현할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표현에 있어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지 않는다.

국민은 개인적인 청구나 언론보도, 또는 시민단체의 공개에 의해 제약없이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지닌다. 이러한 알권리에 대한 제약은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단체와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 ■ 87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이 불법행위라고 해석한 것과 관련해 18일,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거법 87조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성명에서 "선거법 87조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 및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세계에 유례없는 악법으로써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자신의 기득권에 안주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적 의사형성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 심판을 촉구하며 결성된 총선연대도 성명을 내고 "선거법 87조는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경시시키고 정치, 사회적 민주화를 방해하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의 발로"라며 87조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 ■ 해설 - 선거법 87조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87조 (가)는 "단체는 사단 재단 또는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 그 명칭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

합은 그러지 아니한다"며 노조를 제외한 일반단체의 선거개입을 금하고 있다. 이는 94년, 현재 여당인 국회의가 당시 여당(한나라당)에 제의해 개정된 내용으로 새마을운동본부, 자유총연맹 등 관련단체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 SOFA, 한번 해보자

### 국민행동, 팩스시위 벌여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촉구하며 팩스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에 소속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3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지난 11일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비롯해 외무부와 미대사관 등에 SOFA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팩스를 매일 발송하고 있다.

18일로 8일째를 맞이하는 이번 팩스시위는 오는 3월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들은 팩스시위를 모든 사회단체를 비롯해 정당과 교회, 개인과 시민, 외국 단체 등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이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은 "정부 역시 SOFA 개정에 동참하고 있으나 개정내용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미군범죄 등에 대한 사법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통일부 장관 면담 추진

### 복송추진위, 향후 사업논의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준)는 18일 오전 11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대표자 회의를 갖고 향후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우선 통일원 장관을 면담해 비전향 장기수들의 복송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통일원 장관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면담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오는 2월 16일에는 복송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20일(목)

제 153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노동부의 야심찬 기획안이 별다른 효과를 못 볼 것 같다.

노동부는 지난 3일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근로기준법 지침'을 마련해 전국 46개 지방관서에 시달, 시행토록 했다. 이 지침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동부는 이 지침으로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지침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이 일용직 노동자들인 건설노련은 지침 마련에 환영의사를 표하면서도 "이 지침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정말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명선 건설노련 선전홍보차장은 "건설시장의 현실상 쌍방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주와 직업 알선소 등에 매어 있는 현실"이라며 "이들이 사업주 등에게 근로기준법의 준수나 고용계약서의 작성 등을 요구한다는 것은 스스로 '일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상업연맹 역시 건설노련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해정 조직부장은 "근로기준법이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문구는 사문화된지 오래"라고 지적하고 "현재같이 비정규직 노동

자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노동부가 감독에 역점을 두지 않는다면 지침 또한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사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노사 양측에 홍보도 안해

또한 노동부가 이번 지침을 언론에 발표하고 지방관서에 하달하기는 했지만, 정작 법 적용을 받게 될 노동자나 사용자에 대한 홍보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부 근로기준과의 한 사무관은 "지침을 하부 관서에 하달하면 됐지 따로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고지할 것이 뭐가 있겠냐"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신문을 보아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청계파복에서 일하는 한 일용직 노동자는 "거의 대부분의 동료들이 이런 지침이 발표된 것조차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한들 그것을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홍보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써먹을 수 있겠냐"며 노동부의 안이한 태도를 꼬집었다.

노동부가 마련한 이번 지침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 △천재지변 등과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1일 8시간 근로, 이외 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유급 생리휴가 등의 보장 △재해보상,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 ■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란 크게 단시간노동자, 임시직(일용, 촉탁, 계약직), 파견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 수당, 보험료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불안으로 원인이 되고 있다.

### 새로운 논문

## 「여성 재소자의 인권」

2000/ 숙명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신영화/ 73쪽

'교도소의 인권수준이 그 사회의 인권수준이다'는 말에 동의를 표하는 사람이라면 '여성재소자의 인권수준은 한 사회 여성들의 인권수준을 보여준다'는 논리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감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성차별을 출소자와의 면담을 통해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연구자는 "구폐제도부터 행형법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여성차별이 교정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논문은 여성재소자가 받는 차별을 크게 남성 중심적 교정행정, 성역할 고정인 여성재소자의 업무기회 박탈, 여성재소자와 관련된 행형법 및 시행령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비판한다. 그리고 "도망갈 것을 우려해 출산과정 내내 철제침대에 수감으로 묶어놨다"는 임신부 재소자의 예를 들어 교정시설내의 여성인권이 어떠한 수준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준다. 여성재소자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여성재소자의 현실을 다룬 변변한 논문이 없다는 점에서 한번쯤 읽어 볼만하다.

# 검문 뒤 불법연행 "3백만원"

## 대학생들, 민사소송에서 승소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과 불법연행에 쫓겨 박을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23부(판사 전주혜)는 19일 오전 경찰의 불심검문 및 불법연행과 관련해 조영상(연세대 기계공학과) 씨 등 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각각 3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조 씨 등은 지난 98년 5월 30일 학교와 서울역 인근지역에서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한총련 출범식을 이유로 조 씨 등에 대한 불심검문을 실시했는데 이들이 '대학생'임이 밝혀지자 별다른 혐의점도 없으면서 경찰서로 연행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나정인(연세대 기계공학과) 씨는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았고 당시 담당 형사로부터 치욕스런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형사는 나 씨에게 학회 구성원의 이름을 대라고 강요했으며 심지어 호출기 비밀번호까지 말하도록 해 저장돼 있는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나 씨의 동의 없이 가방을 뒤지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

서울대 물리학과에 재학중인 김근혜 씨와 김진식 씨의 경우 학교 정문 앞에서 불심검문을 당하자 신분과 소속, 검문이유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검문할 것을 요구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다 강제 연행됐다. 경찰서로 끌려간 이들은 형사들과의 기나긴 실랑이 끝에 밤 11시가 넘어서야 풀려난 뒤 소송을 제기했다.

### 민간단체 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 내용 : 참여중심적 방법론을 동원한 실제적 훈련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인권교육 기법 학습
- 강사 : 류은숙,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 때 : 1월 29일(토) 오후 2시- 30일(일) 오후(1박2일)
- 곳 : 서울 시내 혹은 서울 근교(현재 협의중)
- 참가비 : 3만원(숙식, 자료집 포함)
- 참가대상 및 인원 : 각 단체 교육담당자 선착순 20명
- 접수기간 : 1월 26일(수)까지
- 접수방법 : 전화/팩스, 참가비는 접수기간까지 납부

### <성명서 요약>

## 영화 <거짓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영화 <거짓말>이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검찰은 등급분류위원회 위원들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곧 영화제작사 관련자들까지 소환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태전개와 관련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가 19일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 소개한다(편집자주).

일부 시민단체가 시민사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영화 <거짓말>에 대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유감이다. 음대협은 예술성과 음란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관계를 규정해 <거짓말>을 음란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음대협과 달리 <거짓말>을 음란물로 보지 않는다. 일부의 성도덕에 반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성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성숙된 모습이 아니며 서로의 견해차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한 사람에게 음란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욕망의 표출일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생산물이 음란성을 띤다고 해서 그것을 제작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라고 고발하는 것은 문화적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또 <거짓말>이 극장에서 상영된다는 점을 중시한다. <거짓말>은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으며, 극장에서만 상영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우리는 <거짓말>에 대한 검찰 고발과 조사는 문화예술, 성문화, 청소년문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는 지금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욕구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자아실현, 인권존중, 참여민주주의 실현, 욕망의 표출 등 억압되었던 인간적 욕구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문란으로 보일지 모르나 오히려 새로운 문화적 역량이 형성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검찰은 음대협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대응의 신속성을 보였다. 이런 대응이 과거 파시즘적 국가권력이 문화계를 황폐화시켰던 방식을 재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과 제안을 제출한다.

1. <거짓말>에 대한 검찰고발과 조사를 종식해야 한다. <거짓말>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며, 관객이 그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알 권리, 볼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2. 우리는 '음란성'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뜻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도덕성을 다 같이 존중하는 문화정책의 기본 골간을 만들기 위한 협의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21일(금)

제 153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만창

서울대학교 내의 시설관리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미치는 박봉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정규직이었던 시설관리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용역업체가 위탁관리하면서 서울대학교의 무관심과 용역업체의 잇속차리기가 가져온 결과다.

서울대는 해내 미화원과 방호원(수위) 같은 시설관리직을 지난 96년부터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의 수는 총 3백16명이다. 시설관리노동자들은 용역업체변경과 상관없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용역업체에 고용돼 있는 상태다.

매년 최저가에 낙찰을 본 용역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상쇄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입찰선정을 받은 대호안전관리공사(대표이사 조규석)는 시설관리노동자들에게 작년보다 5-7만원 낮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최복조(미화원, 49) 씨는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8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법정휴일에는 아무런 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성 미화원은 95년 47만원에서 매년 2-3만원씩 월급이 줄어 올해 40만원을 제시 받았으며, 남성미화원의 경우도 95년 55만원에서 올해 45만원을 제시받았다. 특히 올해는 근로계약서에서 연월차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99년도 법정최저수준(29만9천원)에도 못미치는 25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호측은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는 위협을 일삼고 있다.

방호직의 경우 임금총액은 97년 65만원에서 현재 53만원을 제시받았으며, 이들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야간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방호원 정 씨는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한 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이 됐으나 그때와 비교해 월급이 4배정도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못미치는 박봉

이외에도 용역업체들은 매년 첫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퇴직시 퇴직금도 지불하지 않고 각종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대호는 월급에 퇴직금을 나누어 총 3만원씩 지불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이승원 사무처장은 "3년 이상 계속근로가 증명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이며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계약직에 수습을 두는 것과 각

종수당 미지급 등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최복조 씨는 "학교는 매년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적 쌓아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들만 희생양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정아무개 씨도 "직원일 경우 소속감이 있었는데, 용역은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바로 그만둬야하는 하루살이일일에 애착도 덜 간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도 넘쳤는데 우리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며 "노조결성을 통해 우리 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경리과의 입찰담당자는 "청소나 경비업체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할 뿐 임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며 "공무원을 축소하고,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공익근무요원, 구청상대 인권투쟁

## 공무 중 상해입어도 구청은 '나몰라라'

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인 구청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인 김창주(25) 씨는 지난해 10월 계속되는 무릎 통증 끝에 병원에서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료를 담당할 강남성모 병원 정형외과측은 "순간적인 가격이나 충격에 의한 부상이 아닌 점으로 미루어볼 때 등산을 하거나 무리한 작업을 계속 하게 되면 부위에 무리를 주게 되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소견을 밝혔고 결국 김 씨는 무릎 연골 파손 부위 제거 수술을 받았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김 씨는 "발령이 후 계속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구청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청은 김 씨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했다.

구청은 17일 김 씨 앞으로 공상치료 보상요구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을 보내 "근무중 무릎 부상을 본 확실한 목격자와 사고발생 보고가 없었다"며 김 씨의 상해는 공무중 입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와 함께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한결같이 김 씨의 부상은 공무중 발생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익근무요원 정 아무개 씨는 "99년 3월부터 한달간 거의 매일 커다란 나무를 산에 끌고 올라가 심는 수목작업에 동원됐다"며 "당시 작업강도가 무척이나 쎄고 이후에도 김 씨가 이와 유사한 작업을 계속했기에 김 씨의 무릎부상은 이러한 작업에서 유래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공익근무요원 이 아무개 씨도 "지난해 5월 전 화부스를 산에 설치하는 작업을 했는데 등산코스라도 힘든 산에 전화부스를 끌고 올라가니 무릎이 성하겠다"며 "나 역시 무릎에 상당한 무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청은 또한 김 씨의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김 씨에게 공상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다른 공익근무요원에게도 공상치료비를 지급해야 함으로

현재로써는 직무상 상해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구청 공원녹지과의 안인수 과장은 "김 씨가 작업과정에서 일정 정도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김 씨의 상해를 공무상으로 인정할 경우 다른 공익요원들도 같은 요구를 하지 않겠냐"며 김 씨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속내를 털어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신분상 나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공익근무요원들과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택시 월급제, 물러설 수 없다

### 경남택시노동자 23일째 농성

전국 최초로 완전 월급제를 허용해온 한 택시회사가 느닷없이 회사를 팔아 치우자 노동자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남택시(경기도 성남시, 공동대표 김영탁) 노동자들은 20일 현재 택시 월급제 쟁취, 전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23일째 농성 중이다.

지난해 초부터 월급제를 시행해온 경남택시는 11월 회사를 정리하고 소유하고 있던 택시를 같은 지역에 있는 낙원택시(대표 김영탁)에 팔아 넘겼다. 이로써 1백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이들 중 50여명은 낙원택시 측에 택시월급제 시행과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농성에 나섰다.

전국민주택시연맹 경기도지역본부(민택노련 경기본부)의 황수영 의장은 "경남택시는 93년 이후 계속 몸집을 불려온 성남시 최대의 택시회사 중 하나로 갑작스레 회사를 정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황 의장은 이어 "공동대표인 김영탁 씨는 성남 택시사주모임의 회장이자, 동시

## 군인에게도 인권은 있다

한편 김 씨는 공상치료 보상 이외에도 98년 7월 공익근무요원으로 발령난 뒤 일해오면서 구청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청이 차비와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익근무요원들이 외부 작업시 사비를 털어서 교통비와 식사비를 해결해야 하거나 트러블에 올라타 이동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

김 씨는 "사소한 일 같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일"이라며 "군복무를 하는 사람 역시 한 개인으로써 존중받아야 하기에 이러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 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하면 된다. (02-741-5363)

에 낙원택시의 대표"라며 "택시 매각은 월급제를 없애기 위한 사주들의 음모"라고 말했다.

또한 황 의장은 보통 2천7백만원에서 3천만원에 이르는 택시가 낙원택시 측에 3백20만원에 팔린 점을 지적하면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차액이 거액 탈루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택노련 경기본부와 경남택시 해고노동자들은 국세청에 경남택시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와 국회의 지구당사를 번갈아 방문해 이러한 의혹을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택시의 한 해고노동자는 "생계문제로 당장 취직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그토록 힘들게 쟁취해낸 완전월급제를 이렇게 뺏길 순 없다"며 "낙원택시 측이 완전월급제를 실시한 후 우리 모두를 고용승계 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 택시월급제란?

현재 대부분의 택시업체가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벌어진 수입 중 일정액을 회사측에 납급한 후 남은 수입을 노동자가 임금으로 취하는 제도다. 이에 반해 택시월급제란 수입에 관계없이 임금을 정해놓고 사측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22일(토)

제 154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사건피해자 수감체위 구인

### 법정출두 안했다는 이유로

김철이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새벽 1시에 강제구인하고 그 과정에서 수감까지 체위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박미숙(40) 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 30분경, 김정색 지프차를 타고 나타난 4명의 남자들에게 강제구인됐으며, 이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4시경 은평구 서부시장 앞에서 강도를 당했으며, 현재 이 사건 피의자 감아무개 씨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미숙 씨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법원직원이라고 밝힌 남자들이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감제로 차에 태웠다"고 말했다. 또 박 씨는 "차에 탄 후 법정출두를 하지 않아서 연행됐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서울지검 서부지청 보호실에서 오전 8시까지 있었으며, 지병을 호소해도 방석하나 주지않아 담기가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오전 9시가 돼서 박 씨는 담당검사를 만나게 돼 재판이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진통제도 살수 있었다. 그러나 공판검사를 만난 후에도 박 씨의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박 씨는 "형사 피의자들과 함께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대기실에서 재판을 기다리다 3시쯤 공판검사가 '왜 여기있냐'며 포승줄을 풀어줬다"고 말했다.

영장집행검사인 김영문 검사는 "은평경찰서와 우리 사무실에서 재판사실을 여러번 알렸지만, 박미숙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피의자가 보석처리됐고, 6개월간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

다"며 "재판에 불응하는 증인을 어떻게 구인해야하는지는 연구해 볼만하지만, 구인과정은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미숙 씨는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취급을 받은 것과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공판검사를 만나기 전까지 도움을 주지않은 것, 새벽에 강제연행된 것 등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잘잡못을 꼭 따지겠다"고 밝혔다.

### 농업 관료들 망언 유행

#### 농협회장 "돈 없는 농민 없다"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무시한 채 농업행정의 책임자들의 망언이 이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높다.

지난 연말 농림부장관이 수입쇠고기를 사먹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12일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정대근 씨가 "이제 돈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며 "1백16개 조합이 비료, 농약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농(의장 정광훈,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1일 성명서를 내 "현재 농민들은 30조에 달하는 빚에 짓눌리고 있으며, 연대보증피해로 인해 연쇄파산하고 자살까지 하고 있으며 빚을 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농협은 농민조합원 재산에 가입류, 경매처분을 하고있으며, 농민들은 영농자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대근 중앙회장처럼 허위 보고를 일삼으며 자리지키기에 급급한 관료들 때문에 농업은 몰락하고 농민들은 파탄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농의 대외협력국장은 "비료와 농약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실"이라고 일축하며, "금권선거 속에 선출된 농협 중앙회장은 농민들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농민들은 차라리 최근 외환위기 이후 40%나 인상된 비료가격과 농약값을 인하하고 농협차원의 부채경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행사와 동정

- ◇ 희망을 여는 노동문화 박람회
  - 때 : 1월 23일(일) 오후 1시-7시
  - 곳 : 연세대학교 대강당, 학생회관, 상경대 로비 등
  - 주최 :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준비위원회 (02-323-8963), 연대총학생회
- ◇ 특별검시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 때 : 1월 24일(월) 오후 2시
  - 곳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3)
- ◇ 제1기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 때 : 1월 29일(토) 오후 2시-30일
  - 곳 : 안양 전진상 사회복지관
  -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 02-741-5363)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21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는 오는 10월 실시를 앞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의 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70여명의 민간단체 실업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자활사업'이란 자립적 경제활동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날 토론회 내용 중에서 허선(순천향대) 교수가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쟁점'이라는 발제를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최근 다쳐온 경제위기는 누구나 실업자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생각이 확산됐다. 그러나 정부가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 공공근로와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등의 도입으로 임시방편적 자세를 보이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결국 지난해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라는 성과를 내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은 △기초생활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규정돼 있고 △노동능력 여부, 연령 등에 상관없이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얻는 가구는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핵심 쟁점 · 수급자 선정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높는데 반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이 낮은 것은 실제 부양능력이 없는 2촌 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지정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으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기준을 엉터리로 산출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1인 가구건 10인 가구건 똑같은 액수의 생활보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실제적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수급자로 지정해야하며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해야 한다. 또한 부당한 수급자 탈락을 구제하기 위해 제 3의 중재 기관이 설치돼야한다.

· 급여  
급여의 지급은 '먹고 살만큼'이 아닌 최소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돼야하며, 자활급여 역시 지급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이어야 한다.  
· 행정체계  
현 사회복지전문요원은 1인당 2백가구를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자산조사와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많은 전문요원이 충원돼야한다. 또한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정보 인프라를 읍면까지 확대시키고 행정부서간의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예산  
정부는 빠른 경기회복 등을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을 99년보다 9%나 줄여둔 선에서 책정했다. 또한 불합리한 현행 생활보호제도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저소득가구가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책정된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다.

〈인터뷰〉 차미경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베트남학살대책위 구성된다

베트남 전쟁 당시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 의혹과 관련해 국내 사회·인권단체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 배상을 촉구하는 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대책위 구성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인권과 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의 차미경(38) 사무국장을 만나봤다.

■ 대책위 구성을 먼저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미군에 의해 아무 죄도 없는 양민들이 무차별 학살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 양민을 학살했다는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제 피해자로서의 인권침해만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로 진상규명에 나서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과해야할 때다.

■ 대책위 결성 작업은 어디까지 진척돼 있나?  
오는 28일 국제민주연대와 나와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회·인권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경우 사실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베트남전에서 발생한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아는 경우는 극히 소수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대국민 캠페인을 하고 있다.

■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는 기본이며, 이를 위해 다음주부터 국제 평화·인권단체에 지지를 구하는 성명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한국군)의 증언을 모아 UN에 민간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ASEM회의시 정부각료회의 의제로 이 문제를 상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시아에서 벌어진 학살의 증언과 피해자, 유족들을 모아 '아시아 학살 희생자와 함께 하는 위령제'를 한국에서 개최할 구상도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25일(화)

제 154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씨 자서전 집필 좌초

감옥내 재소자의 집필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외국인노동자인권옹호모임'(대표 정귀순)에 따르면 "부산주례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선족 전재천 씨에게서 매달 서너통의 편지를 받고 있는데, 전 씨는 안부를 묻는 내용 이외에 자신의 성장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체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정귀순 대표는 "전씨의 사례를 통해 중국 조선족들의 일반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편지를 모으고 있었으나, 구치소 측에서 그의 글과 편지를 압수해 구상 자체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 씨는 98년 법무부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려 했으나 구치소

로부터 여러번 저지당하자 출소자를 통해 이를 내보낸 사실이 발각돼 일주일간 징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교무과는 "전 씨의 경우 자신의 성장과정을 쓰면서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기술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우려가 있어 집필을 제한한 적은 있지만 편지를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교학과 이천봉 씨는 "감옥은 자유로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며 "자신의 범죄와 관련해 부담함을 주장하거나 소내 문제를 제기하려면 출소해서 집필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죄가로 인해 신체적 구금을 당하고 있는 재소자에게 집

필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반추할 기회조차 빼앗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동포인 전 씨는 1996년 페스카마호 선상관란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돼 수감중이며, 공범 백충범 씨 등 5명은 무기수로 감형돼 전주, 김해 울산 등지에 수감돼 있다.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모임은 현재 전 씨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해설〉

법무부의 '재소자 집필지침'에 따르면 소내 재소자의 모든 글은 검열의 대상이며, 자서전이나 문학작품 등의 집필은 사전에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책자로 발행될 경우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집필은 회수돼 폐기되며, 허용시에도 단 한권의 노트 소유만 인정되며, 본인이 영치를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노트 교체시 폐기하고 있다.

현재 집필할 수 없는 내용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타재소자와의 부정연락 △교정직원이나 교정집사를 저해하는 내용 △수용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실제운영에서는 규제사항과 관련 없는 집필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규제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교도소나 구치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주요공판안내

- ▶ 1월 27일 (목)
  - 하영옥-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고 공판
- ▶ 1월 28일 (금)
  - 송계호-가석방취소처분취소소송,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202호
  -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8.15특사로 출소했으나 준법서약서 폐지 집회에 참석한 이유로 재수감됨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매일 차디찬 독거실 냉방에 앉아 얼빠진 사람처럼 벽만 바라보며 고독함을 달랠 길이 없어 철창에 기대어 서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의 삶을 저주하며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부산 주례구치소에 수감된 전재천 씨와 같이 매일밤 형장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사형수는 현재 약 5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97년 12월 30일로 24명이 사형집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97년 사형집행 이후 8명이 감형됐고 현 정권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재건(국민회의) 씨 등 여·야 국회의원 91명은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으로 하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5대 정기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법안이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엠네스티 한국지부측은 "현재 형법 외에도 백가지 이상되는 각종 특별법이나 균형법, 국가보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을 삭제해 나가야 하며, 국가와 민간단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권리조약이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현재 총 105개국에서 사형을 금지하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권  
시평

### 음란물은 처벌의 대상인가?

강내희 (중앙대 교수)

최근 영화 <거짓말>에 대해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위원회>(음대협)가 음란물 제작과 유포를 이유로 제작 관련자와 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청소년성문화대책위원회>는 이 영화는 상업적 포르노물이며 10대 매춘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영화 <거짓말>은 음란물일까? 그리고 음란물로 취급되는 예술작품을 제작하고 유포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아직 <거짓말> 영화를 보지 않았다. 따라서 <거짓말>이 음란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생각이 없지는 않다. 나는 설령 <거짓말>이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음란성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주변에서 <거짓말>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아도 그런 것 같다. 어떤 이는 <거짓말>이 포르노라고 하는 반면, 어떤 이는 그렇지 않다고 하며, 예술작품이라고 한다. 음대협과 청소년성문화대책위는 이 영화가 음란물이라 규정하지만 <거짓말>을 제작한 '신씨네' 관련자들은 비엔나영화제 경쟁부문 본선에 진출한 예술작품임을 내세워 그런 규정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같은 영화를 본 사람들 가운데 의견의 차이가 있으며, 입장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이 음란물로도 규정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음란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작품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면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좀더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사람들은 음란물을 제작해서 유포해서는 안 되는가, 모든 문화생산자들은 음란물 제작을 중단한다는 "양심선언"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즉 음란물 제작은 범죄행위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음란물을 제작하고 감상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음란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 같은 잡지들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하드코어 포르노영상물이 버젓이 유통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오해를 막기 위해 미리 고백하자면 나는 성문화와 관련하여 매우 보수적인 취향을 지닌 사람이다. 마조히스트도 사디스트도 아니며, 개방된 성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엄격한 취향을 지니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성적 태도를 취하라는 것은 다른 일이다. <거짓말>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성적 취향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반인권적 태도라고 본다.

###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 1. 불붙는 낙선운동

김 대통령, 선거법 87조 폐지 등 선거법 재협상 지시 (1/17) 법조계, 학계, 노동계 낙선운동 지시 표명, 선관위, 87조 개정안 국회 제출기로...대학가 낙선운동 동참선언 (1/20)

#### 2. 노조 민주화에 청신호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무제), "철도노조 대의원 선출시 간접적인 선출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판결 (1/17)...이에 따라 철도, 체신, 전력 노조 등 대규모 노조 민주화에 적잖은 영향 기대됨

#### 3. 거리로 나선 결식어린이들

결식어린이 80여명, 방학과 공휴일에 급식지원을 못 받는 결식아동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평화행진 벌여 (1/18)...교육부, 올해 초중고생 16만4천명에게 점심 제공기로(1/19)

#### 4. 승리한 "양심"

전직 원로 교수들의 전일행적을 거론했다가 곧바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울대 미대 김민수(39) 교수, 복지 요구소송에서 승소...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교수 재임용 심사시, 임용권자는 재임용신청자가 어떤 이유로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 (1/18)

#### 5. 지키려 온 게 아니라 망치려 왔군

전북 군산시 옥서면 미 공군기지, 하루 3천톤에 이르는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바다와 갯벌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지만, 당국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단속이나 점검 권한이 없다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

#### 6. 노예신분을 떨쳐라

프로야구 선수들, 구단과 한국프로야구연맹의 강한 방해공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창립총회 개최 (1/21)

#### 7. 무노조신화? 알고보니 폭력신화

삼성SDI, 노조를 결성하려는 직원들을 억류하고 회유·협박해 노조 결성을 저지한 사실 드러나 (1/24)

#### <수치로 본 인권> 실업자 다시 1백만명

통계청, '99년 1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12월 실업자수가 11월의 97만1천명보다 6만9천명이 늘어난 104만명이라고 발표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26일(수)

제 154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얼어죽어도 대안은 없다”

### 의왕시 내손동 주민들 길거리로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돼 갈 곳 없는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택지개발 지구에서는 효자건설이 고용한 경기환경 용역이 철거민들의 천막마저 강제 철거한 뒤 불을 질러 철거민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다. 주민 최국자(40) 씨는 "용역 20여명이 오전 7시 30분경 들이닥쳐 천막 안에 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천막과 선전물들을 다 뜯어내더니 불을 놓았다"고 밝혔다.

용역들에게 폭행까지 당한 주민들은 곧바로 의왕시청으로 달려가 항의농성을 벌였지만 의왕시(시장 강상섭) 측은 이들을 강제로 쫓아냈다. 그 과정에서 임신 7개월째인 주민 신영희 씨가 배를 다쳐 현재 한림대병원에서 입원중이며, 한기열 씨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신혜철(48) 씨는 "오후 10시경 시청 앞에서 바람이라도 막으려고 비닐을 치려고 하자 용역과 직원 2백여 명이 철문을 밀며 우리를 장작불 쪽으로 내몰았다"며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개했다. 그는 또 "직원 대여섯명이 몰려와 한사람씩 집중구타를 하면서 시청 안으로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민 등 4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주민들과 학생들은 "용역들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강제가 따로 없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의왕시청 개발과 이태용 과장은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를 바늘로 찌르고, 돌과 불태우던 장작까지 던져서 직원들이 화상까지 입었다"고 항변

했다. 또 의왕시청 측은 "용역은 있지만 철거민은 50여명이 시청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왕시청 직원과 경비 등 10여 명은 철거민들의 시청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주민들은 화장실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밥을 담을 그릇조차 다 박살나고 빼앗긴 상태여서 컵라면 용기를 그릇으로 활용해 쓰고

있으며, 시청 앞에서 비닐도 치지 못한 채 스티로폼과 담요에만 의지한 채 농성중이다. 또한 주민들은 "용역들에게 맞아 병원에 실려가도 어디에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은 병원측에서는 철거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원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철거민들은 돈을 준다고 해도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는 신세"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철거민들을 대하는 의왕시측의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되고 있다. 강상섭 의왕시장은 철거가 시작된 초기부터 "법대로 할 뿐 주민이 얼어죽어도 아무 대안이 없다"는 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새로운 논문

###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2000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최정기/ 205쪽

철저한 고립과 감시, 일상화된 폭력 속에서 몇십년간을 감옥안에서 살아야 했던 '사상범'들의 수형생활을 감옥체제의 변화와 함께 조망한 논문이 나왔다. 이제까지 사상범에 대한 연구가 법적 제도적 접근 또는, 그들에 대한 처우의 열악함과 부당함을 이유로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하는 수준에 머물렀던데 비해, 이 논문은 교정당국의 일상적 통제에 대한 사상범들의 대응형태에 주목하면서 그 속에서 변화된 감옥체제를 연구한다.

연구자는 "감옥체제는 감옥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힘이 작용하면서 변화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논리를 빌리면, 1950년대 형무소에서는 별 문제없이 이뤄졌던 징벌이나 폭력사용이 1990년대의 교도소에 서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일면 수형자들의 저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은 사상범을 감옥체제란 힘을 빌어 통제하려 했다. 사상범을 극도로 격리시켰으며 모든 일상을 감시, 통제했다. 또한 사상전향제도를 도입해 사상범들의 정체성 파괴를 기도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공포정치를 감행했다. 이러한 통제 속에 많은 사상범들이 전향을 선택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정신이상 등에 빠져 정체성이 파괴되기도 했다. 그러나 또한 상당수는 열악한 감옥환경에 적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옥 권력에 저항해 감옥체제를 바꾸는 역동적인 모습을 발현하기도 했다.

일반적 감옥권력의 의미로부터 △한국 사상범 감옥체제의 변화 △사상범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 방식 △사상범의 저항 등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조목조목 잘 정리된 이 논문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감옥체제와 사상범들의 수형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98년 7월. 구조조정에 맞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 울산에서는 '영남위원회' 사건과 더불어 '울산대 혁신위원회' 사건이 터져나왔다. 당시 '영남위원회' 하부조직이란 혐의로 뚜렷한 증거도 없이 울산대 학생 11명이 구속된 이 사건은 검찰 기소 시 몇 사람의 진술에 기초해 별도의 이적단체로 둔갑했다. 이후 구속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으로 지목된 황성순(29) 씨가 낸 상고를 받아들여 황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1월 12일 황 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재판을 열고 "황 씨가 '울산대 혁신위원회'에 가입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황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재판결과는 현재 2심 재판계류중인 허성규 씨 등을 비롯해 관련 구속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판결문의 간추린 내용이다.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 사건 99노733 국가보안법 위반
- 피고인: 황성순
- 검사: 이종환
- 변호인: 변호사 송철호
- 주문: 원심 파기, 피고인 무죄

(중략)

나. 피고인의 변명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그 증거능력(편집자 주 - 부분 요약)

임규섭(울산대 혁신대오) 1기 총책으로 지목돼 구속) 등이 원심법정에서 위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자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거나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해 경찰 또는 군사법경찰에서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검사

또는 군검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편집자 주 - 피고인 황성순이 울산대 혁신대오에 가입했다는 내용의 신문조서임)는 임규섭 등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한 후 서명무인하고 간인했으며 원진술자인 위 임규섭 등은 원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조서에서 그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 서명무인했다고 진술해 그 증거능력이 있다.

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의 증명력에 대하여(편집자 주 - 부분 요약)

위 임규섭 등은 검찰 또는 군검찰관 작성의 조서에서 피고인이 위 혁신위원회 결성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이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피고인이 1997년 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의 동아리연합회 및 총여학생회 단위혁신위원장이라는 위 임규섭 등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라. 결성식참가와 이적단체구성 여부 설령 피고인이 위 1997. 3. 16(편집자 주 - 울산대 혁신위원회 결성식)의 결성식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상의 이른바 이적단체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조직하려는 단체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강령이나 목표,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조직으로서의 구성 및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의 실질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결성식 이전에 "울산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는 "1997년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결성 준비모임에 피고인이 참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혁신위원회의 강령이나 목적 등의 기본성격이나 그 조직 구성 등에 관하여 모두 파악한 다음 이에 동조, 수용하여 위 결성식에 참

가하였다거나, 위 결성식 모임에 참가하여 비로소 위 단체의 성격이나 실체를 알게되고도 위 단체의 성격에 동조,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위 결성식 행사장에서의 참석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터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앞에서 배제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자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중략)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000. 1. 12

재판장 판사 김동환  
판사 이영동, 판사 강구욱

### 피노체트 재심 촉구 국제인권단체 영국법원 방문

영국이 건강상의 이유로 피노체트를 석방하겠다고 밝히자 국제앰네스티, 고문피해자들을 돌보는 의료재단, 칠레 억류·실종자 친척들의 모임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피노체트의 석방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 사람이 석방되기에 적합한 지, 법정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피노체트의 석방은 사법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오늘 영국 고등법원을 방문해 피노체트의 석방과정에서 문제가 된 의료검진 과정, 기록 비공개 등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27일(목)

제 154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범행자백을 요구하며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누명을 썼던 이모(37) 씨의 부친이 대전 동부경찰서 서중식(31), 이범재(39), 나암호(32) 형사 등 3명에 대해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형사들이 이 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 형사 등은 대전지법에서 정식재판을 받게됐다.

이 씨의 부친은 98년 이 씨가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중 혐의사실을 부인하자 서 형사 등 4명의 형사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씨의 부친은 서 형사 등이 98년 4월 3일 기동대 숙소 등에서 이 씨에게 이불을 뒤집어쓴 뒤 발바닥을 곤봉으로 때리고, 경찰서 체육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입, 코 부위를 수건으로 닦은 뒤 주전자로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형사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이 씨의 부친은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편 살인용의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 ■ 재정신청이란?

공무원의 부정행위나 가혹행위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경우, 고소 혹은

고발자가 고등법원에 사건 해결을 신청하는 절차로, 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지방법원은 사건에 대한 공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심의, 판결하게 된다.

### 서울대 비정규직노조 출범 미화원·경비원 1백여명 참여

서울대학교와 용역업체의 틈바구니 속에서 열악한 근무·고용조건에 맞서 싸움을 벌여온 서울대학교 시설관리노동자들이 드디어 노조를 건설했다. 이들은 본래 서울대에 소속된 정규직원이었으나 서울대측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해고됐고 이후 용역업체에 고용된 상태로 서울대에 근무해왔었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서울대로부터 시설관리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강요해오면서 계속 마찰을 빚어왔다 <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자 참조>.

서울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백여 명의 미화원, 경비원 등 시설관리노동자들은 25일 오전 11시 서울대 사회과학대 건물에 모여 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노조 출범을 선언했다. 초대 노조위원장은 약학대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윤기흠 씨가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총회에서 전체 노동자 3백18명중 총회에 1백여 명이 참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설립에 찬성하고 있으나 용역업체가 돈을 통한 회유와 해고 협박을 계속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이미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었다"며 "최선을 다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날까지 한자케 싸워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서울대측과 용역업체인 대호안전관리공사(대표이사 조규석)를 상대로 현재 평균 53만원(퇴직금, 근무의 수당, 교통비, 식비 등 포함)선에 불과한 임금의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과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26일 동부노동관리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 통일운동가 김양무 씨 운명 30일 고대병원 발인

일평생을 통일운동에 헌신한 통일운동가 김양무(50) 씨가 26일 새벽 1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 속에 세상을 떠났다.

97년부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해왔던 고 김양무 선생은 대학시절부터 통일운동에 투신, 그동안 4차례 구속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감옥에서 직장암을 얻어 가석방된 고 김양무 선생은 출소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벌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구속된 바 있으며, 지난해 범민족대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국가보안법 철폐, 체포영장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해 8월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전개해온 고 김양무 선생은 올해들어 병이 급속도로 악화돼 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고 김양무 선생의 발인은 오는 30일 고려대 병원 영안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구독료 납부해 주세요(불납가능)

### 동절기 강제철거 잇따라

상암동·봉천동 세입자들 몸살

최근 재개발지역에 대한 강제철거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 집권초기 "동절기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재개발지역에는 천보 용역 소속 3백여 명의 용역원이 들이닥쳐 주민들이 거주하던 생가를 모두 철거했다. 철거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병력 23개 중대를 동원해 이 지역을 완전 봉쇄함으로써 외부인의 출입까지 막았다.

이에 따라 상암동 주민과 학생 1백여 명은 이날 오후 7시경 서울시청 2층 로비를 점거한 채 항의농성에 벌였다. 주민들은 고건 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는 시청측의 약속을 믿고 자신해산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26일 오후 7시경 다시 시청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때 경찰 5백여 명이 주민들의 시청진입을 가로막았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에 때밀린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1명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학생 11명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또 봉천3동 재개발지역에서도 용역원들의 생가 철거가 진행돼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이 지역에는 25일 오후 2시경(주)다원 소속 용역 20여 명이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집의 빈방 6곳을 철거했다.

####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최근 서울·경기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철거는 아직도 "합법"을 앞세운 "폭력"과 "반인권적 행위"가 난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이 얼어죽어도 대안이 없다"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것이나, 전문 철거용역원들의 폭력만행을 멀리서 관망하기만 하는 경찰과 관련당국의 태도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이러한 폭력과 반인권 행위의 책임자임을 보여준다.

공간의 효율과 쾌적함, 투자를 목표로 한다는 재개발정책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결국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가진 자들의 치부과 없는 자들의 퇴출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철거민들의 저항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가난하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공간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처지에서 저항은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철거민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거주공간을 넓히는 것이다. 보증금 50여만원으로 새로운 주거공간을 구하기도 힘들며, 2천만원 이상의 목돈과 매달 20여만의 유지비가 드는 임대아파트의 입주도 현재로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거리로 쫓아져 나온 노숙자들의 발생원인은 무엇보다도 주택정책의 부재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정책 없이 강제철거된 도시빈민들은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긴 채 빗더미 속에서 유랑하고 있다. 집은 이들에게 생활이자 곧 생존이다. 철거민 문제를 대함에 있어 "법"의 논리보다 "인권"의 논리가 요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인터뷰> 복직투쟁 승리한 혈액원 노동자 "노동자로서의 권리 배웠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원장 이상명)의 계약직 노동자 15명이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1월 19일자). 그러나 이들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자 24일 동부혈액원은 해고자 전원을 2월부터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복직투쟁에서 승리한 해고노동자 대표 김경숙(50·간호사) 씨를 만나보았다.

#### ■ 해고사유는 무엇이었나?

원장은 5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가운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를 해고한다고 밝혔으나 근무태도 평가는 단 이틀만 실시했을 뿐이었다. 비록 우리가 계약직이지만 5년 이상 같은 일을 하면서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 온 상태라 이번 해고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 ■ 평소 근무조건은 어떠한가?

계약직노동자 대부분은 헌혈차에서 간호사나 헌혈권장원으로 일하고 있다. 매일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 교체되고 있으며, 출장도 잦은 편이다. 출장 일정이 미리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대나 종교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출장 전날 그 여부를 알려주고 있어 사실상 1년 내내 대기 상태다. 출장 여부에 따라 출근시간도 새벽 7시부터 낮 12시까지 일정하지 않은 상태로 평균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물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 ■ 해고자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나?

부당해고 철회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 경질, 미지급된 법적 수당의 지급 등을 요구했다. 현재 전원이 복직된 것 외에는 약속받은 것이 없으며, 사측은 연월차 수당 등 법적수당에 대해서는 2월말이 돼야 지급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복직 후에도 우리의 요구안을 지속적으로 관찰시켜달 생각이야.

#### ■ 투쟁에 승리한 소감은?

출근투쟁이나 피켓팅이 조금은 낯설어 속스럽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들도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번 일이 짧은 시간 내에 해결돼 다행이기는 하지만, 복직된 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1월 28일(금)

제 154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차단 안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남북어부 김성학(48, 강원도 속초) 씨 고문사건 공소유지 변호사인 백오현 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희 부장판사) 주제로 열린 이 전 경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불법감금, 독자가혹행위 등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6월을 자격정지 10년 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시효가 지난 김근태, 함주명 씨 고문사건은 인정하면서도 김성학 씨에 대한 고문사건은 대부분 부인하는 등 교활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피고인이 김씨를 수사하면서 자행한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돼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경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김 씨의 고문주장은 터무니없는 일로 사실이 규명돼야한다"고 말해 여전히 누우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 잔인한 고문 ... 해결없는 사건들

이 전 경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사건 피해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84년 일본간첩 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이장형 씨는 "이근안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것을 보면 그가 저지른 고문행위가 얼마나 잔인무도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고문사건이 한 두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공소시효를 이유로 여타의 사건을 덮어두려 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이근안을 고소했던 고문 피해자 함주명(61) 씨도 "반갑지만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함 씨는 "사람들이 이근안에 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것으로 고문 문제가 일정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내 문제를 포함해 어느 누구의 고문사건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 못지 않게 고문 배후세력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근안의 배후세력을 철저히 밝혀내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고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혁명 하영옥씨 무기구형

#### 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명)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하영옥(36세) 씨에게 검찰이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상수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을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민혁당은 직접적으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약물투여를 당했다며 하 씨 측이 지난 1월 14일 제출한 신체감청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23부는 김해근(서울대 출) 씨 등 대학생 5명이 경찰의 불법연행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를 소개한다.

서울지방법원

· 사건: 98가단287027 손해배상(기)
· 원고: 최진호, 김진식 외 3인
담당 변호사 김도형
· 피고: 대한민국
· 주문: 최진호의 청구는 기각한다
김진식 외 3인에게 각각 3백만원씩을 지급하라

1. 원고 최진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98. 5. 28. 6:30경 서울 종로 3가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중이던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전경들로부터 불법심검문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가 전경들이 신분과 소속 및 검문 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전경들에 의하여 강제로 근처 파출소로 연행당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 5백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증인 민병호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 김진식, 김해근, 조영상, 라정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중략)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원고 김진식, 김해근, 조영상, 라정인에 대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심검문 과정,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연행, 석방과정에서 비추어볼 때 전경들은 원고 김진식, 김해근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제4항, 제7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위 원고들을 불법으로 연행, 감금하였다할 것이고 또 원고 조영상, 라정인에 대하여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위반하여 임의동행과정에서 고지하여야할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을 6시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감금하였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전경들의 위와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김진식, 김해근, 조영상, 라정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중략)

라.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중략)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연행 과정에 비추어볼 때 위 원고들에 대한 연행 등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소정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주민등록증의 제시 요구 역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제1항 소정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은 이 사건 연행, 감금행위가 정당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연행 등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 차원의 격리 조치로 이루어진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중략)

3. 결론
원고 김진식 외 3인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 최진호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2000. 1. 19
판사 전주혜

철거 이어 강제연행까지
서울시장, 상암동주민 면담거부

철거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서울시가 면담약속을 두차례나 어기더니 이에 항의하던 철거민들의 강제연행을 부추겨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오후 6시경 서울시청 앞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이동수(상암철대위원장, 32) 씨 등 주민 4명은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불법시위와 해산명령불이행 혐의로 연행됐다. 이 씨 등은 25일 상암동 생가들이 싸늘이 철거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청측은 전날 약속을 어기고 시장 대신 부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가수용단지 요구도 일방적으로 묵살해 면담을 결렬했다.

행사와 동정

- ◇ 유가협 법제정 보고회
· 때: 1월 31일(월) 오후 2시 · 곳: 서울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주최: 전국민족민주유가협협의회(유가협, 02-764-1684)
◇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성차별적 조기정년에 관한 긴급토론회
· 때: 1월 31일(월) 오후 2시 30분 · 곳: 서울 종로성당 3층
· 주최: 전국여성노동조합 등(문의 02-708-4628)
◇ 〈거짓말〉 관련 시민사회단체 합동토론회
· 때: 2월 2일(수) 오후 2시 · 곳: 감동협회 시사실(남신빌딩)
· 주최: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문의 02-773-770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

2000년 1월 29일(토)

제 154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택시노동자 분신, 사실과 달라
경찰 과잉진압에 따른 화재 가능성 높아

지난 26일 경기도 동두천시청(시장 방제현) 시장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이 당초 알려졌던 '택시노동자들의 분신'이 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화재'였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고 홍성표(36) 씨 등 택시노동자 4명은 은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시장실을 점거하고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홍 씨 등은 모두 우신운수(대표 감신규) 택시노동자 출신으로 택시계의 관행인 지임제로 인해 수천만원의 빚에 시달려 왔다. 이와 관련된 피해자만도 30여명이며, 피해액은 10억에 이른다. 우신운수 택시노동자들은 장기농성 등을 시도하며 사태해결을 도모했으나 동료의 자살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사건 당일 화재와 관련, 동두천시청은 "방제현 시장은 진압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의정부 강력수사계의 자체 판단에 의한 진압이었다"고 주장하며, "오후 5시경 소방관과 경찰이 소방호수를 들고 시장실로 진입하자 시장실

안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청측은 27일 "시장실에서 농성중이던 고 홍성표 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장실에서 농성을 벌였던 한 상판(37) 씨는 "휘발유를 몸에 뿌린 것은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아무도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당시 앞쪽에 있던 홍 씨는 책상을 밀며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재 발생지인 시장과 휴게실에서 면담을 했던 정명호(36) 씨는 "시장이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현장에 있던 일부 소방관과 형사들도 이러한 사실을 유가족에게 시인했다.

또한, 동두천소방소(소장 이재훈) 화재원인 조사자는 "화재현장에서 라이터를 찾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경찰과 시청직원들의 증언에 따라 방화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장에 있던 이재훈 소장은 "밀폐된 장소에 한시간 반 이상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불이 날 수 있다"며 "5시경 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시장실로 들어가자 시장실 뒤쪽에서 불길이 나오는 것을 보고 화재진압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증거나 수사 없이 시청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정 씨는 방화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구속중이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충주 씨와 한상만 씨는 화상을 입고 서울 쌍문동 한일병원에서 입원중이다.

한편 홍 씨의 시신은 의정부 추병원에 안치중이며 유가족과 비상대책위는 시청 안에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중이다. 시청측은 경찰병력을 증강시키고 불심검문을 통해 시민들의 출입마저 제한하고 있다.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대법원이 '간첩'혐의로 복역한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법무부의 보안관찰법 적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8일 오후 93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김삼석(37)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원고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보안관찰처분을 하는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최근 보안관찰대상자들이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연이어 이기고 있는 것은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냐"며 "앞으로도 계속 부당한 보안관찰법과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와 함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이해정(25, 95년 방북사건으로 3년 복역) 씨의 경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 10월 서울고법이 내린 판결대로 보안관찰처분이 취소됐다(관련기사 99년 10월 7일자).

### <인권하루소식> 2000년 1월분 총목차 (1529-1545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529	1/7	1	노동단체 참여한 산재위 신설 - 근로복지공단, 고 이상관 유족에 사과/ <새로나온 책>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2	<관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 / 기아특수감 해고자 복직 - 재능교육도 정상근무 돌입
1530	1/8	1	한창 일할 40세에 정년이라니 - 골프장 캐디 "우리는 일하고 싶다" / "국정원 가혹행위 있었다" - 민혁당 김영환 씨 법정진술
		2	검찰 벽에 막힌 인권고발 - 부랑인시설 자강원에 면죄부/ 민중대회 구속자 10명 - 앞으로는 늘어날 듯/ 자진출두 수배자 3명 구속 - 15명 기소유예, 24명 아직 미출두
1531	1/11	1	2천년 현재 양심수 1백11명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3.9% / <주요공판안내>
		2	<인권시평> 새로운 세기의 되새김질하기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주간인권흐름 (99.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1532	1/12	1	벗어나기 힘든 성차별 굴레 - 임신퇴직 압력...비정규직 전환 강요 / "미군은 주둔할 자격 없다" - 파주사태 관련, 미국 규탄시위 열려
		2	<관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1533	1/13	1	오만한 미국, 학살범죄 오리탈 - 진상규명 거부...유족 등 반발 거세 / <자료> 양민학살대책위가 밝힌 미군의 양민학살 실태 - 전국 37개 지역서 최소 3천여명 학살
		2	"이주노동자에게도 문화적 권리를" - 안산지역, '국경없는 마을' 준비 / 임금체불에 병마까지 - 고용주 잠적으로 속수무책 / 원지복지 요구 단식농성 - 원자력병원 부당해고 시지안해
1534	1/14	1	영남위사건 15명중 7명 무죄 - 사법처리 종결...관련자, "진실 밝힐 터" / 민혁당 김정환 10년 구형 - 김정환씨, 국보법 철폐 주장 / <만화사랑방> 파주 폭발물 사태
		2	'무노조' 삼성에 파업으로 맞선 보광 - 노조파업 45일...사측 노조 전문파괴자 고용 / <거짓말> 표현의 자유 침해로 - 등급의전용관 설치 시급 /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감미영 씨, 유죄판결 -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 명예훼손 죄 적용
1535	1/15	1	조폭소탕에 청소년 출세위 - 피의자 "죄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사회단체, 국정원 고발 - 민혁당, 불법수사·명예훼손 혐의
		2	<논평> 영남위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피노체트 석방, 문제 있다 - 국제 엠네스티 비관성명 / 한총련 이적혐의 못 벗어 - 1심 무죄판결 2심에서 뒤엎혀 / 상용노조, 서울노조와 극적 타결 - 자치단체 노동자, 권리보장 미흡
1536	1/18	1	<파주 폭발물 소동 그 이후> "미군은 우방이 아니었다" / 보스니아내전 전범 실행 - 국제엠네스티, "정의 향한 전진"
		2	"알아서 그만두라는 메시지" - 전북대 병원 간호사 부당 전환 배치 / 주간인권흐름(1월 12일 - 1월 18일)
1537	1/19	1	군포시, 역주변 노점 싸움이 - 철거용역 상주...노점상 생계위협 / 비정규직 피땀아먹는 적십자사 - 5년 근속이유로 해고, 법정 수당 지급안해
		2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SOFA 한번 해보자 - 국민행동 팩스시위 벌여 / 통일부 장관 면담 추진 - 북송추진위, 향후 사업논의

### <인권하루소식> 2000년 1월분 총목차 (1529-1545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538	1/20	1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새로나온 논문> 여성 재소자의 인권
		2	검문 뒤 불법연행 "3백만원" - 대학생들, 민사소송에서 승소 / <성명서 요약> 영화 <거짓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1539	1/21	1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탄압 / <만화사랑방> 무작위 조폭소탕
		2	공익근무요원, 구청상대 인권투쟁 - 공무중 상해입어도 구청은 '나 몰라라' / 택시월급제 물려설 수 없다 - 경남택시노동자 23일째 농성
1540	1/22	1	사건피해자 수감재위 구인 - 법정출두 안했다는 이유로 / 농업 관료등 망언 유행 - 농협회장, "돈 없는 농민은 없다"
		2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인터뷰> 차미경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베트남 학살대책위 구성된다
1541	1/25	1	머니먼 재소자 집필권 -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 시급
		2	<인권시평> 음란물은 처벌의 대상인가? (강내희 중앙대 교수) / 주간인권흐름 (1월 17일 - 1월 24일)
1542	1/26	1	"얼어죽어도 대안은 없다" - 의왕시 내손동 주민들 길거리로 / <새로나온 논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2	<관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체 무죄판결 -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피노체트 재심 촉구 - 국제인권단체 영국법원 방문
1543	1/27	1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서 -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 서울대 비정규직노조 출범 - 미화원·경비원 1백여명 참여 / 통일운동가 김양무 씨 운명 - 30일 고대병원 발인
		2	동절기 강제철거 잇따라 - 상암동·봉천동 세입자들 몸살 / <인터뷰> 복지투쟁 승리한 노동자 - "노동자로서의 권리 배웠다"
1544	1/28	1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 여타 고문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차단 안돼 / 민혁당 하영옥 씨 무기구형 - 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 <만화사랑방> 선수협의회 결성
		2	<관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철거 이어 강제 연행까지 - 서울시장, 상암동 주민 면담 거부
1545	1/29	1	택시노동자본신, 사실과 달라...경찰 과잉진압에 따른 화재 가능성 높아 /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취소 - 대법 "재범 위험성 없다"
		2·3	2000년 1월 월목차

<인권하루소식> 구독로 남부 부탁드립니다.  
미납액이 많은 분은 분납도 가능합니다. 문의 : 02-741-5363(이창조)

(제1546호 ~ 제1564호)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 인권하루소식

2000년 2월

(제1546호 ~ 제1564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1일(화)

제 154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휘발유 천지에 가스총 발사

### 동두천시청 화재사건 피해자 증언

경기도 동두천시청 화재 원인이 당초 발표내용과는 상반된 경찰이 발사한 가스총에 의한 것이라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지난 26일 시장실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윤충주(전 우신운수 택시노동자, 36) 씨는 경찰이 가스총을 쏘자 총탄폭발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농성진압에 나선 경찰과 소방대원 등은 살려달라는 자신들의 요구조차 외면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 10분경, 우신운수 택시기사였던 윤씨와 동료 등 4명이 동두천 시장(방제현)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을 점거하자 시청 직원들이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이에 윤 씨 등은 휘발유를 시장실 바닥에 붓고 한상만 씨는 몸에 휘발유를 적신 채 직원들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8일자 참조).

이어 4시 50분경 시청에 돌아온 밤시장은 시청직원과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장, 동두천소방서 방호과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강제진압을 논의한 후, 면담을 벌이 삼아 농성 중이던 정병호

(전 우신운수 택시노동자, 36) 씨를 밖으로 불러냈다. 정 씨가 밖으로 나온 지 채 3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은 시장실 진압을 시도했으며, 곧바로 정 씨도 연행됐다.

윤 씨는 "시장 부속실에 대기하고 있던 의정부경찰서 강력계 4반장을 필두로 경찰들이 시장실로 강제진압을 시도하면서 시장실 내부로 가스총을 쏘자 '뽕'하는 소리와 함께 시장실이 불길에 휩싸였다"며 "소방대원들은 소방호수로 화재진압을 시도한 후 오히려 불이 커지자 부속실 문을 닫아버리고, 창문으로 우회해 구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불이 나자 농성장에 있던 한상만(37) 씨는 2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고, 출입구 쪽에 있던 홍성표 씨는 바다에 넘어져 부속실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며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부속실에 있던 공무원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윤 씨는 주장했다. 불은 오후 5시 5분경 진화됐으며, 윤 씨는 등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시장실 창문을 통해 혼자 나왔으며, 사망한 홍 씨도 창문을 통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따라서 윤 씨와 한상만 씨 그리고 몇몇 공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원인이 경찰의 무리하고 경솔한 진압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는 살인까지 예고된 것이다. 그러나 의정부 검찰은 사건 발생 이틀만에 사건현장을 치워버렸으며, 동두천 소방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소방일지도 보여주지 않는 등 진상규명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더구나 동두천 시청 측은 고 홍성표(36) 씨의 유가족이나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인 부상자들에 대한 사과

도 없이 시장실 공사에 여념이 없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7만 동두천 시민이 나서서 총체적으로 썩어있는 동두천 시청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상암동 철거민 구속

####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던 철거민들이 구속됐다.

남대문 경찰서는 31일 이동수 상암동 철거대책위원회장과 조미영 연사부장을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25일 상암동 생가가 강제철거 당하자 기수용단지 건설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해왔는데, 이에 시청측은 26일 고건 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6일 고건시장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오후부터 서울 시청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

### 주요공판안내

▶ 2월 1일(화)

- 양지마을출소자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속행
- 윤치고 - 무고죄 4시, 서울지법 522호, 신건
- 청송감호소 복역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교도소장을 고발하자, 교도소장이 무고죄로 고소

▶ 2월 2일(수)

- 전상봉 등 - 향소심 선고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 98년 민족통일애국청년회(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사건으로 구속

### 남·북·해외 공동장추진

#### 김양무씨 장례식, 범민련 장

통일운동가 고 김양무 씨의 장례식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그러나 발인일은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범민련 측은 "범민련 남, 북, 해외 본부와 함께 장례식을 치루기 위해 날짜를 재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02-929-4099)

인 권 시 평

못난 어머니, 못난 눈물

공선옥 (소설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최근에 우리 둘째 아이를 소아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킨 일이 있다. 그 아이를 입태하고 출산하고 길렀던 그 세월들이 결코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아이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힘들어하게 된 연유가 그런 환경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나한테 진정 사랑이 부족했던 것일까.

아이의 모습을 관찰하던 의사는 나에게 입원을 시키는 것을 권유하였고 나는 입원을 하더라도 아이의 동의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의사는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가, 고 반문했다. 병원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다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또 고통을 반복할 용기가 없었다. 최선은 아니지만 그리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였지만 못난 어머니인 나는 끝내 아이를 병원 측에서 하자는 대로하고 말았다.

아이의 의외로 빨리 병원생활에 적응해 가는 듯 했다. '안집'이라고 불리는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분위기의 장기입원실은 2인1실의 방이 따로 있고 남녀노소가 같이 쓰는 공동의 공간이 있었다. 남녀노소가 같이 있는 것이 의아해서 물었더니 그렇게 있는게 좋다고 한다. 또래끼리 있으면 나쁜 행동을 보고 학습하게 된다고. 정말로 병원에서 하는 모든 말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도 민자고 다짐했다. 날마다 아이를 면회하러 다니는 길은 어머니로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게 아니라 아이가 나를 어머니로, 부모로 키워가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면회를 다닌지 한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날, 아이 입에서 무심한 듯하면서도 불만에 가득찬 말을 듣게 되었다. 휴식시간에 공동공간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주 옆으로 다가오며 머리도 만지려고 하고 손도 만지려고 하는게 귀찮아서 신경질을 냈더니 어른환자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린이가 어른한테 버릇없이 굴었다고 오히려 우리 아이를 나무랐단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담당의사와 상의를 하려고 했지만 의사는 나와 우리 아이의 말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병원을 그렇게도 못 믿겠으면 당장이라도 퇴원을 하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고 '인권시평'이 요구하는 주제와 동떨어진 감도 없지 않지만, 내가 상대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뭔가를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건강하다고, 힘이 더 세다고, 모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가해져 오는 '일상적인 폭력과 억압'이란 기실 제도와 권력으로부터 오기보다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들에서 오기가 더 쉽지는 않겠는가, 싫어서 이 귀한 람을 빌려 사사롭지만 내게는 너무나 힘겨운 날의 단편을 적어보았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1. 이근안, 법정최고형 구형  
남북어부 김성화 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불법감금, 독직폭행 혐의로 법정최고형인 10년 6월이 구형돼...고문피해자들, 공소시효 없애 타 고문사건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 (1/27)

2. '음모론'의 시대착오적 음모  
총선시민연대, 김중필 자민련 총재를 비롯해 66명의 낙천·낙선 국회의원 명단 발표 ...자민련 등 김대중 대통령 배후설, 음모론 부각시켜 (1/24)

3. 대법원, '간첩' 보안관찰처분 기각  
대법원, 간첩혐의로 복역한 김삼석 씨가 낸 보안관찰 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1/28)

4. 겨울철 강제철거 기승  
서울 상암동, 봉천동, 의왕시 내손동 등 경찰의 비호 아래 철거용역원들이 생가까지 철거해 (1/24) ... 상암동 주민들,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농성하다 전원 연행돼

5. 불법 불심검문 또다시 제도 걸러  
서울지법, 불심검문 시 학생증 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며 국가에 손해배상 명령 내려 (1/27)

6. 학칙은 누가 만들지?  
대법원, "학칙에 따른 체벌은 정당하다"며 검찰서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에게 무죄 결정내려 (1/28)

7. 면담요구하다 면담중에 분신?  
우산운수(경기도 동두천시) 소속 택시기사 4명이 지입금 문제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중 시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 중상 입어 (1/26) - 시청측은 노동자들이 분신을 기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이 가스총 발사해 화재가 났다고 반박

8. 목숨과 바꾼 코리안 드림  
국내에 밀입국하려던 중국동포 79명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이중 두명은 냉동차에 숨어 서울로 상경하던 중 질식사해 (1/28)

<국제인권소식>  
· 유엔, 유전자 조작된 작물의 무역을 금지하는 '생물안전 의정서' 채택 (1/29)  
· 29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항의하며 국제NGO들, 격렬시위 벌여 (1/3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2일(수)

제 154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준법서약, 재수감 사유

명동성당 농성 후 가석방 취소

준법서약을 작성하고 사면된 김태원(30, 97년 서총련 집행위원) 씨의 가석방이 취소됐다. 준법서약을 작성하고 석방된 양심수의 가석방이 취소되는 지난해 송계호(31, 한총련 정책위원) 씨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씨의 어머니 이범자 씨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순천지원에서 사람이 나와 '아들의 가석방이 취소됐으니 아들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갔다. 갑작스런 가석방 취소 소식에 놀란 이 씨는 법무부로 사실을 확인했는데 담당자는 "이적단체인 한총련과 함께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한 것이 이유"라며 "김 씨는 현재 수배상태"라고 밝혔다. 게다가 담당자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는 이 씨의 질타에 "미리 알렸으면 도망갔을텐데 왜 가르쳐주냐"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가석방 취소하고 거짓말

이에 대해 이 씨는 "태완이가 농성을 시작한 이후 마포서 형사들이 계속 집안을 감시하기에 혹시 가석방이 취소된 것이 아니냐고 몇 차례 물어봤지만 그때마다 '가석방은 절대 취소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마포경찰서장이 가석방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씨는 또 "법무부에서 이번달 내로 출두하면 선처해주겠다는 의견을 타진해왔다"면서 "태완이의 가석방 취소는 실정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채은아 간사는 "개인이 스스로의 양심에 비취 틀린 것을 틀렸다

분 취소 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봉천 3동, 철거용역 난입

겨울철 강제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봉천 3동 철거민들이 온종일 재철거의 위협에 시달렸다.

철거용역들은 지난 25일 봉천 3동 철거대책위 사무실을 강제철거한 데 이어, 1일 오전 8시경 마을에 난입해 철거민들을 위협했다. 이에 따라 철거민들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근지역 대학생들과 철거민들을 소집했는데, 오후 2시경 마찰이 발생해 철거민들 중 일부가 부상을 당했다. 이날 철거용역들은 밤늦게서야 철수했는데, 다행히도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새로 나온 책

[노숙자와 이웃하기 - 노숙자 바로알기 ①]

1999년/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지음/ 20쪽

사회적 소수는 언제나 사회적 다수가 만들어 놓은 편견의 그늘에 놓여있다. 따라서 그 편견을 깨는 것은 소수자의 자기이름 찾기에,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노숙자 인권의 출발은 '그들을 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노숙자 바로알기 시리즈는 가려진 '정막'을 거두고 우리가 노숙자들과 함께 '이웃'하기를 권한다.

이 자료집에는 '노숙자에 대한 편견과 진실 다섯 가지'란 항목을 뒤 일반인들이 노숙자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흔히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란 ▲노숙자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다 ▲노숙자들은 스스로 노숙생활을 즐긴다 ▲일자리만 생기면 노숙자는 자활할 수 있다 ▲노숙생활은 비난받을 만한 당사자 개인의 책임이다 ▲노숙자들은 위험하고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자다란 것으로 만약 당신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자료집을 읽어보는 것이 을 듯 싶다.

한쪽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난리법석이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장기화된 빈곤의 터널에서 고통스런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실업과 불충분한 사회보장제도, 높은 주거비용 등의 사회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노숙자들은 계속 양산될 것이며, 노숙자들은 영하 10도가 오르내리는 시멘트 바닥에서 새우잠을 청해야 할 것이다.

# '혈액순환'보단 '노동환경 순환'이 우선

## 동방제약, 창립 25년에 1년 넘긴 노동자 없어

정코민(혈액순환촉진제)을 만드는 한 제약회사가 저녁식사도 지급하지 않은 채 늦은 밤까지 노동자들에게 잔업을 강요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들의 퇴사를 막기위해 입사 시 '3년내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동방제약(대표이사 박화목). 65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이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연, 월차, 생리휴가도 보장돼 있지 않다. 게다가 매일 3-5시간의 잔업을 강요하고 있지만 잔업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어, 창립한 지 25년이 지나도록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단 한명도 안되는 실정이다.

노동조건이 열악함의 극치를 이룬 노동자들은 지난해말 노조를 건설하고 사측과의 교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의 공문마저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매일 회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조용섭 노조 위원장은 "현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한 상태"라며 "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난방도 안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동방제약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해 가족들은 물론 지역 노동단체에 회 사상황을 얘기하는 것마저 창피하다"며 "심지어 월요일에는 오전 8시에 출근해 대표이사 주재하는 예배까지 참석해야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냈다.

박대균 노조 사무국장 역시 "노조가 결성된 이후 안성시 사업장 노동자들은 정시출퇴근을 벌여나가고 있지만 서울 영업소의 경우 사측의 노동력차이는 계속되고 있다"며 "아마 노조의 힘이 더 커지면 사측은 위장폐업을 감수하고서라도 노조를 와해하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동방제약 박 대표이사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퇴사한

노동자들의 고소가 13건이나 접수된 상황이다.

### 고려운수 파행 계속돼

#### 노동자, "스스로 대안 만들겠다"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3백여일의 장기파업을 벌였던 고려운수 노동자들이 서울시 권고에 따라 업무에 복귀했지만 사측의 탄압이 계속되자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고려운수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자 송현주 사장은 임금협정서에 개별 서명한 자에 한해서만 승차를 허

락하겠다고 개별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으며 차량수리를 빙자해 택시 58대에 대해 사업휴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사업휴지는 천재지변 등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관할구청인 성동구청이 노조 탄압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낳게 했다.

앞서 서울시는 노조의 업무복귀를 권고하면서 "정상운행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장에게 운전계시 명령, 현장 지도감독, 불법 변태운영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이를 어길 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 당국의 개입은 전무한 상태.

이에 대해 노조원 박상희(44) 씨는 "제대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이제 관과 언론도 믿을 수 없다"며 "1백20여 노조원들이 직접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보조원에 대한 긴급 토론회>

##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자다"

골프가 각광받고 있지만 골프장 경기보조원(일명 캐디)들은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종로성당에서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성차별적 조기 정년'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다음은 주요 발표자의 발제 내용이다.

#### ■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경기보조원들은 조기정년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산업재해, 부당한 인격적 대우와 성희롱에 시달린다. 지난해 12월 한양 컨츄리클럽이 43세 이상의 경기보조원을 해고한데 이어 한화그룹 컨츄리클럽도 올초 '40세 정년'을 내세워 경기보조원들을 해고했다. 경기보조원은 입사 후 1달간 무보수로 교육을 받는다. 또 근무는 고객도착 1시간 전에 시작되며, 여름에는 오전 4시 30분부터, 겨울에는 오전 6시부터다. 일상적으로 불이나 골프채에 맞는 부상을 입고 있지만 치료는 전액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 김진 변호사

이들은 골프 운영규칙에 대한 높은 이해와 날씨, 풍향, 코스 지형, 고객의 성향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 서비스직 종사자이며,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다. 따라서 직종이 서비스직이고 고객들이 젊은 보조원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조항 위반이다.

#### ■ 김태홍 한국여성개발원 노동통계연구부장

경기보조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경기보조원들은 고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하며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정년연령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3일(목)

제 154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최근 정부가 체불임금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체불임금으로 생존조차 위협받는 노동자들에게는 공허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2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마이크로(사장 조형길) 노조 소속 2백여명의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서울 구로3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크로사는 불펜과 샤프 등 문구용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로 97년 부도가 난 이후 화의에 이르렀지만, 6백여 노동자들의 임금 약 83억원(1천9백%)을 체불하고 있다.

마이크로 노조 이석태 위원장은 "한 달 내내 대출 받기 위해 노동부로, 정부종합청사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찾아다녔지만, 실무자들은 법이 없어 해결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대책도 지금 신청

해도 설이 지나야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부도난 후에 지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순이 부위원장도 "열심히 일한 죄인이 있는데,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 가족끼리 떡국마저 끓여먹기 힘든 상황"이라며 "살인적 체불임금에 대한 조건완화가 아니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1천개사업장, 체불액 9백3억원

마이크로와 같이 만성적인 체불임금 상태인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1천여개에 이르며 3만 노동자에 대한 미청산 체불임금도 약 9백3억원이라고 지난달 노동부가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지방관서별 체불청산 실적

산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회사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해 설 전에 도산직전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 지급,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동료의 상호보증만으로 1인당 2백만원의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태연 기획국장은 "기금은 98년부터 정부가 시행해왔으나 사업주의 참여율이 낮아 기금마련도 어렵고, 수혜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도 없는 매년 반복된 공약"이라며, "정부가 상습적인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체불임금 사업장의 악덕기업주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모든 통신에 열린 '참세상'

#### 사회운동자료, 손쉽게 만나

'참세상'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자료들을 이젠 천리안, 하이텔 등 상업통신망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사회단체의 정보통신네트워크센터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자원들은 공익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일명 열린네트워크 사업)하에 현재 20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PC통신망 '참세상'에 올라온 자료들을 4대 상업통신을 포함한 모든 통신망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다양한 통신망들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만여 종의 사회운동정보와 사회단체의 온라인 포럼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구하고 싶은 사람은 telnet://purple.jinbo.net로 접속하면 된다. (문의 02-7744-551)

만화사랑방



이동수



# “설, 그러나 같קות이 없습니다”

## 서울역 노숙자, 귀향객보며 눈물만

모처럼 자기 애길 들어줄 사람을 만나서였는지 정신없이 말을 건넨 장윤식(63) 씨의 말이 단 한 가지 때문이었다. 한쪽 눈에 축축이 고이는 눈물.

한 살이 채 못돼 왼쪽 눈을 사고로 잃었다는 장 씨가 부산인 고향을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온 것은 지난 97년 경제한파가 불어닥치면서였다. 사업이 망하자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그는 입이라도 줄일 요량으로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향을 떠났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시내를 떠돌며 노숙자 생활을 해왔다는 그는 요즘 서울역 지하철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식사는 하나씩 질문에 “하루 두끼 먹으면 잘 챙겨먹은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동안 아무말도 안하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설인데 여기(서울역 앞)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 가족들 생각이 난다”고.

사정은 옆에 있던 김성묵(62) 씨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에는 그나마 공공근로라도 나가 30만원이라도 손에 쥐었다는 김 씨는 지난 연말부터 방세를 못내고 있다. 경기가 회복됐다는 이유로 공공근로자리마저 줄어들어 일을 못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혹여나 집이라도 들어주면 몇 푼이라도 벌 수 있을까 서울역에 나왔다 김 씨는 “20년째 쪽방생활에 다시 내쫓겨 날 판”이라며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강원도에 부모를 묻었다는 그는 “설이라고 한번 다녀오기는 해야할텐데 돈이 없다보니 늙어서도 자식노릇을 못한다”며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없는 놈은 계속 없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라며 발길을 돌렸다.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없는 놈은 계속 이렇게 살다죽는 것야”

취재를 마치고 돌아서는 데 목발을 짚은 한 남자가 우리를 불러 세웠다. 고아라고 자기를 소개한 이태형(30대 중반) 씨는 세상살기가 힘들어서 지난해 말 4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했다. 그 때문에 왼쪽다리가 부러져 동부시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얼마 후 병원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괜찮다고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이 씨는 자신의 망가진 다리를 보여주겠다고 서울역 광장 한 가운데서 때론 붓대를 풀어헤쳤다. 통통 부어버린 다리. 이 씨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잘라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손에 전화카드와 전화번호를 쥐어주자 이 씨는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며 세상이 자길 버렸다고 절규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99년 말 전국의 노숙자는 약 5천5백여명. 그러나 노숙자를 지원하는 민간연합단체인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는 실제 노숙자 숫자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날이 돌아왔지만 노숙자들에게는 더 없이 쓸쓸한 날이 돌아왔을 뿐”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는 한 노숙자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새해에도 늘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 교류있어도 복은 반국가단체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권나혜 판사)는 2일 오전 10시 한대웅 전 민애청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애청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과 북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교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애청의 이적성과 관련해 “민애청이 발간한 자료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단체가 국가보안법의 테두리안에 있는 한 최대한 국가보안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회장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형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 김양무씨 장례 13일

## 망월동 묘역에 안장

통일운동가 김양무(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상임 부의장) 씨의 장례일정이 확정됐다. 고 김양무 씨 장례위원회는 2일 장례지침을 발표하고 고인의 장례를 오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장으로 치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인은 13일 오전 8시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고대 병원에서 있을 예정이며 그후 장례행렬은 청량리, 종로 등 서울시내를 거쳐 전라도 광주에서 노제를 갖게 된다. 고인의 시신은 광주 망월동 묘역에 묻히게 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지난달 31일 윤이상 음악당에서 범민련 북측본부의 주재 하에 9백여명이 모여 고 김양무 씨 추도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8일(화)

제 154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법원, “초기증상도 산재”

## 망간중독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거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정을 거부당한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산재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수년간 용접공으로 일해온 건설일용직 노동자 권기섭(42, 포항시 남구 송도동), 박종백(49), 오영문(44) 씨 등이 낸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권 씨 등의 산재를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씨 등이 15-20년간 망간가스 다량으로 발생하는 용접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망간에 노출됐었다”며 “이들이 모두 망간중독증의 정신증상인 성격변화와 기억력 및 주의력 저하,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중 한명은 망간중독증의 신경학적 증상인 파킨슨증후군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망간중독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평소 잦은 어지러움과 우울증을 호소하던 권 씨 등은 지난 97년 건강진단

을 통해 망간이 몸안에 다량 축적돼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간이 몸 안에 축적된 것은 인정하나 신경학적 검사상 망간중독과 관련된 뚜렷한 임상징후가 없고 권 씨 등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망간중독증의 증상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요양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권 씨 등은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 거부

현재 망간중독이 발전한 파킨슨증후군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는 박 씨는 “아무 일 없이 매일 심하게 놀라며 머리가 빠게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고 증상을 설명하고 “죽지않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뜻밖에 결과가 좋았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다시 오랜시간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몸이

안 좋아 계속 일을 할 수도 없고 생활도 어려워 제대로 병원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은 극소수의 경우에 한해서만 초기증상을 산재로 인정해왔다. 권 씨 등이 파킨슨증후군 또는 편측전전마비, 정신이상 등의 원인이 되는 망간에 중독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것 역시 위 병들로 아직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산재추방운동연합의 주영미 부장은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예방하기보다 산재를 방치해왔다”고 비판하고 “이번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은 ‘예방’의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철거민 강제입원시켜

## 서울시와 경찰, 시립병원에

서울시청 앞에서 강제철거에 항의하던 주민들을 공권력이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11시경 경찰과 시청직원 20여명은 시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던 삼양동 주민 신윤균(55) 씨 등 2명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강남시립병원에 입원시켰다. 신 씨는 “경찰과 서울시 직원이 3일 오후 7시부터 병원으로 가자고 계속 요구해 거부했으나, 밤이 되자 20여명이 우루루 달려들어 강제로 차에 태웠다”고 밝혔다.

신 씨 부부는 5일 새벽 강남시립병원에서 퇴원해 서울시청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스테로이드와 담요 두장에 의지한 채 가수용단지 가수용단지와 임대 아파트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싸늘이철거에 항의하던 이동수 씨 등 2명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 주요공판안내

- ▶2월 9일(수) 권오혁(민권공대위) -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20호, 속행 : 북한의 지시를 받아 범청학연과 한총련에서 활동하면서 위 단체들을 배후조정한다는 혐의로 구속됐으나 현재 위 사안은 누락되고 이적표현물 배포 및 소지에 대한 심리만 받고 있다.
- ▶2월 10일(목) 이근안 - 불법감금 및 독지가혹행위 등,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고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 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23호, 결심
- ▶2월 11일(금) 하영옥(민혁명사건) -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고

인 권  
시 평

### 박하사탕과 거짓말

이제훈 (한겨레신문 기자)

99년에서 79년까지 20년 세월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절규하는 영화 <박하사탕>. 평단과 관객들의 반응은 이래적으론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사 일색이다. 어떤 이는 '세계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이라고 극찬했고, 또 다른 이들은 "나도 다시 돌아갈래"라거나, "영화를 보고 한동안 멍했다"고 한다. 이창동 감독은 사람들에게, 영화평론가 이효인의 지적따라 "네 삶을 네 손으로 찢어버려라, 더 이상 개처럼 살고 싶지 않다"며라고 외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박하사탕>을 두고 "문발이(지식인)의 자기연민"이라거나, "2류 역사인식의 발로"라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글에서 영화를 평할 생각은 없다. 능력도 없다. 다만, '빛고을의 피'를 불러온 가해자들이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 그들이 스스로 죄과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점, 그러니까 '가해자'로 표상했던 피해자의 망가진 삶을 우리 자신에게 투사하는 것 못지 않게, '역사의 이름'으로 가해자의 죄과를 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싶을 뿐이다. 만장일치는 위험하다.

<박하사탕>을 상영하는 피카디리 극장 건너편 단성사에서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을 만나는 건 묘한 느낌이다. 각설하고, <거짓말>을 검찰에 고발한 이들, 예초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던 '관관'들의 결정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영화가, 아웃사이더들의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쓸쓸함을 표현한 것이든, 일부의 비판처럼 예술을 빙자한 상업적 선정주의의 발로든, 상관없다. 알아서 볼 일이다. 중세의 엄숙주의가 우리를 구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나, 그 엄숙주의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얼마나 해악을 미치는가 또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다름과 차이의 존중'을 외치며 '게릴라전'을 펼치는 듯 행동해온 장선우 감독에게 궁극한 점이 있다. 그는 왜 "〈거짓말〉이 포르노면 어떤데?"라고 반문하지 않는 것일까. 한국사회가 너무 보수적이라서? 난 한국사회가 도달한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가늠하고자 할 때 '국가보안법'과 '포르노'를 떠올린다. 누군가 포르노라는 낙인으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할 때 난 숨이 막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를 표현의 자유 지대밖에 당연스레 놓는 태도에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물론 난 국가보안법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90년대를 통해 한국사회는 '미시정치'의 중요성을 배웠다. 사람들은 일주초 거대담론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하곤 하지만, 그 미시정치가 자동적으로 '거대담론'과 '거시정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닐 게다. <박하사탕>과 <거짓말>에서 난 '거시정치' 없는 '미시정치'를 본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내 눈이 어두운 탓이라면 좋으련만...

###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31일 - 2월 7일)

1. 혈액순환제 만들며 등골 빠지는 노동자  
혈액순환제를 만드는 동부제약이 노동자들에게 저녁 식사도 지급하지 않은 채 야근을 강요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요구에 4대보험 미가입과 월요일에는 출근예배까지 강요 (2/2)
  2. 박솔이 철거항의에 구속해  
상암동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철거민 이동수, 조미영 씨 집시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1/31)
  3. 삼성해고자 하나로 뭉쳐  
삼성그룹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결성, 삼성생명과 삼성중공업, 이천전기 등 삼성계열사 해고자 350여명 참여 (2/6)
  4. 농성후 가석방 취소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사면된 김태완 씨의 가석방이 취소돼/당국은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한 것이 이유'라고 밝혀 (2/1)
  5. "개디는 꽃이 아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화그룹 소속 프라자컨트리클럽이 40세 조기정년을 내세워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에 대한 항의집회와 토론회 가져 (1/31)
  6. 국제사면위, 인권위 설치 등 개혁 요구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국내인권개선을 위한 개혁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개 제안 - 전국 경찰청과 검찰청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 모두 10가지 내용 (1/31)
  7. 전국운송하역노조, 고속도로 저속운행 시위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부산항 신선대·우암부두의 '노조지부 인정'을 요구하며 고속도로 저속운행 시위 벌여/ 노동계는 초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불가'를 내세워 반대 (1/31)
- <수치로 보는 인권>  
1. 줄지않는 젊은 실업자  
노동부는 만 15-24살의 청소년층 실업률이 지난해 말 현재 28만7천명으로 13.2%대를 넘었다고 발표/청소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말 전체 실업률의 (4.8%)의 3배 가 가까운 수준 (2/7)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9일(수)

제 155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난민없는 난민 이사국

### 정부 태도 변화 시급

난민을 한사코 거부해 온 나라가 유엔난민고등판관관 (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92년 국제난민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단 한명의 난민신청자에게도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99년 8월까지 53명에 이르는 난민신청자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필박사유에 대한 적절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난민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96년 내전에 따른 징집을 거부하며 난민신청을 한 알제리인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징집피피는 난민신청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난민신청을 기각함으로써 강제출국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출입국관리소가 난민신청서를 받기 전 임의적으로 사전심사 과정을 두어 신청접수 자체를 거부해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 난민 자체를 거부하는 정부

그동안 UNHCR의 요청으로 몇 사람의 난민신청을 대신해 주기도 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경주 간사는 "우리정부가 난민보호에 힘쓰기 보단 무관심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난민들의 인권을 상당히 유린해왔다"고 비판했다. 장 간사는 "난민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입국 후 60일 이내에 난민신청서와 자신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야하는데 도망나온 외국인에게 이러한 준비를 60일 안에 마치라고 하는 것부터 잘못"이라며 "한국정부가 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상 난민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변호사 역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사국은 난민보호행위는 물론 난민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난민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 박해전 한겨레 차장 연행 범민족대회 주도, 국보법 위반

박해전 (한겨레신문 교열부 차장)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장이 8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박 씨는 지난해 범민족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생활을 해왔는데, 현재 서울 육인동 대공본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 새로 나온 자료집

###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현장실태조사 자료집]

1999/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132쪽/ 4천원

외국인 여성이 이주를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동북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외환위기가 도래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은 돈을 벌기위해 한국과 일본 등지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등에서 일반적 노동조건을 갖춘 회사에 취업되기 보단 클럽 등에서 성을 파는 '매매촌'에 종사하고 있다.

성 산업을 위한 외국인 여성의 유입이 날로 증가하는 이 때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는 지난해 벌인 클럽 실사를 기초로 성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여성의 성 매매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 안전할 권리, 일을 그만두거나 이주할 권리 등 아주 기본적인 인권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자료집은 성 산업으로 유입된 대부분의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이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일하게 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알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들의 입국과정과 비자발급, 뒤를 봐주는 매니저, 노동형태와 건강실태 등을 증언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성적서비스를 강요당함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있는 통로조차 차단된 상태라고 호소한다.

성 매매에 대한 관계법령이 아주 미약하거나 모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 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 여성들의 실태를 가감없이 보여주려고 있는 이 자료집은 성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 문의 02-708-4370)

# 미란다원칙 고지 안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은 명백한 불법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나아가 연행혐의와는 무관한 사안만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 자(대법관 지창권)는 8일 김낙규(32, 중앙대 졸) 씨 등이 제기한 경찰의 불법연행과 강제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체포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미란다 원칙 고지)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경찰이 화염병 보관 혐의로 김 씨 등을 체포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조사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8.15 대회 참가 여부를만 조사했다"며 "이러한 연행과 구금은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 등 16명은 96년 8월 모교인 중앙대학교 과방과 동아리방 등지에서 잠을 자던 중 시위용품의 압수수색을 위해 학교 안으로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화염병을 보관한 혐의로 연행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더러 경찰조사시엔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8.15대회에 참가했는가를 추궁했을 뿐 화염병 보관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통해 5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된 허동중(33, 91년 중앙대 총학생회장) 씨는 "관행화된 경찰의 인권유린 행위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허 씨는 "불법연행 및 구금, 검문에 대한 법원의 계속되는 제동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행동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과 사고전환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 인간안보 촉구여행

### 국제민주연대 등, 분쟁지역 체험 준비

2천년 평화문화의 해를 맞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민주연대」와 평화인권연대가 한반도 분쟁지역 체험여행을 준비한다. 국제민주연대는 "반평화적 현상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군사력 중심의 안보가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를 고민하고 인간안보의 새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체험여행 참가자들은 서울 전쟁기념관을 시작으로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 군산 미군기지, 부산·연천 대인지뢰매설 지역 등을 순회하게 되며, 시민캠페인과 현장교육, 지역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기간은 2월 14일부터 19일. (문의 02-3676-5808)

## <인터뷰> 김성환 삼성해고자 복직투쟁위원장 "사람답게 살기위한 것발을 올린다"

최근 삼성그룹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삼성전관 노동자들을 납치해 협박, 감금했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삼성그룹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러한 삼성그룹의 노동탄압에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9일 발족식을 갖고 정면 도전을 시도한다. 삼성해북투의 김성환(이천전기 해고자) 위원장을 만나봤다.

### ■ 해북투 구성은 잘 돼가고 있나?

평생직장이라는 환상이 깨진 상태라 각 사업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노동운동 탄압에 따른 해고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삼성생명과 이천전기, 삼성중공업 등 3백55명의 해고자가 모여 해북투 발족을 준비중이다.

### ■ 외환위기 이후 삼성에서 해고된 수는?

97년 이후 삼성의 60여 계열사에서 4만명이 해고됐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동안 삼성을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사주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계기였다.

### ■ 삼성의 노조탄압은 어떤 식인가?

삼성전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그룹은 노조설립에 적극적인 노동자를 해외연수나 출장을 보내 회유하거나 협박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 또한 외부에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있으며 각서까지 요구하고 있다.

### ■ 해고후 어떻게 살았는지?

3년째 복직싸움을 하느냐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고 있다. 생계는 아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아내는 내가 하는 일을 믿고 있으며 또한 삼성과의 싸움은 평생 지고 갈 내집이란 것을 잘 이해해준다. 하지만 사는 게 어렵다 보니 복직투쟁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생계를 위한 준비도 고심하고 있다.

### ■ 해북투의 최우선 과제가 뭐냐?

무엇보다도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이다. 그리고 이천희 일가의 세금포탈과 부정비리, 노동탄압, 폭력을 사회에 조직적으로 알려내는 일이다. 따라서 삼성해북투는 서울에 거점을 두고 지방노동자들과의 연대에 힘쓸 생각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삼성그룹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2001년 복수노조설립이 가능하면 삼성에도 새로운 양상이 대두되지 않을까?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전·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10일(목)

제 155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대학가 장애인 입학 절대불가 청주대 등 "시설없다"며 원서접수 거부

장애인들이 대학에 입학원서조차 넣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쳤던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을 청주대 음악교육과에 편입학 원서를 넣기 위해 방문했던 황선경(28) 씨는 끝내 입학원서를 접수시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학교측이 "시각장애인을 받아들일 시설과 운영상의 뒷받침이 없다"는 이유로 황 씨의 원서 접수를 거부한 것. 황 씨는 "현재도 한성신학대학에서 종교음악을 별 무리 없이 배우고 있다"며 "학교에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부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학교측은 "왜 하필 우리 학교냐"며 황 씨의 애원을 거절했다. 나아가 학교측은 황 씨의 상환을 접한 후 사실 확인에 나선 교육부 관계자에게 "황 씨의 입학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거짓 보고를 하기도 했다.

3일간에 걸친 실랑이 끝에 허무하게 돌아서야 했던 황 씨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조차 없어 꿈을 접어야했던 같은 처지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어 어렵게 편입학을 어렵게 결심했는데, 사람들이 해도해도 너무 한다"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황 씨는 "내가 받은 차별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이 사회 모든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수모"라며 "대학의 편견과 불공평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서주현(25) 씨 역시 서원대 측에 의해 원서 접수를 거부당했다. 비록 장애 정도는 심하지만 '장애인 특례입학'이 아닌 일반전형

을 선택할 만큼 서 씨는 실력에 자신이 있었지만, 서원대측은 "제 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정도의 장애인만 받는다"며 서 씨를 쫓아냈다. 건국대학교에 지원했던 지체 1급 장애인 박미영 씨 역시 "지체 3등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은 받을 수 없다"는 학교측 입장에 의해 교육받을 기회를 무참히 짓밟혔다.

### 대학 박대에 정부 수수방관

이에 대해 학교측은 매정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처사라고 항변한다. 건국대학교 교무처의 장태의 주임은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준비할 수 없는 여건에서 장애인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적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깊게 깔려 있었다. 장 주임은 "우리학교의 특별전형은 수능 15%이내의 성적을 낸 학생만 응시할 수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 48%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이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좋은 성적을 내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 주임은 "장애인 학생이 얼마나 된다고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하겠냐"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한 사립학교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변명했다.

한편 정부 역시 대학의 장애인 입학 거부조치와 관련해 책임전가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장애"를 이유로 각 학교가 장애인들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장애인특수교육진흥법이 있기는 하지만 대학 입시는 대학 당국이 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위치"라고 변명했다. 또 교육부 고등교육과의 한 사무관은 9일 청주대가 황 씨의 편입학

▶2면으로 이어짐

##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서원대에서 장애인이란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거부당했던 서주현 씨의 글을 간추려 신는다(편집자주).

최고의 지성인을 육성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소위 대학이라는 곳이 기회를 쥐보지도 않고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만 입학할 수 있다고 대학은 떠들어대지만 정상인으로 살아가면서 단 한번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내온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장애인은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입학원서조차 넣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인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저는 장애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혔고 이 사회에 대한 적개심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타 대학에 원서를 넣었고 실기시험을 대비하고 있지만 이번 일은 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8일 국회에서 처리된 선거법을 놓고 진보정당과 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된 선거법이 진보적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존속 강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청년진보당(대표 최현)은 9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당의익에 따른 개악"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정치관계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신진세력 진입장벽 더 높아져

개정된 선거법 가운데 비난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1인1투표제의 유지

와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인상'이다. 민주노동당 등은 그 동안 '1인2표 전국단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헌법으로 규정된 직접선거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1인1투표제에 따르면, 전국구(비례대표) 의원직은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각 정당의 의석확보를(개정 법률에서는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간접투표를 통해 선출된 셈이었다. 그러나 1인2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원직과 비례대표직을 분리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의 직접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등의 주장이다.

### 동두천시청화재사건 희생자 장례식 열려

시청측 진상규명 없이 장례비만 지급

9일 동두천시청(시장 방제현) 화재사건 사망자 홍성표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홍씨의 유족들은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한 채 사건 직후 화재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시청 앞에 빈소를 차렸었다.

이번 장례는 8일 동두천시청 측이 홍씨의 유가족을 만나 장례비 1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청과 유가족의 장례식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 화재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비대위도 '진상규명대책위원회및교통행정비리쇄신을위한대책위원회'로 전환됐다.

농성에 가담한 전우신운수 택시노동자 3명중 정명호씨는 방화혐의로 구속된 상태며, 중화상을 입은 윤충주 씨와 한상만 씨도 치료후 구속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본지 1월 29일자, 2월 1일자 참조>

#### ◎의혹이 제기되는 화재관련 주장◎

◇1/26일, 동두천시 공시 발표 : 시장이 (농성자)진압을 결정한 후, 형사들이 시장실에 들어가자 농성자 중 1명이 라이터를 켜다.

◇1/27일, 의정부경찰서측: 강제진압은 없었으며, 농성중이던 한상만 씨가 라이터로 휘발유 통에 불을 붙였다

◇1/28일, 동두천소방서 화재원인 조사자: 화재현장에서 라이터 발견 못했지만 경찰과 시청직원들의 증언에 따라 방화로 결정내렸다.

◇1/28일, 동두천소방서 이재훈 소장: 시장실에 한시간 이상 휘발유를 뿌려놓은 상태라 작은 충격만으로도 화재가능하다. 오후 5시경 사복을 입은 경찰이 시장실로 들어가자 평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기 치솟았다.

◇1/30일, 윤충주 (전 우신운수 택시노동자, 농성자): 경찰이 농성을 진압하기 위해 시장실로 들어오면서 (가스)총을 쏘자 연기가 나면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또한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된 것 역시 대표적인 계약조항으로 꼽힌다.

인지도가 낮은 대부분의 신진세력은 득표율이 저조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탁금제도에 의한 경제적인 부담은 결국 신진세력의 후보등록을 가로막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김종철 언론부장은 "재산을 후보등록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참정권에 차별을 두는 위헌적 제도"라며 "일정 수의 후보자추천 서명을 요구하는 방식 등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후보자 난립을 막을 수도 있는데 굳이 기탁금을 인상한 것은 결국 신진세력의 국회 진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청년진보당은 1인1투표제 등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 <1면에서 이어짐>

원서를 거부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학교측 거짓보고만 믿고 제대로 사실을 확인해보지 않다가 인권단체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사실을 재확인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 장애인교육기회박탈, 불법행위

학교와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의 박순옥 부장은 "장애인이란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도 부당한데 교육기회조차 박탈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학당국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물론 이 문제를 사회화 시켜내겠다"고 밝혔다. 노동장애인의 야하의 박경석 교장 역시 "인간중심의 교육을 가르쳐야할 대학이 인간경시를 실천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종욱 사무국장도 "외국은 장애인 교육을 위해 정부와 학교가 유급 자원활동가까지 연결시켜주는 상황"라며 대학과 정부의 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11일(금)

제 155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이는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 4부(주심 안동범 판사)는 김석진(32) 씨가 98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 씨가 지난 96년 마산교도소 수감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려다 제지받은 사실을 인정해, 1백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 씨가 주장한 교도관의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혹행위는 증거미비로 인정할 수 없었고, 원고의 고소장 제출을 막은 교도관의 권

리행사 방해 부분만을 인정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쇠사슬·수갑 차고 두달 간 징벌

김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소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 두달 간 징벌을 받았는데, 20kg 이 넘는 쇠사슬과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징벌방에 갇혔고 이에 대해 검찰에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하려다 제지당한 바 있다. 이에 김 씨는 출소 후 교도관들을 불법계구사용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관련기사 1998년 7월 10일, 1999년 4월 13일자 참조). 또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 역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하고 설령 쇠사슬과 수갑 등의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김 씨는 이번 민사재판을 통해 고소장 제출을 제지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김연수 변호사는 "재소자를 장기간 사슬과 수갑으로 묶어 감금하는 행위를 교도관의 제량으로 인정한 것이 무엇보다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에서 재소자에게 9일 동안 사슬과 수갑을 사용한 것이 지나치다는 판례가 이미 나왔는데, 김석진 씨의 경우는 50일이 넘게 사슬과 수갑에 묶여 있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참정권 요구시위에 경찰난입

한총련 대학생 검거 명분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계약 선거법 철회와 국민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2차 원내 3당 규탄대회' 도중, 경찰이 시위대열을 급습해 대학생들을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년진보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경찰은 참가자들이 '근조 민주주의' 관을 들고 행진을 시작하자 대열을 둘러싼 채 나동혁(24·서울대) 씨를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나 씨가 서울대 자연대 학생회장으로 있던 98년 당시 한총련 대의원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청년진보당 측은 "정당이 개척하는 합법집회를 공권력으로 위협하고 행사 내용과는 무관한 엉뚱한 과거 전력으로 참가자를 연행하는 경찰의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청년진보당은 이어 "나동혁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 옥중투병 박경순씨 석방촉구

## 간경화 중기 불구, 6년 옥살이 남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수감중이면서 간경화로 옥중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박경순(45)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 씨는 98년 7월 영남위원회 수괴 혐의로 구속돼 최종 7년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이다. 80년대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안기부의 고문수사와 수배생활로 심근경색과 간염을 얻은 박 씨는 97년 간경화 중기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에 전념해 왔다. 박 씨의 아내에 따르면, 당시 의사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며 6개월 이상을 넘기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아내 김이경 씨는 "현재 남편은 의사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보리밥을

먹을 수밖에 없고, 불기도 없는 냉방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냉방에서 죽어가는 남편..."

박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책위원회도 "구속되기 전 박 씨는 매일 등산, 요가, 식이요법을 하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침치료를 받았었다"며 "거친 음식에 한약복용도 안 되는 상황에 앞으로 6년이나 감옥생활을 해야한다는 것은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중인 김창현(전 울산동구청장) 씨의 아버지도

"구속된 비리 관련 정·재계 인물들은 작은 증세만으로도 병보석이 가능한데 박 씨를 잡아두는 것은 반인도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경순 씨의 병세로 인해 부산교도소는 일주일에 3번씩 박 씨의 침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 경찰폭력 말리다 구속 인천연합 김현호 지역국장

경찰이 대학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회단체 활동가가 이를 말리다 구속돼 재판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송년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인천대 풍물패 회원 김원주 씨 등 15명은 인천 제물포역 인근 도화파출소 앞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인천연합 이소현 인권부장에 따르면, 경찰이 사진을 찍으며 풍물패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김원주 씨를 파출소에 끌고간 후 문을 잠근 채 폭행을 가했다.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다 사태를 목격한 김현호(인천연합 지역국장) 씨가 경찰에게 항의하자 경찰들은 김현호 씨마저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는 것이 인천연합측의 주장이다. 인천연합측은 또 "호송버스를 타고온 2백여 명의 경찰이 현장에 있던 사람 10여 명을 연행했으며, 동부경찰서로 옮기는 차량 안에서 경찰들의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현호 씨 등은 폭행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주호 도화파출소장이 김 씨 등 4명을 폭행혐의자로 지목함에 따라 구속수감됐다.

이에 대해 이소현 인권부장은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의 말만 듣고 수사를 진행한 점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장은 "파출소측은 사건 당일 CCTV가 고장났다며 녹화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연합측이 김현호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일 갖자, 인천 동부경찰서는 경찰규단 연설을 했던 인천연합 김국대 집행위원장 등 6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현장〉 민가협 목요일집회

###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동절기 강제철거를 당해 지금은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군사정권 치하의 이야기도, '문민정부' 시절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지금 '국민의 정부' 아래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다. 10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일집회에서는 지금도 쉼없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건과 강제철거의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씨의 재판소식,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중인 박경순 씨의 옥중투병소식,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범민족대회 개최) 혐의로 구속된 박해전(범민련 남측본부 대변인) 씨 연행소식, 10년 가까이 공개적 활동을 해오던 청년단체 회원들이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 등 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잇따랐다. 그리고 지난 1월 강제철거로 보급자리를 빼앗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은 "오갈 데가 없어 서울시청 앞에서 보름이 넘게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처지를 털어놨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자유권조약)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사회권조약)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 감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학문 탐구와 사상의 소통이 여전히 범죄행위가 되고, 축구경기장을 짓겠다며 서민의 보급자리를 빼앗는 야만은 여전히 것이다.

민가협 상임의장 임기란 씨는 "여당 인권위원장을 만나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청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표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더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의 잇속 앞에서 한 양심수의 생명과 가난한 서민들의 삶은 휴지조각만도 못한 게 우리의 자화상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12일(토)

제 155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갈수록 불안한 '핵'과의 동거

### 전남 영광 주민들, 생존 위협 가중

핵발전소가 위치한 전남 영광군 주민들이 느끼는 생존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핵발전소가 설치된 지 20여 년이 지난 영광은 핵발전소에서 뿜어내는 온수로 인해 연안어장의 고갈이 가속화되고 농업마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 김영복(어업, 40)씨는 "해풍에다 밀려야 하는 굴비는 발전소 때문에 아예 생선이 중단된 상태며, 고추나 배추같은 농산물도 계약과기가 잦아 판매가 어렵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심지어 발전소 직원의 가족들마저

저 광주까지 나가 식료품을 사오는 실정이다. 김 씨는 또 "발전소 추가 건설작업에 사람들이 동원돼 농사나 어업에서는 항상 일손이 부족한 상태"라며 "당국은 이런 문제들을 보상금만으로 해결하려고 해 주민들 사이에서도 노력해서 열심히 산겠다는 의지가 사라진 지 오래며 빛만 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핵발전소가 위치한 이 지역 주민들의 암사망률은 다른 지역보다 평균 3배에서 5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영광

사람들과는 혼사조차도 기피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소 인근 어민들 2천여 명은 지난 1월 26일 서울에 올라와 정부를 상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다.

### 4년새 사고만 10여 차례

무엇보다도 영광핵발전소의 잦은 사고가 주민들의 불안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7일 원자로 고장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됐던 제4기 발전소가 재가동 5시간만에 또 다시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관계당국은 안이한 대응과 변명으로 일관해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7일 사고 직후 과학기술부와 한국전력은 "발전소 안팎의 방사선 피폭은 없었으며, 사고·고장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인 0등급"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96년 발전을 시작한 이래 벌써 10여 차례나 사고를 내고 있는 제4기 발전소에 대해 주민들은 쉽사리 불안을 떨칠 수가 없다. 게다가 이번 사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돼 정부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불과 3개월만에 발생한 것이다.

영광핵발전소추방대책위 하선종 사무국장은 "이번 사고도 민간감시기구에서 발전중단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며 "핵발전소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비밀에 쌓여있어, 방사능이 누출돼 지역을 봉쇄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광지역 주민들의 또 한가지 불만은 "핵발전소 사고문제를 영광지역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국민들"이다. 주민들은 "방사능유출은 광주나 서울 같은 대도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다 많은 사회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 장애인차별대학 검찰에 고발

### 장애우단체, 유사 사례 모집

〈속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교 입학원서 접수를 거부당했던 황선경(28·시각장애 1급) 씨가 원서접수를 거부한 청주대학교측을 11일 특수진흥교육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0일자).

특수진흥교육법 제 13조(차별금지 등)와 제28조(벌칙)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중별 및 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황선경 씨는 "내가 당한 일을 다시는 후배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며 "장애인도 사람이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 씨와 함께 청주대를 고발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도 "장애를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입시에서의 차별 사례를 계속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연락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521-5364 / 이메일 : cowalk@chollian.net〉

한편, 청년전보당(대표 최혁)도 11일 성명을 발표해 "장애인 권익에 반대하는 학교지정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 판결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수노조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욱이 이날 판결은 노동부가 그동안 공식처럼 사용해온 '복수노조-불법'이라는 등식에 다시 한번 쐬기를 박는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장현)는 11일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하역노조)이 낸 단체교섭거부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두 지부 설립이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노동부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노조 금지와 관련한 노동조합법 부칙은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설립만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신시대·우암부두 지역에 하역노조 지부 설립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노동부 장관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부칙은 노동부장관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강구 의무를 부

과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방안은 병존하는 노동조합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 단체교섭권 인정받아

이로써 신시대·우암지역 하역노조지부 인정 여부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부의 싸움은 노동부의 역할 제한, 또 하나의 복수노조 탄생이라는 큰 성과물을 얻어내면서 민주노총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9일 이미 한국노총 산하 하역노조가 건설돼 있는 신시대·우암부두 지역에 민주노총 산하 하역노조 지부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같은해 12월 29일 노동부가 '두 지부 설립은 불법'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리면서 마찰이 심화됐다. 하역노조는 이미 법원에서 복수노조를 인정한 판례가 있음을 근거로 노동부 지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고 고속도로 저속운행 등 준법투쟁을 벌

이기도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해 하역노조 조합원들이 하역노조지부 노조원들을 집단폭행하는 사태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결로 하역노조 산하 신시대·우암부두지부 노동자들은 현재 이들의 사업장인 신시대컨테이너터미널 사측을 상대로 하역노조와 동일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됐다.

### 어용노조에 부당노동 '합승' 동경택시, 결국하면 해고

한 택시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복직된 노동자들에게도 차별대우와 해고의 위협을 늦추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동경택시 해고자 이근철(전 세림노조 위원장, 44) 씨는 "회사가 비밀리에 노조를 구성해 신고하고 70만원이던 월급을 52만원으로 인하했다"며 "사납금을 올리면서도 가스 충전량은 오히려 줄여 모자라는 부분은 사비로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노위의 복직판단을 기다리는 이 씨는 "동경택시는 결근을 하는 경우 가차없이 해고한 후 재고용하는 편법으로 1년 이상 된 근속자가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동경택시에서 해고 후 복직신청을 낸 4명의 노동자중 서기현(420 씨 등 3명이 지난해 12월 복직됐으나 이들의 일자리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서기현 씨는 "조합원 투표없이 사장이 조합장을 임명한 것에 항의하자, 지난해 6월 해고당했으나 지노위의 복직판정 후 3개월이나 기다렸다"며 "복직 후에도 폐차직전의 노후차량을 쥐 하루가 멀다하고 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동경택시는 일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복직자들에게 일요일 노동을 강제하고, 거부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서 씨와 함께 복직된 노영균(40) 씨도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비만 하루 2만 원이며, 다른 노동자는 12시간 일하는데 복직자들은 7시간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납금을 내기조차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행사와 동정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15차 총회 및 기념식
  - 때: 2월 12일(토) 오후 2시 · 장소: 서울 기독교회관 2층 강단
  - 주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02-764-1684)
  - \*단, 외부 인사는 오후 5시부터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진보네트워킹센터 2월 정보통신 정기강좌
  - 때: 2월 14일(월) · 장소: 진보네트워킹센터 교육장
  - 강좌내용: 인터넷 정보검색, 홈페이지 제작, Office 강좌, LINUX 활용 등
  - 문의: 진보네트워킹센터 (02-7744-551)
- 매항리 문제해결 촉구대회
  - 때: 2월 16일(수) 오후 1시 반 · 장소: 매항리 폭격현장
  - 접수: 2월 14일(월) 오후 5시까지 (문의: 02-3676-5808 김종섭)
  - 주최: 매항리 대책위,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 충선시기 민중진영의 공동투쟁전략 토론회
  - 때: 2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숭실대 사회복지관
  - 주최: 민중대회위원회 (02-676-4275)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15일(화)

제 1554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 “지원요청 않겠다” 각서요구

### 청주대, 장애인편입에 억지조건 제시

장애인 편입학 원서접수를 거부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청주대학교가 입학 조건으로 각서를 요구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청주대학교는 황선경(28, 시각장애 1급) 씨의 입학원서를 거부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12일 황 씨의 입학원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2월 10일자). 그러나 학교측은 그날 오후 황 씨를 불러 "입학 이후 학업에 필요한 시설 등의 지원 요청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써라"며 각서를 요구했다. 또한 14일에는 황 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앞으로 다니게될 학교를 고소해서야 되겠다"며 고소취하를 요구해왔다.

이에 황 씨는 "입학을 조건으로 각서,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교육권 침해"라며 "내가 만약 각서를 쓰는 등 학교측 요구에 응한다면 앞으로도 나와 같은 사례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저러지고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각서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청주대측이 각서요구를 취소하고 황 씨의 원서접수 거부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한 교발을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씨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1일 청주대학교측을 특수교육진흥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서울교육대학교에서도 시각장애 이인란 이유로 김훈태 씨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처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한쪽 시력이 1.2인데 반해 한

쪽은 전맹으로서, 학교측은 김 씨가 모집요강인 양안교정시력 0.4미만인자로 불합격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계속 밝혀지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장애인입학을 거부하는 입시요강을 가진 학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경찰 불법사찰 들통나

####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녹음

경찰이 노조행사를 불법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은 "지난 10일 은평 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경숙 경장이 보건의료노조 제 3차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는 여성개발원(서울시 은평구)으로 찾아와 방송실 관계자에게 대의원대회 전 내용을 녹음해달라고 부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송실에서 녹음된 테이프를 압수하고 관련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비난하며 책임자 문책과 당사자의 사법처리, 대국민 공식사과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역시 14일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개적인 대의원대회를 경찰이 불법사찰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경찰의 사찰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며 "경찰청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일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은 김 경장을 대기발령시키고 서울시 경찰청장과 은평경찰서장 등을 보건의료노조에 보내 사과를 뜻을 나타냈다.

### 해고자 미행하는 삼성

#### 가는 곳곳 쫓아다니며 감시

지난 10일 삼성해북투(김성환 위원장) 소속 7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원직 복직 결의대회를 마치고 천안으로 이동하던 중 삼성그룹 관리자들이 이들을 천안까지 미행하며 감시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있다.

삼성해북투는 "서울 고속도로 매표소에서 미행차량을 발견하고, 신동수 노동과장(부산 삼성전관)에게 미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천안까지 따라왔다"며 "이에 재차 항의하자, 신 과장은 천천집에 간다며 얼버무렸다"고 밝혔다. 이들이 천안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자 신 과장 일행도 쫓아 들어왔으며, 천안 삼성전관의 박내완 노동관리과장, 박재원 인사과장 등이 식당입구에 기다렸다가 해고자 고영선(수원 삼성전관, 37) 씨 등에게 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고 씨 등 해고자 일행이 이를 거절하고 수원공장으로 이동하자 신 과장 등의 삼성그룹 차량들도 수원까지 따라오다 노동자들이 달려나가자 도망갔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노동자에 대한 삼성그룹의 미행과 감시는 항상 있었던 일"이라며, "찍어놓은 사진 등으로 삼성그룹의 노동자 탄압을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수원삼성전관에서 노조를 설립하려다 강제사직 처리된 노동자는 고영선 씨 등 총 4명이다.

인권  
시평

### 평화를 위한 반성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전쟁 속에서 우리가 선 곳은 언제나 피해자의 자리였다. 반세기 전의 태평양전쟁 속의 정신대가, 한국전쟁 당시의 노근리 학살이 그러했다. 진상규명, 공식사과와 배상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요구였다.

최근 밝혀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의 진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가까운 가족 중 두명이나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어릴 적 그들이 가져다준 김치와 고기통조림의 맛도, 베트남 어린이를 안고 있는 선한 한국군 사진이 실린 엽서도 생생히 기억한다.

양민학살의 진상은 물론, 지난 30여년간 가해자인 우리의 침묵했던 모습에 또한 전율을 느낀다. 지난 1964년부터 8년 넘는 기간동안 파병된 한국군은 32만여명. 그중 1만명이상이 부상당했고 아직도 이만여 명이 고엽제와 정신적관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전사한 한국군의 수는 5천여명, 그 수만큼 베트남양민이 학살되었다. 베트남 여기저기에도 수많은 노근리가 있었던 것이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라는 월남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전쟁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들의 몸과 마음 속의 전쟁의 잔해는 그대로이다.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 전사한 군인과 그 가족들, 무고하게 죽은 민간인들, 부상의 후유증을 앓는 참전병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한국군을 아버지로 둔 '라이 띠이한'들. 그들 모두에게 '아직, 평화는 없다'.

'과거를 덮고 미래를 향해'가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원칙적인 정책이라 한다. 한국이 베트남의 4위 교역국이고, 5위의 투자국이어서, 또한 형식논리상으로 따지면 양민학살의 궁극적 책임이 베트남정부에 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어쨌든 양국정부 모두 양민학살문제를 덮어 둔 채 그냥 넘어가기 바라는 듯하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소망이다. '전쟁에 대한 반성'없이 평화가 거저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신대문제나 노근리학살을 그대로 덮고가지 않음도 그 이유가 아닌가.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참전군, 학살된 양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보상이 절실하다. 전쟁의 그늘을 덮어둔 채 평화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올해는 UN이 정한 평화의 문화해이다. '21세기 평화와 화해는 20세기의 '전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함을 생각해본다.

#### 주요공판안내

▶2월 15일(화)

통일방북대표단 선고공판- 나창순(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등 6명, 서울지법 311호, 오전 10시

:99년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에 참석한 후 방북. 그해 9월 2일 관문점을 통해 귀국했으며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고무찬양 위반혐의로 구속

###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1. 장애인 입학 불가 선포한 대학들  
청주대에 편입학을 하려던 황선경씨가 시각장애인이란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금지 당해 /서원대, 건국대도 같은 입장 (2/9)

2.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부산지법,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 (2/11)

3. 제소자 고소권 방해 불법  
대전지법, "교도관이 제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제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2/10)

4.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개정된 선거법 1인1투표제 유지, 기탁금인상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 진보세력들 비난 이어져 (2/8)

5. 방북대표단 보안관찰 취소 판결  
한총련 대표로 95년 밀입북했던 정민주 씨에 대해 서울고법, "국보법상 잠입탈출 등의 행위를 다시 할 위험성이 없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안관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 (2/13)

6. 경찰서에 가서 청소 안하면 맞는다.  
서울 남부경찰서 형사들이 피의자 김아무개 씨에게 청소를 시키고 김 씨가 항의하자, 형사 4명이 달려들어 얼굴과 허리 등을 발로 밟는 등 폭력행사 (2/13)

7. 이근안 7년 선고  
남북어부를 고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근안(61·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씨, 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로 징역7년 선고 (2/10)

8. 동맹휴업불사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백여개 대학 총학생회는 등 록금 인상저지를 위해 동맹휴업과 단식농성 선언 (2/9)

<국제소식>

1. '광란의 세계화' 비판  
방콕에서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에 참가한 수천명의 시위대, "세계화가 전세계를 혼란과 불평등, 광란으로 몰고있다"며 "개도국에 이익을 주고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계금융제도 개혁" 요구 (2/12)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친·하·침)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16일(수)

제 155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 미군문제, 함께 푼다

### 매항리 미군사격장, 주민생존 위협

사회단체들이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된 각종 인권·환경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불평등한 SOFA(한미행정협정) 개정 국민행동, 전국연합 등은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연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이 어떠한 결실을 보게될 지 주목된다.

한 SOFA개정 국민행동의 김종섭 씨는 "매항리의 문제역시 다른 미군기지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미군기지에 대한 무상영구임대를 전면개정해 임대계약체결 및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고, 시설과파괴 시 원상회복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단체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오늘 오후 1시 30분 매항리 폭격장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10대 개혁안 시행 촉구

한편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열린마당 공원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국민행동은 △소파대상 범위 축소 △사법권 확보 △미군범죄자 신병 확보 △기지임대 협정서 체결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미군 보유무기 공개 △방위비특별협정 폐지 △미군범죄자에 대한 한국정부 재정지출 중단 △미군부대내 노동권 인정 △미군에 대한 면세특권 제한 등 총 10대 개혁안의 시행을 촉구했다.

새로 나온 책

### 「자퇴일기」

1999/ 탈학교모임 지음/ 도서출판 민들레/ 232쪽/ 6천5백원

'틀린 길이 아닌 조금 다른 길' '세상 밖으로' '끝없는 고통 공급소를 나와' '외로운 투쟁' 탈학교모임 친구들이 표현하는 "자퇴"의 다른 말이다. 이들은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교육환경, 획일적 억압의 공간인 학교를 벗어나 스스로 자퇴를 선택했다고 당당히 말한다.

문제아, 사회부적응자, 현실도피자, 날나리... 자퇴에 대한 부정적이고 일반적인 세상의 편견으로 부터 홀로 서야 하는 자퇴생들의 '새로운 삶'의 이야기들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결코 '잘 나서 혹은 못나서 자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은 그냥 조금 다른 길을 가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세요'하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학교 밖 세상이 자퇴생들에게 너그럽지 않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자퇴를 삶의 일부로, 후회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이들은, 주체적 삶을 꾸러가기 위한 깊은 고뇌와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로 '자퇴생 편견'을 씻어 내게 한다.

자퇴일기에는 자퇴를 하면서 느낀 청소년들의 고민과 더불어 이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세상을 바라보는 '탈학교모임'이 소개돼 있다.

탈학교모임은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사진강좌, 사상연구모임, 만화강좌 등 각각 하고 싶은 소모임들을 꾸러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검정고시 및 대학입시를 위한 학습공동체, 학습문화소모임, 탈학교청소년소시지발간 등의 일도 계획하고 있다. (◆ 구입문의 02-322-1603)

#### 미군'우리'에 갇힌 매항리 주민들

1951년부터 미군 폭격장으로 사용된 매항리는 매해 2백50일 동안 기관포와 기총사격, 레이저포 등으로 1일 6백회 내지 7백회의 연습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탱크피리트 훈련과 같은 특별 훈련기간에는 24시간 내내 사격연습이 이뤄지며, 모의 원폭투하 훈련도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매항리 주민들은 생명에 대한 위협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와 군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수십년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왔다. 그 결과, 오폭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주민들이 30여명이 넘지만 어디 한군데 주민들이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 또한 폭격에 의한 매항리의 소음정도는 주거가 불가능한 평균 90데시벨 이상의 살인적 수치로 주민 대다수가 청각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로인한 정신질환과 자살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다.

이와 같은 매항리상황에 대해 불평등

###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경찰이 '대외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찰자료에 대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동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주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부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정보는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경찰이 수집한 민주노동전북본부와 군산시민모임의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나머지 5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경찰의 정보사찰 자료공개거부와 관련해 "경찰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개연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7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임의적으로 위 두 단체의 자료만을 공개해 법원이 이를 토대로 판결한 것으로 나머지 단체들에 대한 자료는 제대로 법원에 공개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번 판결은 나머지 단체들에 대한 사찰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주시민사회단체들은 98년 10월 경찰청이 전국지방경찰청에 주요인사와 사회단체 등의 동향카드를 작성해 보관하라는 방침을 내리자 전북경찰청에 정보사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이 자료공개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 상암동 주민 경찰서에 연행

주민 모두 구치소, 유치장 행

감제철거에 항의해 가수용단지 건설을 요구하며 시정 앞에서 농성을 벌여오던 상암동 철거민들이 15일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이로써 상암동 철거민 4명 전원이 모두 구치소와 유치장에서 이 겨울을 나게 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신유근(55) 씨 부부는 현재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과 시정 측은 이들 부부의 농성이 계속되자 지난 설연휴 동안 이들을 강제로 강남시립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8일, 2월 8일자).

앞서 신 씨 등과 함께 농성을 벌인 상암동 철거민 이동수 씨 등 2명은 이미 불법시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편집자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책임을 막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 대법원 제 1부

사건 : 98다57259 손해배상(기)  
원고 : 허동준, 김낙규 외 14명  
상고인 : 대한민국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 원심은 노량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996. 8. 28. 05:00경 중앙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화염병 등 시위용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완전무장을 한 채 진입봉을 들고서 학생회관에 진입하여 학생회관 내의 동아리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원고들(원고 허동준을 제외)을 강제로 나오게 한 후 벽을 향하여 세워 놓은 채 위 동아리방 등을 수색한 후 위 원고들에게 연행이유나 연행장소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원고들을 경찰버스에 강제로 태워 노량진경찰서로 연행하였고 당시 우연히 중앙대학교 정문 앞을 지나다가 수위실에서 경찰 진입 경위를 물어보고 있던 원고 허동준을 강제로 노량진경찰서로 연행한 후 원고들에게 신분증을 제출하게 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게 하고 노량진경찰서 건물 5층 무도실에 원고들을 구금한 다음 1996. 8. 28. 11:00경부터 원고들을 지하실에 있는 수사과로 데리고 가 원고들이 연행당시 왜 그곳에 있었고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8.15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는가에 관해 조사를 하고 같은 날 12:00 무렵 원고들을 석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화염병을 보관한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는 원고들을 체포, 구금한 행위는 긴급구속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의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편집자 주 -연행 및 체포이유 고지(영장제시), 변호인 선임기회 고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현행범, 긴급구속 및 임의동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중략)

2000. 2. 8

재판장 대법관 서성, 주심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신성택, 유지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17일(목)

제 155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매항리 미군 사격장을 찾아>

## 학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전투기가 날아오더니 폭격을 시작하더군요. 사망으로 떨어지는 포탄을 피하기 위해 소나무 밑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내 앞으로 독사 한 마리가 기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난 몸을 움직이긴커녕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랬던 틈틈이 포탄에 맞아 죽거나 반병신이 될거였기에...". 이곳 매항리에선 그런일이 비밀비재하다는 전만규(46·매항리 미공군폭격소음 공해 대책위원회 위원장) 씨는 사회단체 활동자들이 이곳에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했다. 외지인이라도 올 낮이면 미군의 폭격이 중단돼 자유롭게 갯벌에 나가 굴과 조개를 팔 수 있는 평온함을 맛볼 수 있기에, 갓난아이 등에 업고 산 보기는 기분으로 동네 한바퀴 돌 수 있기에, 그는 가끔 외지인을 등에 업고 서라도 지난 46년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평화를 느껴보고 싶다고 했다.

다. 전 위원장은 "사격장이 생긴 이래 만삭이 된 임신부가 굴을 따다 포탄에 맞아 죽은 것을 비롯해 주민 9명이 목숨을 잃고 13명이 평생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었다"며 "지난해에도 로켓탄과 버드탄이 마을 한가운데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투기 저공비행과 폭격으로 인한 소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 매항리의 소음정도는 국제사회가 주거불능지역으로 정한 90DB를 훨씬 뛰어넘는 80-150DB. 주민 우종근(50) 씨는 "고막이 찢어지는 폭음소리에 내 머리가 잘못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며 "지붕이 내려앉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쫓소와 닭 등의 사산도 찾아 가축도 못 기르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 정부·미군 주민고통 외면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과 한국정부는 주민들의 신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미군은 한미행정협정을 이유로 주민들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사격장 이전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오폭사고로 인한 사상자중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에 불과하며, 폭음에 소 30마리를 잃은 한 주민은 겨우 1백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울분을 삼켜야 했다. 주민 대부분이 땅을 미군기지로 징발당했고, 그나마 생계를 잇던 어업마저 잦은 폭격으로 출정을 못해 심각한 생계위협을 받고 있지만 지난 50년간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 "한국인, 좋은 실전대상"

"미군은 주민들의 이주를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있어야 조종사들이 실전처럼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는 주한미군 뿐 아니라 일본과 괌, 태국 등지의 미군 전투기까지 날라와 폭격훈련을 하죠". 주민 김동기(46) 씨는 이런 미군의 속셈을 알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투쟁을 시작했다고 했다. 쌓여온 주민들의 분노는 88년 주민대책위원회 건설과 미군기지 점거로 이어졌다. 매항리 주민 1천여명은 88년부터 3차례에 걸쳐 미군기지를 점거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군과 한국정부는 경찰과 무장군인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했고 주민 2명을 구속시켰다. 그후 주민들은 심한 무기력증에 빠졌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너무도 처참히 짓밟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몇몇 주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다. 지난 98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조만간 유리하게 내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평화·인권단체들이 적극적인 연대를 선언하면서 16일에는 매항리까지 내려와 연대 집회까지 개최하고 올라간 것.

#### 농심에 심은 꿈

갑자기 "꽝"하는 폭음이 들리더니 해양 사격장인 농심 위로 흰 연기가 솟구쳐 올랐다. "본래 이곳엔 섬이 많았는데 폭격으로 모두 유실되고 저 농심도 이제 1/3밖에 남지 않았죠. 저 농심마저 바다속으로 영원히 가라앉기전에 한번 가보는게 주민들 꿈입니다"라며 허허거리는 주민들. 이들은 오는 2월 말 다시한번 미군기지 앞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갖을 계획이다. 자식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가슴앓이를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 전도사, 캄드쉬도 혼장감

## 빈곤인구 1천만불구, 외환위기 조기극복에 감사

최근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미셸 캄드쉬와 IMF 전 아시아·태평양 국장 휴버크 나이스에게 훈장 수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13일 "IMF의 적극적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마침 두 사람이 현직에서 물러나는 만큼 감사의 표시로 훈장 수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15일 성명을 내고 "IMF가 강제

한 구조조정과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대량실업과 임금저하, 고용불안과 소득자 증가 등 소득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온 것은 물론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반이상이 넘는 기현상이 나타났으며, 최저생계비가 25만원 이하인 빈민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가고 있다"며 "캄드쉬와 나이스에게 훈장을 수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비난했다.

국민행동은 또한 "현정권은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은 더욱 유린되고 있음에도,

IMF의 본질을 왜곡해 IMF졸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인간과 사람중심의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전세계적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무역개발회의에 참가한 캄드쉬는 한 반자유무역주의자로부터 파이팅을 당하기도 했다.

### '최저생활보장' 요구

####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집회 열어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서울대 시설관리노동자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서울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서울대 시설노조, 위원장 윤홍립) 노동자들은 15일 영하 9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임금인상과 △불합리한 입찰방식 개선 △용역소장 퇴진 등을 요구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 자).

이들은 "서울대가 지난 95년 구조조정이란 명목하에 시설관리부분 노동자들을 용역직으로 전환한 이후 최저생활도 영위하기 힘들만큼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서울대학교측이 돈을 이유로 힘없고 배운 것 없는 노동자의 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현재 서울대학교측과 계약을 맺고 시설관리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대한안전관리공사(대표, 대표이사 조규석)측에 대해서도 울분을 터뜨렸다. 이들은 "서울대가 시설관리에 산으로 28억을 책정해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호측이 입찰을 따내기 위해 훨씬 적은 23억을 제시한 후, 그 사이에 생긴 차액을 노동자들의 월급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현재 보너스는 물론 퇴직금마저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월급 역시 32만원정도에 불과하다"고 한탄했다.

서울대 시설노조는 지난해 말 2000년 시설관리용역업체로 대호가 선정된 이후 입찰가의 부족액을 보충키 위해 대폭적인 임금삭감을 단행하고 퇴직금 포기 각서 등을 요구하자 지난 1월 25일 총회를 갖고 노조를 발족시켰다.

### 호주 BHP사 노동탄압에 맞서

## 국제연대에 나선 삼미특수강 노동자

부당해고를 당해 고용승계 싸움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바다 건너 외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3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호주의 한 다국적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탄압에 항의하며 노동법 개악 국제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은 오늘 오후 2시 종로 제일은행 앞에서 '호주 BHP노조 탄압 규탄 한국 노동자 시민 결의대회'를 가진 뒤, 호주 대사관을 방문해 BHP노조 탄압중지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전달할 계획이다. 삼미특수강 지도위원 성철원 씨는 "얼마전 호주 철강업체에서도 단체협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97년부터 시작된 우리 싸움에 호주 등 외국의 노동단체들이 항의성명을 보내는 등 연대투쟁을 해주었던 것이 항상 고마웠는데 모처럼 빛을 갖게됐다"며 연대투쟁에 나선 취지를 밝혔다.

광산·철강업체인 BHP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사측은 지난해 말 노동자들에게 개별계약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등 파행적인 운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광부들과 함께 파업을 벌이기도 했으며, 호주 연방법원 역시 노동자의 개별계약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호주정부는 개별계약 체결과 노사정위원회 위상 약화 등을 핵심골자로 하는 노동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호주노총은 노동법 개정안에 항의하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및 동일 노동조건 보장 △노조의 대표성 인정과 단체협상 인정 △개별계약 반대를 주장하며 쟁쟁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제연대투쟁에 동참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포항제철의 정리해고에 맞서 3년 넘게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로 지난해 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포항측이 계속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18일(금)

제 155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학교에 가고 싶어요”

### 불법체류자 자녀 입학 기회 차단당해

입학시기가 다가왔지만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자녀들에겐 학교 문이 텅 없이 높기만 하다.

17일 성남의 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르갈(12·몽골)은 아직 중학교를 배정받지 못했다. 한반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모두 졸업장을 수여받았을 때 자르갈이 받은 것은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이었다. 그가 청강생이라는 것은 정식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기에, 그는 한국을 떠나지 않는 한 영원히 학교에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르갈 같은 청강생은 그나마 운이 꽤 좋은 편에 속한다. 거의 모든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문앞에도 가보지 못한 채 사설학원이나 종교·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맡겨져 간단한 한국어와 기본적인 지식만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종교 문제로 고국을 떠나 한국정부에 망명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해 불법체류자가 된 빌랄(14·파키스탄) 역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 안산의 한 공부방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또래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가보는 게 소원이라는 빌랄은 "공장에 다니는 형도 공부를 하고 싶어한다"며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말한다. 같은 공부방에 다니는 따와(12·몽골) 역시 스무살이 되면 미국에 갈 거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대학 농구선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난해 말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인 약 38만명. 이중 전문직 종사자와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12만명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외국인들은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에 정착한 불법체류자들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수가 20만명이 넘다보니 자녀들의 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지만 거의 모든 아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다보니 입학 시 제출해야하는 거주지 증명서가 없기 때문이다.

### 어른들이 아이간 교육받을 권리

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성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울 수라도 있지만 아이들의 경우 이것마저 불가능해 무책임한 어른들 속에서 학교에 갈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공부방(경기도)의 박인애 총무 역시 "아이들에게 부모가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마저 빼앗

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라며 "이 아이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한 사무관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타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육부 독단으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교육부측의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그는 "교육부가 대한민국 학생들만 책임지면 되지 불법체류자들의 자녀까지 책임져야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다.

하지만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대표 김해성 목사)의 정금자 씨는 "교육부가 입학 서류질지만 손질해도 아이들은 충분히 학교에 갈 수 있다"며 "청강생 제도 역시 교육부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학교는 교육부의 눈치를 보며 청강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모가 불법체류자란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어른들의 틈바구니에서 평생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 불법사찰에 고개숙인 서울시경

##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교육 약속

<속보> 경찰이 불법사찰을 행한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다. 서울시경찰청(청장 윤용섭) 관계자들은 17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를 경찰이 불법복음한 사안에 대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5일자>.

서울시경측은 사과문에서 "지난 2월 10일 은평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아무개 경장의 잘못으로 민주노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김 경장을 직위해제조치하고 감독자인 정보계장도 징계질차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경측은 "경찰은 노사문제에 대하여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2월 17일, 18일 이틀간에 걸쳐 일선경찰서 정보과장 및 계장을 소집해 교양하고 빠른 시일안에 전직원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서울경찰청 차원이 아닌 이무영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논의"를 요구했는데, 우선적으로는 18일로 예정된 경찰청 앞 집회를 취소하고 법적 대응도 일시 유보했다.

민주노총의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 <논평>

###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정형근 의원이 드디어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과 강경하게 복비권으로 대응하는 정 의원의 태도가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정형근 의원은 그간의 행태에서 확인되었듯이 무책임한 폭로정치와 색깔론과 지역감정을 들먹인 퇴출 대상 1호 국회의원으로 지목 받아왔다. 그는 검찰의 제포를 피해 한나라당사에서 머물면서 다시 '좌익광란의 시대'나 '홍위병'이니 하는 발언을 통해 매카시적인 흑색선전을 선동했다. 그의 이런 행태 때문에 야당은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수 차례 방탄국회를 열었고, 정치바람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시민사회단체들마저도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꺼려왔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피소된 사건이야 제쳐놓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그가 공안검사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시절의 고문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되어야 했던 것이다. 당연히 거쳐야 할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그는 국회의원이란 직분을 남용해 정치는쟁화시켜왔던 것일 뿐이다.

그의 고문경력은 서경원 전의원 사건, 사노맹,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의 피해자들의 진술과 고소, 고발로 입증된 상태이며, 당시 함께 근무한 안기부 직원들의 목격 증언이 있으며, 박종철, 김근태 고문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정황들이 여러 차례 보도까지 된 상태.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이근안과 같은 고문기술자들을 부리며 군림했던 독재권력의 하수인이었다.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 이제라도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검찰과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철레의 피노체트 석방에 대해서 분노했듯이 정 의원의 고문 행위에도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 우리는 정 의원의 의원직 박탈과 그의 구속, 사법처리를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경찰의 기본업무가 불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경찰이 이번 기회에 대오각성하지 않는 한 불법사찰의 재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경측은 민주노총 방문 시 윤용섭 청장의 직인이 찍힌 공식 사과문을 가져왔으나 대외적으로는 비공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고용승계 요구 쇄사슬 시위 둔산자동차 노조원, 농성 305일째

둔산자동차학원(둔산학원) 노동자들이 중부대성학원(사장 양찬근)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9일째 쇄사슬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구나 이번 시위는 지난 7일 중부대성학원측이 고용승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것이어서 험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충남 대전에 위치한 둔산학원은 지난해 2월 노동자들의 노조결성을 계기로 폐업했다. 사장과 지역 자동차학원 사업주들이 노조가 생기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업장을 위장폐업한 것이다. 그후 둔산학원은 중부대성학원으로 인계됐는데 중부대성학원측 역시 노조를 해체하지 않는 한 고용승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와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중부대성학원 앞에서 3백여일째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로 중부대성학원측과 노조원들은 노조원 10명의 경력을 인정하고 재고용하는데 가까스로 합의했는데, 돌연 중부대성학원측이 사흘만에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은 다시 시작됐다.

둔산학원 노조위원장인 오철수 씨는 "둔산학원에서 우리는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노조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시측은 우리의 분노에 귀 기울이기보단 사업장을 위장폐업시키는 등의 조치로 일관했고 결국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중부대성학원이 우리를 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며 비장한 결의를 밝혔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19일(토)

제 155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탈북 후 국제미아가 된 김용화(47) 씨를 돕기 위한 운동이 시작됐다. 북한 철도부 승무원으로 일하다 88년 열차사고에 연루돼 탈북한 김 씨는 그 후 중국과 베트남, 한국을 전전하다 일본에서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돼 현재 오무라 수용소에 갇혀 있다.

탈북 후 중국으로 건너가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을 했으나 북한을 탈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한 그는, 이후 베트남 등지를 떠돌다 95년 한국으로 밀항해왔으나 중국 거민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탈북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거기다 중국정부마저 중국인이라는 확인서를 보내오면서 완전히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그는 98년 일본으로 밀항했다.

일본 밀항 후 그는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일본정부가 중국으로 강제송환하려하자 이에 불복해 퇴거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년동안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98년 7월 15일, 8월 5일자>.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일본 동포 사회에는 김용화를 지지하는 모임이 꾸러졌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김용화와 함께 하는 모임'이 결성됐다. 이들은 김 씨의 사연을 통신으로 사람들에게 알려내면서, 김 씨에게 편지와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있다.

'김용화와 함께 하는 모임'의 조서영(YMCA 간사) 씨는 "김 씨가 한국에 돌아온다면 탈북문제에 상징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조서영 02-735-4610/ email: dian-joy@hanimail.com)

난민이사국 감투가 아까운 정부

한편 한국정부는 최근까지도 김 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는 김 씨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밀입국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난민 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역시 "김 씨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 바 없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주일한국대사관과 외교통상부마저 김 씨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해 한국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이사회 이사국이라는 사실을 무색케 했다.

### 민주 학교운영, 아직도 멀었나 학운위 선정, 학교장 맘대로

최근 교육부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구성과 관련해 학교장이 교원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자,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학운위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돼, 학교 재정과 운영 등 교육자치 전반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교육개혁을 위한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기구다.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추천된 교원위원을 학교장이 위촉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구성된 학운위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돼 사학법인에 의해 교육감 선거까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상문교와 한서고 사태에서 보듯 우리나라 사학은 법인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비록 교원전체회의에서 교원을 추천한다고 해도 학교장이 추천교원을 위촉하지 않거나 복수추천이 가능한 경우 추천권은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이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 행사와 동정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9기 정기대의원대회 및 출범식
  - 때: 2월 20일(일) 오후 1시
  - 장소: 동국대학교 중강당
  - 주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02-3273-2890)
- 노동운동가 고 최명아 씨 추모미사 및 추모식
  - 때: 2월 20일(일) 오전 11시
  - 추모미사: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
  - 추모식: 진주시 금산면 농민의 집
  - 문의: 최명아 추모사업회 (011-740-3606)
- 투자협정·WTO국민행동 홈페이지 개설
  - 주소: http://antiwto.jinbo.net
  - 한글·영문 사용 (02-778-4007)
- 격월간 인권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 구독문의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민주연대 (02-3276-5808)

특별  
기고

#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최종수 신부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편집자 주) 지난 14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문화관광부에 용산미기지내 헬기장을 서울 이촌 1동 한강고수부지로 이전할 방침이라며 대지 1만 5천평을 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은 문화관광부에 이 요청을 수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미8군 사령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며,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미군의 헬기장 한강고수부지 이전에 관한 문제점을 들어왔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문화관광부에 사전협의없이 용산미기지내 헬기장을 한강고수부지로 이전하겠다고 통보했다. 과연 이 나라가 주권이 있는 나라이고 그 주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되묻게 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다시금 미군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해야만 한다.

2차대전의 전범국이며 패전국인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통치를 당해야만 했다. 프랑스, 영국, 미국은 독일의 영구한 분단을 원치 않고 통독이전의 서독으로 주권을 이양했다. 하지만 동독에는 구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소련군이 주둔하는 민족분단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같은 2차대전의 전범국이며 패전국인 일본은 분단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미국이 중공과 소련의 견제를 위해 한반도를 소련과 분할통치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는 전일파와 이승만 친미주의자들만이 원하는 집단이었다. 이로 인해 민족이 분단됐고 6. 25 동족상잔의 원인이 됐다. 말하자면 일제국주의에서 미제국주의로,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올라간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치욕의 현대사가 미군 존재의 원인이다.

미국에 의한 남북분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노근리, 이리역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서 양민학살을 자행했

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공식적인 사과 는 물론이고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를 노근리로 축소하려는 오만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저지른 국민학살 성추행을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국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경우와 너무도 대조적인 반응이다.

## 한강에 미군기지를 만들자고?

치누크 20인승 헬기 6대가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1만 5천평 이상의 부지를 제공해 줄 것, 홍수에 피해가 없도록 6m 이상으로 부지를 성토해 줄 것, 이촌역 앞에서 고수부지 헬기장까지 전용도로를 건설해 줄 것 등의 구체적인 요구를 통보했다.

한강은 우리 민족의 상징이며 젖줄이다. 한강고수부지는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온 국민의 휴식처이다. 또한 고수부지는 홍수시 범람을 막아주는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안전막이다. 한강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도 물의 흐름을 막는 요인이 되기에 다리 건설시 물의 흐름에 최대한 지장이 없게 설계한다. 이러한 한강의 상징성과 기능을 무시한 주한미군의 처사는 한마디로 신식민지적인 발상이며 주권침해이다. 미군기지로 인해 2번의 물난리를 입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던 제2의 파주물난리를 자행하겠다는 통보이다. 1만 5천평 이상을 6m이상 성토한다는 것은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한강의 범람을 우려하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만행이다. 어디 이뿐인가, 인근 시민들이 밤낮으로 겪을 헬기 소음과 상·하수관 등의 기간시설관리는 어찌할 것인가.

용산미군기지는 89년 이전에 이전하기로 합의한 곳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무성의한 태도와 과도한 이전비용요구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미군기지는 이전이 아니라 철거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전하면 이전 한 곳의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인 권은 물론, 환경파괴와 미군범죄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미 용산구청장은 용산미군기지내 지하 1층, 지상 6층의 호텔과 주차장을 관할 관청과 합의하지 않는 불법건축행위로 적발하고 철거를 촉구했고, 미군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해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이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도 없는 임의 신·증축으로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문화공보부는 물론, 서울시도 주한미군의 어처구니없는 고수부지 이전 통보에 대해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해야만 한다. 또한 시민단체 역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만 한다.

## SOFA개정 없이 문제해결 안돼

주한미군의 비상식적인 통보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기인한다. 미군이 원하는 곳이면 육·해·공 어디든지 하여 해야하는 조항(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 제31조)과 기지와 시설 사용에 대한 무상 영구적 권한(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용산미군기지를 반환 받으려면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고수부지 이전을 통해 드러났듯이 미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의 편리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 다시금 만천하에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평등한 소파로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어떤 통보를 할지 모른다.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쉼표를 박아야 한다.

불평등한 소파 개정만이 주한미군의 오만방자한 통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개정합시다! 불평등한 소파!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22일(화)

제 155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아들아, 내가 풀어주마”

### 투쟁에 나선 김태완씨 어머니

“아들에게 준법서약서를 쓰라고 했지만 막상 준법서약서를 썼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나와 우리 아들이 정말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수배자가 된 아들(김태완)의 얘기를 꺼내던 이명자(61)씨는 아들 걱정에 눈물을 삼켰다(관련기사 본지 2월 2일

자 참조). 막내아들이 94년 홍익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 되었을 때부터 지난 6년동안 단 하루도 단잠을 못 잤다는 어머니. 그는 아들을 통해 ‘양심수’를 알게된 후 전국을 누비며 양심수 석방운동의 뜻을 피우기도 했다. 97년 8월 아들이 수배생활 4년만에 구속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 것만으로 감사했다. 그러나 1년만에 준법서약서를 쓰고 가 석방되었을 땐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다. 결국 출소 후 준법서약서 작성에 괴로워하던 아들은 병동성당에서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고, 그런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서울과 전남 보성을 오가며 밀반찬을 챙겼다. 경찰들이 가족들을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사위의 직장까지 찾아가 농성을 중지시키라는 등, 협박에 소란을 피우기도 했지만, 그것이 어머니와 아들의 길을 막진 못했다.

“생일날 따뜻한 미역국 한 번 끓여주는 게 소원이 되버렸다”는 어머니는 요즘 아들의 억울한 수배를 풀기 위해 또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 법원에 가 석방취소에 대한 적법성을 묻기로 했으며 청와대 등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국내외 인권단체에 현 정부의 잘못을 알려내기로 했다. 이명자 씨는 말한다. “정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 미군 살인범죄 계속되는데...

### 한미행협 벽 뚫고 사건 처리될지 미지수

지난해 동두천에서 2건의 미군관련 살인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외국인전용 주점에서 일하는 또 한 명의 여성이 미군에 의해 살해됐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미군이 미8군 범죄수사대에 의해 체포됐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소파)의 개정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뉴아미존 주점에서 일하던 김아무개(32) 씨가 은몸에 타박상을 입은 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 경찰은 21일 “용의자 메카터 상병이 미군 범죄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권 행사 어려워

경찰은 이어 “미군 수사대로부터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사건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볼 일이다.

우선 용의자의 신병확보는 미군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바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신아무개 씨 살인사건은 용의자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이 ‘용의자의 부대와 이름, 계급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며 용의자 수색조처 거부해 미결사건으로 남게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설령 미군이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처벌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파 22조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한국정부는 그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해야 하며,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요청만 있으면 형기가 만료되지 않아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 주요공판안내

▶ 2월 23일(수)  
이태영(경기동부연합 의장) 등 5명 - 오전 10시, 성남지원 2호, 신진  
:99년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푸른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월 24일(목)  
이철용 씨 손해배상소송 -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429호, 속행  
:97년 5월 한총련 출범식이 열릴 당시, 서울 신당동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한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시 목격자 가운데 한 사람의 증인신문 진행 예정.

인 권 시 평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짧은생각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평소 우리 사회 인권문제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으면서 유독 북한 인권문제만을 극성스럽게 밝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단체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물론 나는 그런 '사상검증'을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기아사태와 탈북 난민의 규모가 심각해지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과거 독재정권에 빌붙던 극우세력만의 것이 아니다.

탈북자들은 70년대만 해도 북한이 "잘 살았"으며, "인민들은 체제의 도덕성에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런 북한이 못갈게 되고 긍지에 금이가기 시작하는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라고 추정된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한 오랜 봉쇄의 괴로움을 허리띠 졸라매며 견뎌야 했다. 특히 1990년을 전후한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붕괴는 사회주의 세계경제에 의존하던 북한을 결정적인 고립상태로 몰아넣었다. 1991-2년에 중국이나 소련과의 특혜무역이 중단됨과 동시에 여러 사회주의국가에 산재해 있던 북한 수출품 시장도 사라져버렸다. 석유 수입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공장들은 조업을 중지했으며 1995년에는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겪었다. 대략 이와 같은 사정이 오늘의 북한 인권문제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권운동 그 자체는 특정한 정치세력의 목적에 봉사하지 않지만 특정한 인권현상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정치현상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 북한의 일그러진 인권상황은 분명 비판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황포를 일삼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북한에 대하여 가하는 압박을 인식함이 없이 '보편적 인권'을 앞세우면서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인권운동은 자칫 미국을 위한 정치선전으로 전락하기가 쉬울 것이다.

물론 나는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운동가이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는 마땅히 '보편' 속에 숨어 있는 함정을 항상 눈 부릅뜨고 경계해야 한다고 믿는다. 2차대전 이후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생각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인류는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을 받음이 없이 다른 나라 인권문제를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편적 인권'은 적대적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구실을 놓게 된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권운동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도와준다'는 관점이 없는 모든 북한 인권문제 비판은 정치선전, 우리 사회 인권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싶거나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은 정치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북한(민중)을 도와주기 위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싶다. 그러나 나의 이 소망은 바로 나에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1. 호만방자, 눈뜨고 못보겠군!**  
- 이태원에 있는 외국인 술집의 여종업원 김 아무개 씨가 20대 미군백인과 함께 있다 살해돼 (2/19) 경찰은 이 미군을 범인으로 보고 추적중이나 살해현장을 보존 조치 하지 않아 무성의한 수사라는 비난 초래  
-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기지내 미군 헬기장을 한강 이촌동 고수부지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문화관광부에 통보 (2/14) 하자 시민사회단체는 "안아무인한 태도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와 정부에 항의서한 발송하는 등 적극적 대응 모색에 나서.  
- 경기도 매량리 미군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자 시민사회단체가 본격적인 매량리 연대를 선언하고 매량리에서 집회 개최 (2/16)
- 2. 흐르기 힘든 편견의 벽**  
- 시각장애인 황선경 씨의 편입학 원서접수를 거부한 청주대학교가 사회적 비난에 못이겨 황 씨의 지원을 허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입학 후 어떠한 지원요청 없겠다"는 각서를 편입학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2/14) / 한쪽 눈을 실명했다는 이유로 입학 불가 결정을 받은 김훈태 씨 역시 서울교대를 장애인교육진흥법 위반으로 고소 (2/16)
- 3. 대물림되는 이주노동자 설움**  
-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학교 입학할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2/16) ...교육부, "타국민까지 우리가 책임져야하냐"며 책임회피해
- 4. 사찰 중단 약속? 그렇다면 도청도 그만하시지**  
- 경찰이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의 불법농성을 기도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사자 서울시경이 사과를 표명하며 책임자 징계와 경찰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약속 (2/17)
- 5. 사교육 부담 언제까지 방치할까?**  
-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불법학원 수강 및 개인과외를 제외한 가구당 교육비가 한해 1백74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연간 25조원 정도 (2/15)
- 6. "속 구린 법무부, 법정에서 한판 물자"**  
- 보안관찰대상자 김삼석 씨,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보안관찰대상자 인원수와 결정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라며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2/17)
- 7. 민주화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겠다?**  
- 정부가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부활시키려 하자 교수들이 반발해 (2/16)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전·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23일(수)

제 156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철도노동자 53년의 숙원

직선제 대표선출, 노조와 노동자 대립

"대표는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다!" 노조대표를 직선제로 선출하려는 노동자들이 간선 대표제를 고수하려는 노조와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투쟁은 지난 53년간 간선제를 통해 지속되어 온 철도노조 방향성을 가름짓는 투쟁이어서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3중 간선제를 통한 철도노조의 대표자 선출은 불법"이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노조의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대표 황영호, 공투본)를 건설하고 '직선제 노조대표 선출과 총회 개척을 위한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14일 현재 철도노동자 2만5천여명 중 1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황이지만, 노조는 회칙에 총회규정이 없다며 총회개척을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오는 24일과 25일 대의원 대회를 소집해 차기 대의원과 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어서 노동자들은 노조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강력 대응을 벌이고 있다.

53년간 계속된 100% 지지?

공투본의 이정순(수색기관차 승무지부 부지부장) 대변인은 "간선제를 통해 선출된 노조대표들은 사측에 의해 조종되는 어용노조였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는 철저히 뒷받쳐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민주노조를 건설하고자 하는 투쟁이 계속돼왔지만 번번이 노조와 사측에 의해 무산됐다"며 "심지어 노조는 전권을 계속 잡기위해 단독후보 출마시 반대기표가 불가능한 투표용지를 사용해 100% 찬성으로 출마자가 무조건 당선하게 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지난 11일로 예정된 노조 중앙위원회를 실력으로 지지하고, 14일과 15일 노조대표의 사퇴 추수와 총회 성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17일부터는 노조 사무실(서울 용산)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 노조 사무실 주변에는 공권력이 배치된 상태다.

노조편 드는 노동부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동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공투본은 지난 14일 노동부에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노조대표가 임의로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서를 냈다. 또한 노조가 무효화된 만큼, 총회를 통한 새 대표 선출과 회칙개정이 요구된다며 노동부에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분노한 노동자들은 22일 노동부를 항의방문 했다. 노동자들은 오늘 용산역에서 집회를 갖고, 노조가 대의원대회를 강행할 경우 이를 실력으로 지지하고 광범위한 노조 불복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새로 나온 책

「평화와 인권」 합본 1호

2000/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펴냄/ 739쪽/ 3만원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운동의 투사가 되고 소외된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갈려있는 양심수에게는 위안의 벗이 되어주며 잘못된 정책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꿈꿨던 세상을 일깨우니 너는 이 땅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구나" 전북에서 일하는 한 운동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 문규현)가 매주 발행하는 인권신문 「평화와 인권」을 이렇게 표현했다. 지난 6년여간 인권침해의 현장을 교발하며 고된 길 마다 안고 달려온 「평화와 인권」이 한권의 책으로 출판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지난 94년 12월부터 발행된 「평화와 인권」을 모아 합본 1호를 발간한 것. 중간에 유실된 7개 호를 제외하고 준비호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행된 지령 177호까지 묶여 있는 「평화와 인권」 합본 1호에는 지난 5년 6개월동안 전북지역에서 일어난 인권소식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도내의 살아있는 '인권 역사서'라 불릴만하다. 「평화와 인권」은 요즘 새로운 매체로 거듭나기 위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현재 A4 네쪽짜리 팩스신문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지면을 확대하고 전문성과 대중성을 조화시킨 모습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것. 지역운동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인권문제를 중심에 놓고 특특히 제 몫을 해내고 있는 「평화와 인권」. 이 신문에 거는 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 구입문의 0652-231-9331)

### 작은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거센 반발에 정부, 통폐합 대상 축소

'작은학교를지키는사람들(대표 장호순)'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YMCA 2층 대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통폐합 현황 보고와 농어촌교육특별법 서명운동 추진 현황 등을 발표한다.

지난 한해 정부는 "소규모 학교가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1백명 이하 작은학교의 통폐합을 시도해 무려 8백여곳의 작은학교가 통폐합됐다. 그러나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며 지난 5월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학교를지키는사람들'이란 단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농어촌작은학교살리기운동본부'와 함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통폐합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이끌기도 했으며, 통폐합 대상 학교를 찾아 강연과 문화행사 등을 갖고 있다. 이 단체에는 현재까지 60여곳 작은학교 학부모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작년 한해 8백곳의 학교가 사라져

이런 결과 지난해 교육부의 통폐합이 보류된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도 경기도와 충청도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통폐합 대상은 66개교였으나 5개교만 통폐합되었고, 충남도 141개 학교를 통폐합할 예정이었으나 44개 학교에 그쳤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중 본교가 폐교된 곳은 2백68개교, 본교가 폐교된 곳은 3백16개교, 본교가 분교로 격하된 곳은 2백개교에 이른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본교폐지 10개교, 분교폐지 7개교, 분교장 격하가 26개교로 총 8백27개의 작은학교가 통폐합됐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2천55개에 이르는 작은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작은학교를지키는사람들의 권연주 간사는 "올해 봄학기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해 통폐합이 자제되고 있지만, 가을학기부터는 또다시 통폐

합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권 간사는 "교육부는 지난 18일 면담 도중 통폐합 대상을 1백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하향조정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연연하는 학생수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 자체가 지역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 작은학교를지키는사람들은 회원학교 학생들의 글과 그림'을 수집해 '우리들의 작은학교'라는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운동본부와 함께 학교폐교시 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담은 '농어촌지역교육특별법' 제정운동에 매진할 계획이어서 이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 동티모르, 고통을 넘은 재건 6개월간 7백명 사망, 10만의 난민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부터 벗어난 지 5개월, 동티모르인들에게 드리운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대량학살의 공포는 가셨지만, 질병, 난민들의 귀환 문제 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티모르의 한 난민캠프는 지난 여섯달 동안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7백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대부분 아동과 임신한 여성들로, 위기 동안 난민캠프가 자주 침수하면서 발생한 여러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십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아직 동티모르로 돌아가지 못하

고 있다. 게다가 지난 21일 동티모르와 서티모르의 국경지대에서는 예기치 않은 투석전에 인도네시아 군의 공포탄 발사까지 이어져 걱정을 더해주었다.

하지만 오랜 고통의 역사를 극복하는 일들도 한창이다. 우선적으로 손에 꼽히는 것은 책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티모르 주민투표 이후 일어난 온갖 잔학 행위의 책임자들에게 대해 3개월 이내에 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전범재판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직후에 발표된 것이다. 앞서 동티모르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위관도 국방장관도 전적으로 해임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 다국적군의 철수가 완료되는 이번 주말 경부터는 유엔 과도 정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과도 정부는 앞으로 약 3년 동안 동티모르가 완전한 독립에 이르는 과정을 감독하면서 평화 유지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한국인 작은 정성모아

한편 국내에서는 동티모르 문제가 어느새 잊혀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주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동티모르 지원단체인 티모르 에이드에 성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성금은 대학살 이후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동티모르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조금씩 모아온 것으로, 총 1백1만1천470원이다. 국제민주연대의 최재훈 씨는 "모금액이 너무 적어 안타깝다. 하지만 동티모르인들이 폐허로부터 희망을 가꾸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바램을 밝혔다.

작지만 감동이 전해지는 한권의 책  
'인권과 평화' 이야기를 생생하게 엮은 격월간 인권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구독문의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민주연대로 (02-3676-5808)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24일(목)

제 156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비전향장기수 51명 복송요구

### 인도적·인권적 접근, 민족화해의 단초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복송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형 복송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얼마 남지 않은 여성... 민족화해와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다."

23일 오후 2시 종로 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복송을 요구하는 비전향장기수 51명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권오현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비전향

장기수들은 크게 제네바조약 4조에 따른 전쟁포로와 구속된 소속지역 거주지에 따른 송환요구자로 분류된다"며 "이들은 부당한 장기구금, 정치적 신념유지, 보안관찰법의 규제, 가족과 거소지가 북쪽, 자유의사에 따른 귀향의지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복송이유에 대해 "비전향장기수들을 가족과 고향으로 보내려는 인도주의적 정신"과 함께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전쟁포로에 대한

## 이인모 씨 복송 7년 지났지만...

### 전쟁포로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젠 병마까지

중군기자 출신 이인모 씨가 전쟁포로임을 주장하며 정전협정과 제네바조약 정신에 따라 원칙적 송환을 주장해 복송된 지도 벌써 7년.

이후 김인서(1929년생, 평남덕원), 함세환(1932년생, 황해도 웅진), 김영태(1930년생, 평북정주)씨 등도 모두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송환을 호소하고 있다.

김인서 씨 등은 모두 전형적인 전쟁포로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으로서 빨치산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지만 부당하게 군법회의에 넘겨졌으며, 대통령 긴급명령 1호와 국방경비법 등의 위반혐의로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형기가 20년으로 감형된 후 만기출소한 김 씨 등은 '비전향'이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법'에 묶여 감호처분을 받아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 34년의 옥고를 치렀다. 현재 김인서 씨는 뇌혈전 등으로 쓰러져 오른쪽 전신이 마비됐고, 발음과 사고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말 손성모·신광수 씨 등이 형집행정지로 출소하면서 감옥안의 비전향장기수는 더 이상 없지만, 이들은 모두 30년에서 40년의 긴 감옥생활로 70에서 90살에 이르는 고령이다. 투병중인 비전향장기수 출신으로는 이종(90, 고혈압, 당뇨, 관절염), 류한욱(90, 뇌졸중, 반신불수), 김중호(88, 중풍), 김석형(87, 고혈압, 요통), 신인영(72, 골수암), 정순덕(뇌출혈) 씨 등이 있다. 민기협에 의하면 89년 이후 거소지가 파악된 비전향장기수 사망자는 지난해 12월 고 최남규 씨를 비롯해 총 21명이다.

제네바조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적의와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시했다.

#### 상호주의 극복해야

토론에 나선 신준영(월간 말지)기자는 "송환반대자들은 주로 전쟁포로나 납북자 등의 맞교환을 내세워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비전향장기수 대부분이 전쟁포로로 제네바조약에 따라 복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한은 이미 8만명의 포로를 휴전협정에 풀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신 기자는 "진정한 상호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파전한 공작원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전제인데 남쪽에서는 비전향장기수들로 남파간첩의 존재가 확인됐지만, 북쪽으로 간 남쪽 공작원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가능한 송환을 전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협상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민화협에서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결과 장기수 석방에 대해서는 77.3%가 잘했다는 평가를 보였고, 잘못했다는 평가는 13%에 그쳤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에 대해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복송을 주장하는 의견이 51.8%나 됐고, 조건 없이 복송해야 한다는 의견은 28.1%로 나타났으며, 송환반대 의견은 7.7%로 나타났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지난 93년 이인모 씨가 복송된 직후 전쟁포로출신인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씨의 복송요구로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 27일 민기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25개 인권·종교·사회단체는 송환의사가 있는 모든 비전향장기수들의 '조건 없는 송환'을 주장하며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상임대표 권오현, 김재열, 문규현, 이명남)를 결성했다.

### 세계노동자공개포럼 참가기

## '시애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차미경(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지난 해 11월 전 세계에서 모인 사회 운동가들의 세계무역기구(WTO) 반대 행동으로 미국에서 열린 시애틀 WTO 뉴라운드 각료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각 나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싹트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한 국제 회의가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전 세계 70여 개 국가 500명의 노동운동가, 사회운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채택한 의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세계노동자공개포럼(OpenWorldConferece of workers)'이었으며, 이는 노동자들만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공유 속에서 포럼은 시작되었다.

###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적 권리

각 나라 참가자들은 자국의 사회현실, 빈곤과 차별의 문제, 노동운동의 현황 등을 발표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의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자유주의로 인해 점점 황폐해지는 민중의 현실을 지적하며 신자유주의의 강화가 노동자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민주적 권리와 인간다운 삶의 질마저도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연대를 강조하였다.

각 나라의 대표 발표내용 중 참가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역시 미국의 상황이었다. 단지 회의가 미국에서 열린 때문은 아니다. 미국이 WTO를 주도하며 시장개방정책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전 세계의 운동가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다수의 시민들은 경제호황의 혜택을 누리며 젖고 꿀이 흐르는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참석한 미국 노동자들의 상황을 들여보면 뭔가 이상하다. 경제호황 아래에서 노동자들을 비롯한 미국의 민중들은 행복할까? 대답은 한 마디로 No이다.

### 미국 노동자에게 호황은 없다

멕시코, 브라질, 아시아, 유럽의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고용 불안정의 심화 △의료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후퇴 △단체인성권, 파업권 등 노동자의 권리 후퇴 △실질임금의 하락 문제 등은 미국의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로 지적되었다.

미국 경제가 역사상 가장 긴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허탈감과 박탈감이 하나의 목소리로 터져 나온 배경에 대해 미국 노동당(Labour Party)의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데이비드 윌터스(43)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경제호황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계급이 호황인 것은 아니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 경제성장률에 비해 오히려 실질임금은 15%가량 떨어졌고 고용 불안정도 심화됐다. 뿐만 아니라 날로 점점 증가되고 있는 임시직, 계약직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장력은 상당히 약하다. 특히 미국이 주도한 나프타 협정 이후 미국 내에 중남미에서 흘러들어온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지만 이들의 노동인권상황은 개발도상국가보다도 열악한 실정이다. 경제호황으로 덕을 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IMF와 미국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80:20의 사회'의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 인권·여성 등 다양한 의제 결의

이번 세계노동자공개포럼에서는 미국 노동자들이 국제연대를 호소할 때

마다 즉각적인 행동연대를 결의하였고, 미국정부에 보내는 항의서한, 지지서한을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포럼의 공식의제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적 권리'였지만, 노동자들이 주동적으로 인권·여성·환경·평화 등 다양한 의제를 국제연대의 주요 사안으로 결의한 점은 이번 회의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의 성과를 이후 국제연대 활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각 참가자들은 △세계무역기구 해체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국제노동기준 준수 및 강화 △자주적인 노조건설 △여성차별, 인종차별, 전쟁반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결의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연대기구(ILC)가 국제연대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함께 결의하였다.

### '늘 처음처럼'

이번 포럼에 참가한 국내의 운동가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 한번의 회의로 무엇이 바뀌겠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이 당장에 달라져야 할 것 같은 초조감을 털어버리는 일이다. 이미 우리의 현실이 그 명백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80:20의 사회'의 불안감 속에서도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중한 결의가 전 세계 곳곳에서 물결처럼 흐른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희망의 상징이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주친 수많은 거리의 부랑아, 실업자들... 먹구름으로 흐린 하늘이 답답한 세계화의 현실이라면 한국에서 함께 참석한 활동가들이 눈과 마음으로 다진 '늘 처음처럼'의 각오는 우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주제와 현실에 대한 답담함을 거두어준 무지개였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25일(금)

제 156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해야"

### 형사정책연구원, 불법검문 개선방안 제시

형사정책연구원이 24일 불법검문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불법 부당한 불법검문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7월 8일부터 열흘 간 4백97명의 직장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불법검문 실태조사를 벌인 형사정책연구원은 24일 「불법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펴내고 "경찰관들이 법규정상의 한계를 벗어난 직무행위를 아무런 위법의식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불법검문의 주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 적법절차 철저히 무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1.9%가 불법검문시 경찰관의 신분, 소속, 이름 등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7.5%는 검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한 채 검문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의동행 요건을 무시당한 채 경찰서로 강제 동행된 경우가 70%, 동행 목적과 장소에 대해 가족에게 연락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68.4%, 변호권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경우도 7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검문에 협조한 이유로는 "경찰과 실랑이를 하기 귀찮아서"가 55.9%로 가장 많았고, 비협조적이었던 이유로는 응답자의 44.3%가 "질책을 무시한 불법 부당한 불법검문이었기"라고 답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경찰관지무집행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경찰의 적법절차 준수사항 대부분이 불법검문 현장에

서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소지품 검사 위법"

검문 운영실태 가운데엔 특히 소지품 검사와 자동차검문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경찰이 흥기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소지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검문도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간섭은 큰 데 비해 실제 범죄에 방호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며 "검문소를 통하거나 불시에 행해지는 검문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어떠한 입증자료도 찾아보기 힘든데다, 잦은 검문은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역효과만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시민저항 필수적"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불법검문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인권의식과 저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귀찮다는 이유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이라며 "명백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불법행위가 행해질 경우 경찰에 저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은 경찰과 법원의 변화된 자세도 촉구했다. 우선 "불법부당한 불법검문을 행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은 시민의 권리 존중 차원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도 형사처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법한 불법검문에 의해 얻은 증거로 수사가 개시돼 기소된 경우엔 모든 증거에 대해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승소금액이 너무 작은 편"이라며 "손해배상액을 1백~3백만원 정도가 아닌 1천만원~3천만원 정도로 늘려 누구라도 경찰의 위법한 불법검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교대, 장애인입학 허가 장애인 교육권 대책 마련 시급

〈속보〉 서울교대가 신체검사에서 탈락시켰던 시각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했다(본지 2월 15일자 참조).

서울교대는 이 학교에 지원한 김훈태 씨가 한쪽 시력이 전맹이라는 이유(모집요강 기준 양안교정시력 0.4)로 불합격처리했으나, 여론의 비난이 일자 24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전체 교수회의의 논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김훈태 씨 등의 사례를 접하면서 각 대학 모집요강에 불합리한 장애인차별 규정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각 대학의 모집요강은 ▲대부분 '제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장애인'이라는 식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은 상담실에서 사전면접을 거쳐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담고 있는 등 원서지원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 철도노조 민주화 힘난 현 노조측 청년들 폭력사태 유발

직선제에 의한 노조결성을 주장하며 농성중인 철도 노동자들의 민주화 노력이 고난을 겪고 있다. <본지 2월 23일자 참조>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경 노조간부들과 피청년 30여 명은 용산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농성중인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노동자 20여 명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날 폭력사태로 인해 이병은(서울 차량조합원) 씨가 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강남성심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최영선(구로차량조합원) 씨 등 6명도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또한 취재를 나온 기자들 중 한국일보 기자도 조합원으로 오해를 받아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투본의 윤해영 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초록색 조끼를 입은 철도 청년단이라는 괴짜조직에 이영구 조직국장과 임승세, 이길병 씨 등 노조측 사람들도 있었다"며 "당시 한국노총 조직국장이 현장에 나와 있는 등 철도 청년단과 노총의 관계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홍보국 이상연 씨는 "노총이 철도노조의 상급조직이

지만 이번 폭력사태와는 무관하다"며 "폭력사태라고 하지만 작은 충돌이었을 뿐이며, 공투본이 노조사무실을 차지하고 농성을 시작했을 때 이 정도의 충돌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노조가 어용이라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겠냐"며 "언론이 한쪽의 주장만을 보도해 자칫 노노분열의 사태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24일 '철도노조사수'라는 명목으로 산하조직 5백40여명의 동원령을 내려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이상연 씨는 "민주노총 관련자들이 농성장에 들어와 공투본에 깊이 개입하고 있어 조직정비 차원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투본은 한국노총을 향의방문하고 "철도노조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직운영에 대해 한국노총이 조직행동대를 동원해 공격한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더구나 대의원선거에 개입하고 산하조직 동원령까지 내린 것은 70년대의 어용노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노조측은 예정대로 24일 대의원선거를 강행했고, 몇몇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투본에 의하면 서울과 부산에서는 대의원입후보자 등록장소마저 공지하지 않았으며, 부산지역과 부산전기지역에서는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공개투표를 시행해 말썽을 빚었다. 이에 공투본은 "규약개정 없는 선거강행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단독입후보자 지역인 서울열차 지부와 청량리역 등지에서는 반대 표시가 불가능한 투표용지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선거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측은 "직선제에 의한 대의원선거는 불법"이 아니라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노조집행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어 공투본과 해결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 '교육개혁 실종' 비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교육부가 지난 2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데 대해 2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개혁을 실종시킨 시행령 개정안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위원의 선출권을 사학법인에 넘기고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심의를 회피하거나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시행령 제60조의 적용대상에서 사립학교를 제외했으며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의 정관에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계약된 시행령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기구로 만든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오로지 법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어 "사학의 운영위원들이 국공립과 똑같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권을 갖도록 한 것은 부패한 교육관료와 부패한 사학경영자들 사이의 야합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26일(토)

제 156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 네티즌 미군 비난 쇄도

### 한국정부 저자세도 비난

"대한민국은 미군에게 몸을 파는 창녀다." (ID cesil91)

지난 19일 미군전용 술집에서 일하던 김아무개(32) 씨가 미군상병 메카시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한국정부가 메카시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되

자 컴퓨터 통신의 4대 통신망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들이 속출하고 있다.

김 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 통신인들은 "미군에 의해 한국여성이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한국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미군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무능함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경훈 씨는 하이텔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한국정부가 자국민 하나 보호하지 못한 채 미군의 길들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ID가 '진심으로'인 한 통신인 역시 "언제까지 미군같은 강패집단이 우리나라에서 설치해 내버려두어야 하나"며 "제발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만큼은 우리나라 잣대로 공정하게 처벌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미군에 대한 재판권 3% 불과

미국을 비난하는 글 역시 쇄도했다. 성기우(ID garden94, 나우누리) 씨는 "미군에 의해 한국인 여성이 살해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입장을 바꿔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여성에게 변태행위를 요구하다 그에 불응하자 살인했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고 되묻고 "미군한테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부분의 통신인들은 불평등한 SOFA로 인해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성기우(ID garden94) 씨는 "67년부터 93년까지 주한미군의 범죄건수는 4만7천여건에 달하지만 우리측이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1%에 불과했으며, 이마저 많이 줄어 98년도에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은 3%정도"라며 "SOFA가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주왕'을 ID로 사용하는 손 아무개 씨도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며 분개한 마음을 토하고 "불평등한 SOFA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죽음과 관련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메카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SOFA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20여개 사회단체 회원 1백50여명은 25일 낮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메카시 상병의 신병인도를 강력히 촉구했다.

##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제조사 3명이 법정에서 흥기를 휘두르며 탈주한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이리저리러 대책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한심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도·강간·살인범 등 이른바 '흉악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채울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마에 오른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재판장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는 형사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수갑과 포승에 묶여 있을 경우, 인간적인 수치심과 위축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방어(변론)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권보호 조항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의 요청만으로도' 계구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오랜 투쟁 끝에 어렵게 확보된 피의자의 인권을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 법무부는 탈주사건이 '법정에서 수갑을 풀려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원인은 명백히 '낡은 계호시스템'에 있다. 알려진 바대로, 탈주자들은 교도소를 나서면서 거쳐야 하는 단층촬영 검신대와 몸수색 과정을 아무 탈없이 통과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오히려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은 행정당국의 잘못을 전 제조자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일 뿐이다.

법무부는 또 관련 교도관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한다. 관련 교도관들에 대한 문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급 교도관 몇 명을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사태가 수습될 수는 없다. 교도관의 증원이나 교도관 복무여건의 향상, 그리고 과학적인 계호장비의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올랄라? 정답이 ④번이래요~ 웃는 나라죠?

#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최근 일본 정부가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려고 해 야당과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 연립정부는 2002년 8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전면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가 주민들에게 고유번호를 지정하며 지자체는 전자주민카드를 위해 출생년월일, 본적, 보험과 연금내역과 같은 총 13개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이 원할 경우 주민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을 방문중인 타카시 시라이시(프라이버시액션 대표) 씨는 "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커다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의 법령은 임의적인 발급신청과 소지의무를 두고있지만 일단 카드가 발급된 후에는 내용과 형식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전자주민카드도입은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악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정안에 대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사생활보호 운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와 일본변호사연합, 소비자운동, 부락해방동맹, 일부 노조 등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반대하며 '국민총등번호제반대공동행동의회'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시라이시 씨는 "아직 일본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한국에서 활발히 진행됐던 전자주민카드반대운동과 지분날인

### ◎바로잡습니다◎

2월 25일자 2면의 '철도노조' 관련 기사 중 "철도노조의 비민주적이고..."를 "한국노총이 철도노조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직운동을 지지하고, 조직행동대를 동원해 공무원들을 공격한 것은..."으로 바로잡습니다.

반대운동의 전례를 거울삼아 통제사회의 위험성을 알려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증 제도는 없다.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사용되며, 국민의 출생과 주소지, 사망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적과 주민표로 관리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일본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5년전에도 일본정부가 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하려다 노조와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된 경험이 있다.

### 준법투쟁하자 직장폐쇄

경주문화회관노조 상경 13일째

지난 23일 여의도에서는 민주관광연맹 소속 경주문화회관 노조와 맨하탄 호텔 노조원들이 원직복직 문제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대한교원공제회관 로비로 진입하던 중 경찰에 의해 조합원들이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집회신고가 안된 로비진입은 불법이라며 연행자들을 불구속

입건 또는 즉심 등으로 처리했다.

이날 사건의 배경엔 대한교원공제회관측의 노조탄압이 자리잡고 있다. 노동조건의 악화와 박봉에 시달리던 경주문화회관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에 나섰다. 사측은 노조위원장 등 7명을 해고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후 노조원들이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이자 지난 1월 7일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대응했다.

경주문화회관의 여성성 여성부장은 "장기실업과 인턴제도 때문에 정식직원이 되려면 3, 4년이 걸리고,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로는 연·월차 수당과 야간수당도 지급되지 않은 채 65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며 "교원연수가 있을 때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자정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요일이나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연수일정에 맞춰 일해야 했다"고 밝혔다. 여 부장은 "마지막 열쇠를 쥐고있는 것은 경주문화회관의 모회사인 대한교원공제회관"이라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경주에 내려가지 않을 결심으로 올라왔다"고 한다. 경주문화회관은 대한교원공제회관의 출자회사로 비영리업체며 교원들의 연수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경주문화회관의 대표이사는 3년을 임기로 대한교원공제회관에서 발령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어 노조는 직장폐쇄의 책임을 대한교원공제회관에 묻고있는 것이다.

### 행사와 동정

- **상당저기 자원활동가 모집**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인권센터 (문의: 김세현 02-521-5364)
-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진·비디오강습**  
· 기간: 3월 6일-6월 2일  
· 주최: 청음회관/ 담당 백운국(02-556-3493, 팩스 02-555-4241)
- **4.13 총선보도와 신문개혁 토론회**  
· 때: 3월 2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 주최: KNCC교회와사회(언론)위원회 등 (02-742-8981)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창립총회**  
· 때: 2월 26일(토) 오후 2시 ·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층 한우리교회  
· 문의: 02-3676-5808
- **'과학기술과 인권' 토론회**  
· 때: 2월 26일(토) 오후 3시 ·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 주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문의: 723-4255)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2월 29일(화)

제 1564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 봉천동화재로 학생들 연행

### 경찰, 뚜렷한 증거 없이 학생들에 혐의 뒤

제개발지역 철거구역들의 숙소에 불이 나자 경찰이 특별한 증거없이 대학생들을 무더기로 연행 조사해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있다.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서울 봉천 3동 제개발지역내 사회복지관에 불이 나 잠을 자고 있던 굴착기 기사 최용대(27)씨가 온몸에 3도의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이다. 이날 화재에 대해 함께 있던 다원 소속 용역들은 화염병 3, 4개가 날아 들어와 불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원 소속 용역원들은 지난해 5월부터 사회복지관에서 숙식하며 상주해왔다.

이에 경찰은 평소 용역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철거민과 학생들을 용역자로 보고 주민 김삼초(전철대위위원장)씨와 학생 5명을 연행해 조사중이다.

그러나 봉천동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정철 씨는 "최근 용역들과 격렬한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철대위 사무실이나 주민 집에서 화염병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공연히 사람만 잡아갔다"며 "김 씨는 평소 술을 마시고 집에 빈병을 쌓아두는 버릇이 있는데 그 빈병을 증거물로 쌓아두는 버릇이 있는데 그 빈병을 증거물로 삼는 것이 말이 되냐"며 분개했다. 주민 이영숙씨도 "평소 사회복지관에서 숙식하지 않던 사람이 그날 현장에 있던 것과 철거시한이 1개월 정도 남은 것 등은 용역들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화재원인과 관련이 없는 석파이프 소지를 문제삼아 주민과 학생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도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연행됐다가 훈방으로 풀려난 학생들의 주장도 경찰이 무리

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영훈(서울대입학예정·27) 씨는 경찰이 "김삼초가 범인인 줄 다 안다. 김 씨 혼자 하기는 어렵고, 학생들이 공범 아니냐"며 조서작성을 종용했고, "증거물로 화염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연행된 학생들은 빈민활동을 나간 98, 99학번으로 화염병을 구경조차 못해본 학번"이라며 "경찰의 주장대로 학생이나 주민이 불을 질렀다면 왜 도망가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 철거폭력의 대명사, 다원

한편, 서정철 씨도 "화재발생 이후 오전 7시경 용역들이 한차례 철대위 사무실을 찾아와 주민들을 협박했으며, 오전 8시경부터 하루 종일 전투경찰 1개중대와 철거용역 수십명이 철대위 사무실을 원천봉쇄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씨는 "철대위 사무실에는 주민과 학생 등 총 19명이 함께 있었는데

데 이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였으며, 공권력이 전기마저 끊어놓았고 용역들은 밖에서 '나오기만 하면 꼬실러 죽인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의하면 용역들은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4명이 타고 온 차량의 바퀴를 펑크내고, 항의하는 이들과 주민들을 폭행했으나 주위에 있던 경찰들 중 아무도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도 주민들은 철대위 사무실외의 출입을 자제하고 있다.

다원건설은 철거폭력으로 악명이 높은 회사다. 봉천 3동의 철거과정에서도 다원건설의 김철호 소장은 오물통을 뒤집어쓰는 자해를 하고 60, 70세가 넘는 노인들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하는 대표적인 철거용역운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찰에 의해 단 한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관련기사 본지 99년 12월 1일> 지난해 11월 철거과정에서 주민 안학만 씨는 용역들에게 밟혀 콩팥이 파열됐는데, 이 부분이 얼마전 재발해 병원에 입원중이지만 치료비 70여만이 없어서 퇴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본지 99년 11월 19일>

앞으로 경찰수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주요공판안내

- 2월 29일(화)  
·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 오후 2시, 서울지법 524호, 속행  
· 지난해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를 배후조정했다는 혐의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민중대회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당시 집회 사회를 맡은 한충목 씨를 패쇄죄로 구속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 3월 2일(목)  
·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 오후 4시, 서울고법 423호, 선고  
·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죄로 구속기소됨.



인 권  
시 평

### 박하사탕, 그리고 홍자

공선옥(소설가)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문인들이 영화, 박하사탕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느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영상 운운의 선전포스터를 보고 철도원을 볼까, 여쩔까, 하다가 왜, 뭣뻬에 사람들이 그리고 박하사탕, 박하사탕, 해썬는 가, 궁금해져서 마지막 순간에 나도 박하사탕 쪽으로 기울 어졌다. 영화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다. 내가 처음부터 울 준비를 하고 봐서 었을까.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그리고 배우 설경구의 표정, 몸짓들이 시간을 거슬러 가며 보여지는 풍경들이 사람 가슴을 '애리게' 했다. 흔히 이야기 기꾼이라 하는 소설가 출신 감독이라서인가. 영화 속에는 확실히 '이야기'가 녹아 들어가 있었다. 맞다. 소설을 쓰려면 저렇게 써야 하는데, 개인과 시대를 짓누르는 아픔을, 아프더라도 해집어 보지 않고는, 그런 시도 없이 하는 소리란 '부질없는 헛소리'들일 뿐이라는 자각이 들었다.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였다.

하지만... 걸리는 게 있었다. 바로 설경구, 영화속 주인공 김영호의 아내로 나오는 김여진이 분한 홍자라는 인물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건대, 영화는 정말 좋았지만, 그래서 더이상 따지 걸 건덕지가 없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영화 속 홍자, 혹은 현실 속에 있을지도 모를 '홍자들'에 대해서 뭔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한마디쯤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영화 속에서 홍자는 철저히 윤순임이라는 여성과는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는듯이 보였다.

말하자면 김영호의 첫사랑인 윤순임이 성녀라면 현재의 아내인 홍자는 악녀라는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잣대가 그대로 투영된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었다. 누차 말하건 데 영화는 좋았지만, 내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아이엄마로서 늘상, 눈에 안보이게, 혹은 눈에 보이게 느끼는 '폭력적인 시선'이 영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이분법적 잣대란, 늘 육체적으로 '순결(?)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다. 김영호라는 인물이 시대에 대하여, 작은 가해자이자 큰 피해자로, 영화를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동정과 연민이나 불려일으킬 수 있는 인물로 그려졌다면 홍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주인공의 비극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부속장치로만 기능하다가 '아파트 문을 닫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한마디로 '나쁜 여자'로만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 김영호의 망가져 가는 삶을 바라볼 때 만큼이나 내 가슴을 '애리게' 하던 것이었다.

기실 우리의 삶은, 주인공 주변에 머물다 사라지고 만 무수한 '홍자'들에 의해, 정말,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그 어머니들에 의해 유지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커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홍자들'에게도 '인격'과 '인권'이 있다!

###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1. 범인 조사도 못하는 한국, SOFA개정 시급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이태원 미군 술집에서 살해당한 김 아무개 씨의 살해용의자로 매카시 상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지만 한국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아 한국정부의 수사가 애를 먹고 있는데...시민사회단체는 규탄집회등을 열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억울한 죽음만 늘어났다"며 SOFA개정을 촉구해 (2/21)

2. 탈주 핑계, 미결수 권력 침해  
광주교도소 미결수들이 법정에서 교도관을 칼로 찌르고 도주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홍약법은 법정에서 수감과 포승을 채울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2/24) 이에 인권단체들은 "계호상의 문제를 고치려 하기 보단 미결수에게 수감을 채울 권리만 하고 있다"며 "재판 시 수감을 채우는 등의 행위는 수치심과 위축감을 발생시켜 자기 변론을 막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다"며 반대

3. 약법, 또다시 도마에 오르다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99년 인권보고서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밝혀 (2/25)

4.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도 우리 식구'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선언하고 비정규직노조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2/21)

5. 괜찮다 하더니 못매만 날락오네  
상명고, 양천여고 등 서울소재 일부 사학재단이 전교조 등 노조활동에 참여한 교사들을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출시키고 있어 "부당전출"이라는 교사들의 반발 거세 (2/22)

6. NO! 결렬  
헌법재판소가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가능케 하고 있는 조항(99년 폐지됨)과 관련해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비디오물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 내려 (2/23)

<수치로 본 인권>  
밥 굶는 아이 서울만 1만 6천여명  
서울에 거주하는 1만5천8백75명의 어린이들이 빈곤등의 이유로 점심을 굶고 있으며 이중 1/4인 4천1백82명은 아침과 저녁마저 굶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2/22)

# 인권하루소식

2000년 3월

(제1565호 ~ 제1586호)